
2018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적 지역서비스 체계 구축 연구 :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2018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적 지역서비스 체계 구축 연구 :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발행인
양현미

발행일
2018.12.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시민교육본부장 노준석
교육나눔팀장 김소연
교육나눔팀 박수아

등록
KACES-1940-R015

ISBN
978-89-6748-307-4(93370)

문의
Tel. (02)6209-5900
Fax. (02)6209-5999
E-mail. contact@arte.or.kr
www.arte.or.kr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제출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2018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적 지역서비스 체계 구축 연구: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책임자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동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호순 대원대학교 청소년지도과 교수

윤수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민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II.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문화 향유 욕구 및 이용 현황	11
1. 문화소외계층의 개념	13
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욕구 및 이용 현황	30
III.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 및 주요쟁점 분석	75
1. 부처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77
2.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12
IV.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통합적 체계 구축 방안 분석	121
1. 사회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대상 질적 분석	123
2. 타분야 사업의 운영체계 비교 분석	140
V.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통합적 지역서비스 체계	165
1.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전달체계 개선 방안	167
2.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사항	186
참고문헌	189
부록	193

표 목차

〈표 II-1-1〉 문화소외계층 정의(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19	〈표 II-2-19〉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여부(성별, 연령별)	49
〈표 II-1-2〉 지역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단계별 지원규모	23	〈표 II-2-20〉 평생교육 노인참여자의 이용 현황(성별, 연령별)	49
〈표 II-1-3〉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별 대상자	24	〈표 II-2-21〉 노인의 지난 1년간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성별, 연령별)	50
〈표 II-1-4〉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별 대상자	25	〈표 II-2-22〉 노인복지관 이용의 주된 이유(성별, 연령별)	50
〈표 II-1-5〉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별 대상자	25	〈표 II-2-23〉 노인복지관 미이용의 주된 이유(성별, 연령별)	51
〈표 II-1-6〉 2018년 기준중위소득	27	〈표 II-2-24〉 노인의 지난 1년간 주된 문화·여가활동(수급여부, 지역별)	52
〈표 II-1-7〉 전국 시·도별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관련 사업	28	〈표 II-2-25〉 노인의 희망하는 주된 문화·여가활동 1순위(수급여부, 지역별)	53
〈표 II-2-1〉 지역별 저소득 가구 아동·청소년 현황	31	〈표 II-2-26〉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여부(수급여부, 지역별)	54
〈표 II-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가구 아동·청소년 현황	32	〈표 II-2-27〉 평생교육 노인참여자의 이용 현황(수급여부, 지역별)	55
〈표 II-2-3〉 가구특성에 따른 아동·청소년 현황	32	〈표 II-2-28〉 노인의 지난 1년간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수급여부, 지역별)	55
〈표 II-2-4〉 가구소득 및 가구특성에 따른 아동·청소년 현황	33	〈표 II-2-29〉 노인의 노인복지관 이용의 주된 이유(수급여부, 지역별)	56
〈표 II-2-5〉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	34	〈표 II-2-30〉 노인의 노인복지관 미이용의 주된 이유(수급여부, 지역별)	57
〈표 II-2-6〉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현황	34	〈표 II-2-31〉 노인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성별, 연령별)	57
〈표 II-2-7〉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수	35	〈표 II-2-32〉 노인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수급여부, 지역별)	58
〈표 II-2-8〉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급별 현황	35	〈표 II-2-33〉 장애의 종류와 특징	60
〈표 II-2-9〉 아동·청소년 취미기능교실 이용 및 필요 여부	37	〈표 II-2-3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	60
〈표 II-2-10〉 아동·청소년 문화활동 이용 및 필요 여부	38	〈표 II-2-35〉 지적장애인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등급	61
〈표 II-2-11〉 아동·청소년 특성별 문화·예술 관련 사회활동 참여율 및 참여횟수	39	〈표 II-2-36〉 자폐성 장애의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62
〈표 II-2-12〉 지역별 노인 인구 비율	42	〈표 II-2-37〉 연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62
〈표 II-2-13〉 노인 인구의 성별 현황	43	〈표 II-2-38〉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63
〈표 II-2-14〉 만65세 이상 노인 가구 현황	44	〈표 II-2-39〉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	63
〈표 II-2-15〉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44	〈표 II-2-40〉 장애등급 및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	64
〈표 II-2-16〉 노인의 문화·여가활동 분석대상자 일반 현황	46	〈표 II-2-41〉 시도별 등록장애인 현황(2016년 말 기준)	65
〈표 II-2-17〉 노인의 지난 1년간 주된 문화·여가활동(성별, 연령별)	47	〈표 II-2-42〉 장애인 가구 소득 실태	66
〈표 II-2-18〉 노인의 희망하는 주된 문화·여가활동 1순위(성별, 연령별)	48	〈표 II-2-43〉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율	67
		〈표 II-2-44〉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68
		〈표 II-2-45〉 문화 및 여가활동의 불만족 주된 이유	69

〈표 II-2-46〉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70	〈표 III-1-24〉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09
〈표 II-2-47〉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70	〈표 III-2-1〉	진흥원 복지기관 지원 사업 시설 수 및 프로그램 수(2018)	112
〈표 II-2-48〉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71	〈표 III-2-2〉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07~2017년)	115
〈표 II-2-49〉	예술행사 관람시 가장 중요한 기준	72	〈표 III-2-3〉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주요사항	116
〈표 III-1-1〉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지원규모	78	〈표 III-2-4〉	노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06~2017년)	117
〈표 III-1-2〉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역할 분담	79	〈표 III-2-5〉	연도별 노인복지관 지원사업 주요사항	118
〈표 III-1-3〉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지원규모	80	〈표 III-2-6〉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06~2017년)	118
〈표 III-1-4〉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추진방법	81	〈표 III-2-7〉	연도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주요사항	120
〈표 III-1-5〉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	83	〈표 IV-1-1〉	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실무자 면접조사	123
〈표 III-1-6〉	청소년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	84	〈표 IV-1-2〉	실무자 면접조사 참여 지역 현황	124
〈표 III-1-7〉	청소년지원센터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84	〈표 IV-1-3〉	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실무자 면접조사 참여자	124
〈표 III-1-8〉	청소년쉼터의 종류	85	〈표 IV-1-4〉	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실무자 면접조사 질의 내용	125
〈표 III-1-9〉	연도별 청소년쉼터 현황	86	〈표 IV-1-5〉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인력 현황	138
〈표 III-1-10〉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규모	91	〈표 IV-1-6〉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및 예산 규모	138
〈표 III-1-11〉	방과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역할 분담	93	〈표 IV-1-7〉	중장기적 관점의 지역 이관 가능 검토 대상 사업	139
〈표 III-1-12〉	방과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추진방법	95	〈표 IV-2-1〉	광역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담당 부서	144
〈표 III-1-13〉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 및 특성	97	〈표 IV-2-2〉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종사자 현황	145
〈표 III-1-14〉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현황	98	〈표 IV-2-3〉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현황	149
〈표 III-1-15〉	지역아동센터 우선보호아동 선정기준	99	〈표 IV-2-4〉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	150
〈표 III-1-16〉	지역아동센터 제공 서비스	100	〈표 IV-2-5〉	평생교육기관 분류	151
〈표 III-1-17〉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	101	〈표 IV-2-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유형	158
〈표 III-1-1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기준	102	〈표 IV-2-7〉	시·도 관할 행정구역 및 노인복지시설 현황(2017년)	159
〈표 III-1-19〉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	102	〈표 V-1-1〉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안)	170
〈표 III-1-20〉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103	〈표 V-1-2〉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 개선(안)	171
〈표 III-1-21〉	지역아동센터 중점프로그램	107	〈표 V-1-3〉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전체이용 아동 수 대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아동 비율	173
〈표 III-1-22〉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 현황	108	〈표 V-1-4〉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 모형별 장·단점	183
〈표 III-1-23〉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	108			

〈부표 1-1〉	노인복지시설 유형	195
〈부표 1-2〉	시·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196
〈부표 1-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	197
〈부표 1-4〉	시·도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198
〈부표 1-5〉	시·도별 장애인 이용시설 현황	199
〈부표 1-6〉	시·도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현황	200
〈부표 1-7〉	아동복지시설 유형	200
〈부표 1-8〉	시·도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201
〈부표 1-9〉	시·도 노인복지관협회	202
〈부표 1-10〉	시·도 장애인복지관협회	202
〈부표 1-11〉	시·도 아동복지협회	203
〈부표 1-12〉	시·도 사회복지관협회	203
〈부표 1-1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4

그림 목차

〈그림 I-1-1〉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5
〈그림 I-1-2〉	연구추진체계도	9
〈그림 II-1-1〉	문화육구와 소득수준을 반영한 문화소외계층 분류	19
〈그림 III-1-1〉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추진체계	79
〈그림 III-1-2〉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추진 절차	80
〈그림 III-1-3〉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비스 전달 체계	82
〈그림 III-1-4〉	청소년쉼터의 전달체계	87
〈그림 III-1-5〉	학교폭력치유센터(해맑음센터)의 위탁교육 절차	89
〈그림 III-1-6〉	방과 후 청소년의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추진체계	92
〈그림 III-1-7〉	방과 후 청소년의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추진 절차	94
〈그림 III-1-8〉	방과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추진단계	96
〈그림 III-1-9〉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및 이용 아동 수	101
〈그림 III-1-10〉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전달체계	104
〈그림 III-1-11〉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조직도	105
〈그림 III-1-12〉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조직도	106
〈그림 III-1-13〉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추진체계	110
〈그림 III-1-14〉	지역아동센터 나눔 플러스 I-ON 內 문화예술교육 신청 플랫폼	111
〈그림 III-2-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	114
〈그림 IV-2-1〉	한국 평생학습 프로그램 6진 분류표	141
〈그림 IV-2-2〉	제3차 평생교육진흥계획에 따른 전달 체계	146
〈그림 IV-2-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	147
〈그림 IV-2-4〉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형의 기본 프레임	157
〈그림 IV-2-5〉	노인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전달체계	160
〈그림 IV-2-6〉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체계	160
〈그림 IV-2-7〉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서비스 체계	161
〈그림 IV-2-8〉	돌봄·요양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지원 체계	161

〈그림 V-1-1〉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선(안)	175
〈그림 V-1-2〉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 모형1	179
〈그림 V-1-3〉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 모형2	180
〈그림 V-1-4〉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 모형3	180
〈그림 V-1-5〉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 모형4	181
〈그림 V-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 모형5	182
〈그림 V-1-7〉	장애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 모형	184
〈그림 V-1-8〉	노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 모형	185
〈그림 V-2-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188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 보편적 문화권으로서 문화예술 향유 욕구 증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문화다양성 가속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서비스 향유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문화기본법」¹⁾에서의 기본이념과도 부합하고 있는데, 동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권 확대와 문화 가치의 사회 확산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문화정책은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사회보장기본법」²⁾ 전면 개정('12.1.26)에 의해 문화와 환경 영역으로까지 사회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었고, 중앙정부의 문화 관련 정책이 사회서비스 대상으로 다수 포함되었다. 즉, 문화는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영역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반면 사회서비스 영역 내에 문화가 포함되는 것에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였다. 우선 문화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하여 빈곤이나 기타 위기와 같은 조건들과 유사한 수준의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대상이 되기에는 그 특성상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 내에 사회안전망 또는 삶의 질을 위한 서비스로 사회서비스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문화 영역은 명백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하나이다(장훈 외,

1)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중략]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생략]

2018). 또한 시민들의 ‘보편적인 문화권’ 보장 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및 교육 기회 확대가 요구되기 때문에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적은 문화소외계층은 행복추구권으로서의 문화와 교육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 관련 정책방향은 ‘문화감수성 증진’에서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그리고 ‘지역/생활문화 참여 확대’로 점차 변화되어 왔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³⁾, 「지역문화진흥법」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및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법률적 및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이 중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동 법은 모든 국민이 개인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차별 없이 전 생애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문화예술은 경험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기회가 제공 및 보장되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이외의 시설이나 기관에서 행해지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 활동지원과 부처 간 협력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과 군장병,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등 특수계층을 중심으로 점진 확장되어왔다. 무엇보다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대상은 문화 취약계층으로부터 일반 국민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지역 내 각기 성격이 다른 문화 접근 취약성을 반영하여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정책 패러다임 전환: 중앙주도→지역자율·지역분권, 분절화→통합화, 공급자→수요자 중심

문화정책과 관련한 환경 변화의 핵심은 ‘지역분권화’, ‘통합적 프로그램 제공’, ‘수요자 혹은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다. 먼저 지난 20년간 문화예술교육의 법·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최근까지 일정 수준의 사업 규모 및 예산이 확대되었으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여전히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4년부터는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지역화·내실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를 목표로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

였다(그림 I-1-1 참조). 동 종합계획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향을 ①지역분권화, ②정책 체계화, ③수요 특성화, ④융합과 확장의 네 가지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 1)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2)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3)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를 마련하였다. 이는 현재의 중앙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고려한 협력체계’로 전환하여 ‘지역의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I-1-1〉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p.11.

이를 위해서는 ‘중앙-지역 간 유기적 협력 관계망이 구축되는 체계’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즉, ‘중앙정부-광역지자체-광역재단 간 협력’과 ‘기초지자체 단위의 구심점’을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확장적 연계 및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재구조화되, 지역사회 내 허브기관을 구축하여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고자 함이다. 이는 ‘지역분권화’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생태계 구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중앙 집중 체계에서 지자체 중심의 지역분권 체계로의 패러다임 변화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보훈처와 부처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학생을 포함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각 지역에서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의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별도로 제공 중

3)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에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내에서는 개별 부처별로, 지역단위에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미온한 채 분절적으로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에서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주도의, 분절적 사업 수행보다는 유사 사업간 협력과 지역사회의 특성 및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통합적 방식의 지역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교육의 지역분권화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들이 점차 지역으로 이관되어 지역 맞춤형 사업들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역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전달 및 육성 기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문화,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를 강화하여 자율적 협업을 통해 지역단위에서 자체적인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수요 특성화에 있어서는 생애주기·사회적·지역적 여건에 따라 수요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문화예술교육도 지속적으로 문화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정책수요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는 특정 문화소외계층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화소외계층의 규모 및 수요는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할 수 있다. 지역분권화와 수요 특성화에 중점을 둔 핵심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필요
- 중앙과 지자체 간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지역 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분권 및 자율성을 강화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체계 구축 도모
- 보편적인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생애주기에 걸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국민의 향유역량 증진이 필수적이나, 소득이나 지역 등 계층별 격차사각지대가 여전히 잔존하여 개선 필요

따라서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고,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수요와 역량에 맞는 지역 자율형 지원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즉, 지역분권화라는 측면에서 2018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중앙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 지역별로 마련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부합하는 통합적 방식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역서비스 체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향후 지역분권화에 대응한 전달체계 구조화와 발전방향 모색’에 주요 목적이 있다. 지역분권이라는 측면에서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특성에 맞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활용하고, 어떻게 중앙 주도의 사업을 향후 지역에

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궁극적으로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중앙주도형에서 지역분권형으로’, ‘획일화된 중앙정부 지침에서 지역 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자율형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는 복지를 포함한 여러 분야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의 추진전략 실천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시행 초기에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문화예술 접근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복지적 차원에서 취약계층 지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일부 소외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특정 기관·시설 연계 지원에만 치중하였으나 점차 전국민 대상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지역 내에서도 관계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책대상별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의 체계화를 위해 사회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의 발전방향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분권화에 따른 중앙-지역 간 협업,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구축과 협력방안 도출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단, 거시적 관점의 사업 구조화 또는 활성화 방안이 아닌 미시적 관점의 지역사회 내 전달체계 개선방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교육 및 복지적 측면을 고려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실시 중인 10개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중 3개 사업인 ‘방과후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여성가족부)’,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보건복지부)’ 그리고 아동·노인·장애인 대상의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로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 주요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한 교육 및 복지 분야에서 통합적 지역서비스를 지향하는 핵심사업의 전달체계를 검토하여 향후 사회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전달체계 및 자원연계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연구의 내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소외계층의 개념 및 문화 향유 욕구이용 현황 분석

-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개념 고찰(취약계층 등 유사용어 포함)
- 문화 향유 욕구·이용 현황 분석
 - 아동·청소년(2017 복지패널조사,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 노인(2017 노인실태조사)
 - 장애인(2017 장애인실태조사)

■ 부처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 및 주요쟁점 분석

- 학교밖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여성가족부)
- 방과후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여성가족부)
-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보건복지부)
-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아동, 장애인, 노인)

■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통합적 체계 구축 방안 분석

- 지자체 사회 문화예술교육 실무자 대상 질적 분석
- 타 분야 핵심사업의 운영체계 비교 분석
 - (교육 분야)평생교육 시스템
 - (복지 분야)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2.2 연구의 방법

■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분석

- 이론적 검토, 정책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 관련 단행본, 연구보고서, 기사, 보도자료 등 제반 선행연구 자료 수집 및 검토

■ 기존 패널조사 등 통계자료 2차 분석(Secondary Data Analysis)

- 대상자별(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문화향유 욕구 및 이용실태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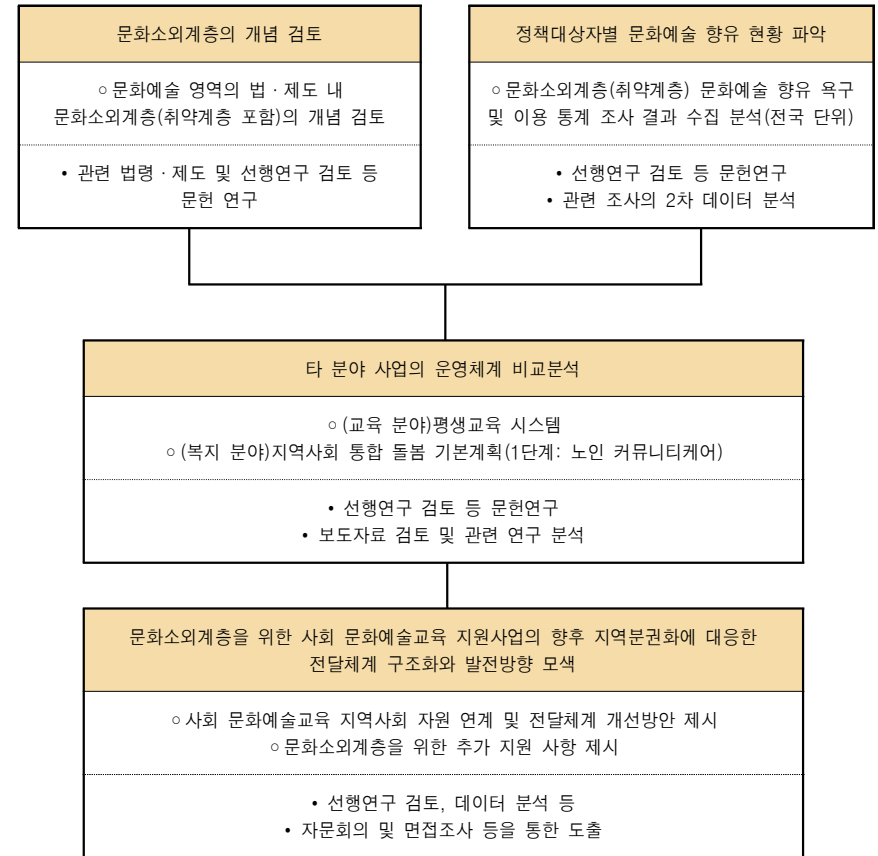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자 심층 인터뷰(면접조사) 실시

- 사회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사회 문화예술교육 실무자 인터뷰 실시

■ 공동연구진 회의 및 연구 결과 보고회

- 공동연구진 회의 수시 개최
- 정책 사업 관계자, 전문가 등 대상 연구 결과 보고회 운영

〈그림 1-1-2〉 연구추진체계도



II.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문화 향유 욕구 및 이용 현황

1. 문화소외계층의 개념
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욕구 및 이용 현황

II.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문화 향유 욕구 및 이용 현황

1. 문화소외계층의 개념

1.1 취약계층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대상자는 포괄적인 의미의 ‘취약계층’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적거나 접근성이 취약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 즉 ‘문화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정책의 대상자를 지칭할 때는 취약계층, 소외계층, 사각지대 계층, 사회적 배려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용어가 혼용된다. 이들 용어는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정책별로도 취약한 계층의 정의나 범주는 지원 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취약계층은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된다.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취약계층(Vulnerable group)’은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공적 개입을 위한 대상자 선정을 목적으로 복지정책 관점에서 주로 규정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기초생활보장제도⁴⁾에서의 ‘취약계층’은 “거소 또는 주소가 불명 등록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8, p. 339). 또한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인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취약계층에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18, p. 339).

방하남·강신옥(2012)⁵⁾은 사회적 위험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을 ①개인적 속성이나 사회적 위치(attributes & position), ②사건·사고(event & accident), ③생애과정(life-course)의 차원을 병행적으로 적용하여 정의하였다.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경우는 ‘장애인’, ‘이민자’, ‘한부모가정’이 해당되며, 사건·사고에는 ‘질병’, ‘산업재해’, ‘실업·실직’이 포함된다. 생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은 학교 졸업 이후 구직과정에 있는 ‘청년’, 조기퇴직 이후 취업이 어려운 ‘중고령층’, ‘기혼(출산)여성’ 등이 포함된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

4) 보건복지부. (2018).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 방하남·강신옥. (2012). 취약계층의 객관적 정의 및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발제 및 요약

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취약계층은 그 범위가 넓어 특정한 집단으로 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도 완전히 상호배타적이지는 않으나 ①소득 기준의 빈곤계층, ②취업이 어려운 계층, ③개인 특성에 따른 여성, 고령층, 저학력층, 장애인, 소수인종,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교도소 출소(예정)자 등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화는 앞서 방하남과 강신옥(2012)의 유형화를 보다 특정 요인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빈곤계층’은 주로 복지정책과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사적인 이유로 인한 비자발적 빈곤으로 기초생활이 불가능한 계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취약계층과 중첩되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빈곤계층은 사회에서 취업, 교육, 문화생활 등 많은 부분에서 일반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에 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반영하여 비정규직이나 영세기업 종사자 등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사상 지위의 취약성을 제외하고는 사회경제적 영역에 이미 진입하여 일반인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사회생활 영위가 가능하므로 취약계층에 포함하는데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 실직자 등은 취약계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 특성’을 바탕으로 한 취약계층 정의는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성별, 연령, 학력, 장애, 인종, 국적 등이 해당되며, 현행법상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정의에 가장 가깝다. 「고용정책기본법⁶⁾」에서는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취업취약계층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OECD에서는 ‘취약계층(disadvantaged group)’을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불리한 계층으로 정의한다. 또한 성·연령 또는 장애·학력·경력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 북한이탈주민, 장기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 교도소 출소자 등도 포함된다. 이 경우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에 기인한 경우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Steel(2004)은 ‘취약계층’을 정신질환자, (요보호)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소수인종, 약물중독자,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수감자, 돌봄이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집단으로 지칭하였다. 이처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략 예상되는 집단은 있으나 명확히 합의된 하나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계층이 무엇으로부터 배제되었는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교육, 주거, 건강, 문화 등 다른 분야의 취약성을 포함하기도 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교육취약계층에 대하여 ‘인간의 기본권인 사회권, 즉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지 못한 계층으로 국민의 학습권을 영위하지 못한 계층’으로 정의하고, 여기에는 경제적 취약 이외에도 교육기회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을 포함하여 한부모가정, 조손가

6)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제1항 제6호

정, 농어촌가정, 다문화가정, 학교중단청소년도 포함하였다(김기현 외, 2016; 서정아·권혜수, 2010; 장명립 외, 2009; 황진구 외, 2011).

이와 같이 학문적 측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는 사회복지 등 각종 대상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은 결과적인 사회경제적 상태(빈곤, 사망 등)를 지칭하기보다는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회적·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할 때 취약계층은 대상자들이 ‘무엇으로부터 배제되었는가’, ‘어떠한 점에서 취약한 계층인가’를 규정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노대명, 2006).

1.2 사회적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역시 국내·외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사회적 소외계층과 관련된 용어로 “경제적·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국가의 공공개입을 통하지 않고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의미한다(김세훈 외, 2005; 최종혁 외 2010, pp. 293-294에서 재인용).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이 속하며, 선진국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개념에 따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 대우,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계층’을 포함할 경우 외국인노동자나 군인,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교정시설 수용자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포함된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사회적 취약계층 개념은 ① 일정한 조건으로 인하여 ②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처하여 사회적 차별, 배제의 대상이 되거나 그 위험성이 높아 ③국가로부터 일정한 정책적 보호와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현재의 열악한 지위를 벗어나기 어려운 계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이나 ‘사회경제적 위험’, ‘열악한 지위’라는 추상적 개념은 이른바 ‘취약(vulnerable or disadvantaged)’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의 보호의 지원의 대상이 되는 계층을 특정하는 구체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다.

최종혁 외(2010)는 사회적 취약계층 개념 접근에 있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란 사회가 분화·고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의 주류(mainstream)영역에 대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들의 참여기회가 차단되고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송다영, 2003: 최종혁 외, 2010, p. 4에서 재인용).” 즉, 특정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사회·경제·문화·정치적 생활에의 참여 수단 부족과 이러한 결과가 야기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이익섭·최정아·이동영, 2007: 최종혁 외, 2010, p. 4에서 재인용).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기본적인 사회 규범에서 배제되거나 이탈된 집단의 존재를 의미하는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바라보았다(Williams & White, 2003: 최종혁 외, 2010, p. 4에서 재인용).

한편 취약계층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을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 법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이 되는 청년 및 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피해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명시하고 있다.

<p>〈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p> <p>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p>[전문개정 2010. 12. 9.]</p>

1.3 문화소외계층

취약계층과 마찬가지로 소외계층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의 정의를 준용하여 “사회·경제·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문화 접근 및 향유의 취약계층”을 “문화소외계층”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다만, 현재 일반적인 취약계층 혹은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적 기준은 다양한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문화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지원/수혜

대상자를 관련 부처에서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검토해 본다. 문화예술 관련 정책들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그리고 일부 사업은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경우 문화예술을 매개로 사회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서 제시하는 지원대상자를 아래에서 간략히 살펴본다.

1.3.1 문화체육관광부

우선 문화 관련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기본법」⁷⁾에서 ‘문화’와 ‘국민의 권리’를 제3조와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정의하고 있다.

-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문화권”)를 가진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볼 때 문화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특정 조건에 의해 문화향유 및 문화예술교육을 제공받는 것에서 소외되거나 접근에 취약한 계층을 ‘문화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이러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법」⁸⁾에서는 “문화소외계층”을 정책의 대상으로서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으로 명백히 정의하고 있다. 문화적 체험과

7)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만이 아닌, 문화인프라가 빈곤한 농어촌 및 산간오지,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사회적 장벽을 가진 다문화가정 및 복지시설 등이 광범위한 ‘문화소외계층’에 포함된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정책 추진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주요 문화정책인 4개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가)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문화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해주고,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의 향유를 위한 비용을 1인당 연 7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수혜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문화누리 홈페이지, 2018).

- 6세(2012.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2018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가능

이에 따라 동 사업에서는 문화소외계층을 계층별로 경제적·사회적·지리적·특수 소외계층의 네

가지로 구분하며, 순수 예술 관람경험의 기회가 적은 계층을 문화소외계층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표 II-1-1〉 문화소외계층 정의(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구분	대상
경제적 소외계층	지역 및 소외계층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거주자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 재활원·요양원·보육원·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이용자, 특수학교, 의료시설, 외국인노동자 등
지리적 소외계층	읍·면·동·도서(섬)·산간벽지, 공단지역 주민
특수 소외계층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새터민, 서해5도 주민 등
문화 소외계층	연간 순수예술 관람경험이 적은 문화 소외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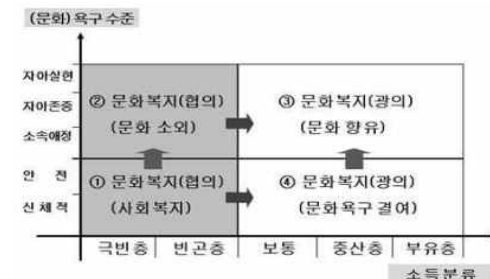
자료: 유연우·김종서·허건·강철상. (2017). 2017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 및 타당성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p.28.

문화소외와 관련하여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서는 문화에 대한 욕구수준을 소득수준과 결합하여 아래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 문화에 대한 욕구수준도 낮고 소득수준도 낮은 계층(기존의 사회복지 소외계층)
- 문화에 대한 욕구수준은 높고 소득수준은 낮은 계층(1차적인 문화소외계층)
- 문화에 대한 욕구수준도 높고 소득수준도 높은 계층(자발적 문화향유계층)
- 문화에 대한 욕구수준은 낮고 소득수준은 높은 계층(문화욕구 결여계층)

문화소외계층을 사회·경제·지역적 여건 때문에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계층이라고 정의할 경우, ‘기존 사회복지 소외계층’과 ‘1차적 문화소외계층’은 협의의 문화복지 대상으로, ‘자발적 문화향유계층’과 ‘문화욕구 결여계층’은 광의의 문화복지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광의의 문화복지 대상은 자발적으로 문화 향유가 가능하거나, 문화 욕구가 생기면 즉시 문화향유가 가능한 계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II-1-1〉 문화욕구와 소득수준을 반영한 문화소외계층 분류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문화소외계층] 수요 조사 연구. p. 36.

또한‘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문화소외계층을 범주화하였다.

- (1단계)개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
- (2단계)시설입소자 및 지역소외계층
- (3단계)소득기준 무관, 사회적배제로 문화나눔이 필요한 특수시설 종사자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단계에서 제시하는 경제적 소외계층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43% 이하 가구에 대하여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독거노인, 노숙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이 포함된다. 2단계 지리적 소외계층은 지역적인 소외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입소자, 노인 여가시설(경로당) 이용자, 도서산간지역(지역적 소외계층)을 포함한다. 3단계 사회적 소외계층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사회적배제로 인하여 소외되고 문화나눔이 필요한 중합병원, 군인, 교정시설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p>1단계: 개별화된 서비스가 주로 가능하며,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생계, 주거, 교육 및 장애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계층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계층)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의미.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함께 포함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91호)에서는 15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등급기준을 정하고 있음 - 독거 노인 : 독거노인이란 배우자 및 친족, 비 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가계를 함께 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을 의미함. 독거노인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의미하며, 시설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손자나 자녀, 손자녀 등과 함께 동거하지 않는 1인 노인가구의 노인을 의미 - 노숙인: 1997년 말 경제 위기 이후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노숙인 대신 부랑인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 1987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침에 의하면,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무의무탁한 사람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가정 보호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리를 방황하면서 시민에게 위해와 혐오감을 주는 등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활동 능력이 결여
--

<p>된 정신 착란자, 알코올 중독자, 절인, 앵벌이, 18세 미만의 부랑아, 불구자들’을 의미(보건사회부, 198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노숙인들은 노숙을 시작한 동기가 대부분 실직 및 경제적 이유 때문이며,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자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랑인들과는 구별. 한국도시연구소(1999)에서는 노숙인을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무거주자 또는 안정된 주거가 확보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주로 주거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부각.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노숙인은 좁은 의미로는 ‘잠잘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서 잠을 자는 사람’이며, 넓은 의미로는 ‘정규적이고 고정된 적절한 주거시설이 없고 실제로 길거리, 역사, 공원 같은 공공장소나 차안, 버려진 건물, 임시보호시설, 친척이나 친구의 집에 임시로 얹혀사는 사람들’을 의미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은 현재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을 통상적으로 의미. 최근에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남성이나 여성과 결혼하여 만든 가정, 이주노동자 가족을 포함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사회 정착 중인 탈북이주민을 의미하며,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문화충격’과 ‘문화적 갈등’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정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함 - 한부모가정: 한부모는 배우자와의 이혼 및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해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이르는 용어로 현대사회는 이혼의 증가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부모가정은 대가족, 핵가족, 입양가족, 무자녀가족, 재혼가족 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족구성 하의 하나이기는 하나, 생계와 가정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부담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사회가 돌봐야 하는 소외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음. 또한 한부모가정은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심리적인 갈등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문화소외계층에서도 1단계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p>2단계: 지역이나 시설, 기관의 동일 대상이 밀집되어 집단 서비스가 가능하며, 절대적 빈곤 계층이 일부 포함된 상대적 빈곤 계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입소자: 문화소외계층으로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의 이용자나 입소자는 사회복지 소외계층이면서도 공동 생활을 유지하는 집단으로 개별적인 서비스보다는 집단 서비스 형태로의 실천이 가능한 영역에 해당. 보건복지부에서 크게 분류하는 대상자는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으로 구분 - 노인 여가 시설(경로당) 이용자: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오락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경로당임. 경로당은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설 중 하나이며 이용 노인 수가 가장 많은 여가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음 - 도서산간지역(지역적 소외계층): 우정사업국에서 분류하는 도서산간지역을 기준으로 소외지역을 규정하였을 때,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를 참고하여 분류된 지역 중 총 거주인구 4,000명 미만 지역 주민들을 ‘문화소외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음. <p>○ 3단계: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사회와 일정 기간 격리되거나 문화와의 접근성이 취약한 환경에 있는 집단으로 동일한 장소 및 시간에 동시 서비스가 가능한 계층</p>

- 교정 시설 :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은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서 법령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교정시설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
- 교정시설의 종류로는 크게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 심사원이 있으며 교정시설과 유사한 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갹생보호소가 있음
- 종합병원: 질병이 있는 환자가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병원에 들어가 머무는 것으로 사회나 가정과 일정기간 격리되어 생활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 할 때 문화소외계층으로 포함 할 수 있음
- 군인: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들은 일정기간 군복무에 임하게 되어 사회와 격리됨. 이 기간동안 문화 향유에 대한 기회나 관심이 멀어지기 쉬우므로 문화소외계층으로 간주할 수 있음
- 1인 사업자: 전국의 자영업자 중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1인 사업자로 정의하였으며, 1인 사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간주할 수 있어 문화소외계층에 포함
- 청소년(중·고등학교): 문화소외계층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제도에 진입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특히 생애주기에서도 절충노도의 시기라 일컬을 만큼 정서적인 감수성 함양이 중요한 시기임. 특히 문화의 효과 중 정서를 순화시키고, 안정적인 감성을 지니게 하는 것은 청소년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문화소외계층으로 자리 매김하게 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은 집단화시켜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소외계층으로 포함할 필요 있음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 주요조사 연구.

나)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일반 시민, 그 중 문화예술 욕구를 지닌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다른 사업에 비해 문화권 향유에 대한 접근성 여부·정도보다 욕구를 기준으로 문화소외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선정된다.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의하면 지역별로는 큰 차이 지 보이지 않았으나 젊을수록, 고학력자일수록, 고소득층일수록 동호회 참여율이 높아 연령·학력·가구소득별로 문화동호회 참여율에서 편차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도 문화소외계층이 발생하는 결과를 보였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주민과 무용, 음악, 미술, 사진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동호회를 지원한다. 동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므로 문화에서 소외된 계층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동호회의 ‘형성단계-발표·교류단계-확장단계-정책연구’ 4단계에 따라 소규모 모임 혹은 단체별로 상이하다(표 II-1-2 참조).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사회적 격차를 해소하여 공동체를 회복하고 건강한 지역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주요 지원대상자는 지역주민이다. 본 사업은 주민공동체 및 문화예술단체·기관·시설을 3~40백만원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사업’과 네트워크 중심의 단체를 3~10백만원 지원하는 ‘생활문화

탐색형 활동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지역문화진흥원, 2018). 이들 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다른 마을 및 지역 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에 초점이 맞춰진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약계층보다는 보다 광의의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에 속한다. 따라서 생활문화를 매개로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여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한편, 2010년 ‘농어촌 마을 문화심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문화이모작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되며, 2013년부터 주민들이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것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지리적 문화소외계층에 속하는 ‘도·농지역, 농산어촌 마을의 주민공동체’이며, 매년 약 140여명의 교육생에게 지원이 되었다. 주민참여자 수는 누적 14,000여명에 이른다. 지원규모는 2013년 8,700만원에서 증감을 거듭하여 2017년 6,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표 II-1-2〉 지역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단계별 지원규모

단계	형성단계	발표·교류단계		확장단계	정책연구
사업명	생활문화 소모임 발굴 및 형성 지원	우리동네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	지역생활문화 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지원	지역특화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생활문화 주제 연구지원
사업기간	2018.4~11 상반기: 2018.4~9 하반기: 2018.6~11(※ 계기성 지원)				2018.4~11
지원규모	1개 모임별 1백만원~3백만원	1개 단체별 10백만원 내외	1개 단체별 20백만원~30백만원	1개 단체별 10백만원~15백만원	1개 단체별 5백만원 내외

자료: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www.rcda.or.kr.

다) 사회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이외의 것’으로 2005년부터 문화소외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그 범위가 넓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총괄 하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집행하는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일부와 지역 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의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주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국방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보건처가 각각 참여하는 10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교육대상자(시설)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으로, 국방부 사업은 군부대, 법무부는 교정시설, 치료감호소, 소년원학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근로자, 여성가족부는 방과후청소년 및 학교밖청소년

년,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훈처는 상이군경이 해당된다. 이처럼 지원대상자가 부처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특성 상 분절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그러나 생애주기 관점에서 볼 때, 예를 들어, 법무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일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소의 아동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부처 간 협력 사업은 보다 통합적 방식에서 프로그램 기획 및 연계가 가능할 수 있다.

〈표 II-1-3〉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별 대상자

협력부처	지원시설	지원대상	협력기관
국방부	군부대	군인장병	국방부 정신전략문화정책과
			육군·공군·해군본부 및 해병대
법무부	교정시설	재소자	사회복귀과
	치료감호소	수용환자	치료처우과
	소년원학교	소년원학교 수용 청소년	소년보호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산업단지 내 근로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성가족부	방과후청소년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일반·소외계층청소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학교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 (가출·자립·탈학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대전해마음센터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민간대안학교 이용 아동·청소년, 하나원 입소자	남북하나재단
보훈처	상이군경	보훈복지문화대학의 국가유공상이자 및 가족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복지국

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총괄 하에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게임문화재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학교폭력·가정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 치유를 위해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동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마음치유, 봄처럼’, ‘복합 외상 피해자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치매 예방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등이 있다.

본 사업은 문화소의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는 사업은 아니나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폭력이나 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대상자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는 게임 과몰입 학생,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이 있다. 성인과 노인 대상으로는 군대 부적응 병사, 경도 인지 장애인, 초기 치매 노인이 포함된다. 그 밖에 가정폭력, 도박중독, 각종 범죄사건, 기타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예방 차원에서 경미한 심리·정신적 회복이 필요하거나 잠재적 치유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표 II-1-4〉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별 대상자

구분				지원대상
부처·기관 협력	아동 청소년	게임문화재단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	게임 과몰입 대상
		교육부	wee프로젝트 관련 시설	학교 폭력 피·가해 학생
		법무부	소년원학교	학교 부적응 학생
	성인	국방부	국군병원 등	군대 부적응 병사
		경찰청	경찰서 및 치안센터	각종 범죄사건 발생 지역 거주 주민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 중독자 및 가족
치매예방	성인 노인	여성가족부	보호시설	성·가정 폭력 피해자
복합외상	전체	문화기반시설-치매지원센터 협력		경도 인지 장애인, 초기 치매환자
		여성가족부	특별지원시설, 자립시설 등	성폭력 피해자

다음으로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있다. 동 사업은 지역사회 내 문화소의계층이라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예술강사가 시설로 파견되어 교육 대상자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주요 대상 기관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이며, 시설 공모에서 모니터링까지의 사업 운영은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복지관 협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 아동복지시설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직접 복지시설을 공모하여 선정한 이후 예술강사를 모집하여 파견한다.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법인이 포함되며 이곳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체험·학습하도록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포함된다.

〈표 II-1-5〉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별 대상자

교육대상	지원대상	지원분야	세부 추진 내용	협력
아동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 보호시설, 종합시설/법인)	국악,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무용	교육지원금, 기자재 등 지원	-
노인	전국 노인복지관	무용, 미술, 연극, 음악, 사진	교육지원금, 기자재 등 지원, 기획사업 등	한국노인종합 복지관협회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 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	교육지원금, 기자재 등 지원, 기획사업 등	한국장애인 복지관협회

라) 기타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장애인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예술교육을 지원한다. 따라서 본 사업의 대상자는 장애인 예술가와 장애인 예술단체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주관으로 ‘함께누리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공모 프로그램 유형별로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5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문화접근성에서 취약한 중장년층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지방문화원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국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세부적으로는 어르신문화예술교육 지원,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어르신과 청년협력 프로젝트,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동네방네 문화로 청춘 등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 하에 여가활동과 문화활동이 운영된다.

1.3.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총괄 하에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문화사업은 문체부와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지자체에서 자체 실시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다. 이 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기획·발굴하여 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주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17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이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 필요에 의해 사업을 부가적으로 개발한다.

17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중에서는 학교부적응이나 가족 해체로 인해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사업에서는 문화를 매개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총괄 하의 직접적인 문화사업과 그 목적이나 특성이 다르다. 대표적인 예로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문화욕구나 문화적 접근 취약성을 기준으로 선정되기보다는 ‘가구소득’과 ‘연령’에 따라 선정되는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의 만 7~18세 아동·청소년이 해당된다. <표 II-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선정된다.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어 또는 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개인 및 3명 이하 소그룹 지도를 실시한다. 정서 순화를 위해서는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가 3명 이하 소그룹으로 제공된다.

<표 II-1-6> 2018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주: 1)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36,052원씩 증가

1.3.3 17개 시·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기초 및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도 자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광역 단위에서 추진 중인 문화예술 관련 정책만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협업으로 수행되는 지역 내 대표적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인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그리고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국악)예술강사 또는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별 지원대상자가 이들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들 공통 사업 외에도 지역에서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저소득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며, 생애주기별로는 지역 내 노년층 대상의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농·산·어촌이나 외곽지역과 같이 문화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고 인프라가 부족하여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에 지원이 주로 이루어진다. 이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누리카드, 예술강사 지원을 제외한 17개 시·도별 문화예술 관련 주요 사업과 지원 대상자를 요약하면 <표 II-1-7>과 같다.

서울시의 경우, 문화 소외시민 등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시 재정자립도 하위 5개 자치구 관내 아동 15,0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 권장공연 단체관람을 지원하고, 어르신의 문화 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전용 실버극장을 운영하여 55세 이상 어르신 및 동반가족(2,000원/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영화상영, 공연, 음악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편적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예술영재(음악미술) 교육지원, 9~24세 장애청소년(발달청각) 미술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문화시설이 부족한 시 외곽지역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시설 및 공간 마련에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는 맞춤형 실버 문화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독거노인을 포함한 고령층의 문화예술 체험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부산에 소재(주소지)하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요양시설, 기업체(공장), 임대아파트, 군부대 등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공동체 시설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문화예술활동을 제공하

도록 한다.

경기도는 따복공부방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자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지원을 제공한다.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문화예술기반 확충, 문화소의 지역이나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다수 실시하고 있다.

〈표 II-1-7〉 전국 17개 시·도별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관련 사업

구분	사업명	주요 대상자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음악·미술) 교육 지원	- 음악, 미술에 소질이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총 200명: 음악 100명, 미술 100명)
	장애청소년(발달·청각) 미술교육 지원	- 9세 이상 24세 이하 장애청소년 (총 130명: 발달 50명, 청각 80명)
	미술관 및 문화시설 개관·확충	- 문화관련 시설 사각·부족지역
부산광역시	맞춤형 실버 문화복지: 문화예술 체험 활동	- 독거노인 및 노년층(경로당)
	찾아가는 문화활동	- 지역민: 문화소외 및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등 - 어린이 및 청소년: 낙도·오지·특수학교, 보호시설 등 - 장애인: 보호시설, 장애학교 등 - 재소자: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 군인: 군부대 등 - 외국인: 외국인노동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외국인학교 등 - 병동프로그램: 어린이병동, 노인병동, 정신병동 및 보호시설 등 - 기업프로그램: 사내 임직원 대상, 30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 공장, 사무실 등 - 기타 본 사업의 취지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문화나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제공, 재능나눔, 악기기부 등
	문화공동체 '동고동락' 프로젝트	- 주민과 지자체, 유관단체 간 공동 관계망 구축
인천광역시	원로예술인 및 장애인 예술활동 문화사각지대 창작지원	- 원로예술인(70세 이상 30년 경력),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지원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 도서지역·사회복지시설 찾아가는 문화공연(20개 단체), 국어문화학교(20개 기관)
광주광역시	문화학교 프로그램	- 청소년 및 일반시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행사(대전 문화예술정책 토론허당, 시민공감 대전예술제, 숲속의 열린음악회, 견우직녀축제)	- 대전시민
울산광역시	찾아가는 문화 활동	- 문화소외지역 주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세종특별자치시	찾아가는 아트트럭 '세종 컬처로드'	- 세종시민

구분	사업명	주요 대상자
경기도	소의 어르신 문화예술프로그램	- 해당지역 및 장소의 독거노인 및 복지사각지대 노인
	체인지업캠퍼스(문화예술)	- 초·중·고등학생·소외계층
	따복공부방(문화예술)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자녀, 학교 밖 청소년 등
강원도	찾아가는 공연(연극, 음악, 국악, 무용공연)	- 문화소외지역(오지마을 학교, 보호시설, 병동 등) 및 계층
	시청각장애인 초청 영화관람 지원사업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충청북도	도 지정예술단 운영	- 충북도민
충청남도	찾아가는 공연 (방문 공연 차량 임차 운영 지원 포함)	-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의 주민
전라북도	지역맞춤형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4개 과정 215명)	- 전북도민
	문화도시(5개소), 문화마을(3개소) 조성	
전라남도	찾아가는 문화공연예술캠프·영화관(40회), 작은 영화관(3개소 개관)	- 문화소의 전남도민
경상북도	경북 방방곡곡 찾아가는 고품격 문화공연(음악, 연극, 무용 관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의 주민
경상남도	찾아가는 문화예술단 및 장터 문화마당	- 문화소의 사군 지역주민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인정액 4,519,202원 이하 초·중·고등학생 서민자녀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계층특성별 문화예술교육	- 청소년, 장애인, 일반도민

자료: 시·도별 2018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자료

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욕구·이용 현황

본 연구는 부처 간 협력사업인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 방과후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과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들 사업의 주요 대상자인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각 대상자 별로 취약계층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계층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와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문화소외계층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전국 규모 실태조사에서는 문화소외계층보다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로 문화 관련 이용 실태가 제시되고 있어 다음에서는 이들 대상자별로 일반적인 취약계층의 현황과 문화향유 실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1 아동·청소년

2.1.1.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현황

아동·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구가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이들 아동·청소년들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한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문화활동은 개인의 선택적인 성격이 강한 활동임을 감안하면 문화활동 향유에 있어서도 이러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문화소외계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제도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기준인 ‘가구소득’과 ‘가구특성’,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2017년 한국복지패널 12차 데이터와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각 기준별로 가구 단위의 데이터는 공시된 국가 통계자료로 일부조사가 가능하나, 전 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는 2013년도에 공개된 아동종합실태조사 외에는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최근 현황 파악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12차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다.

한국복지패널은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른 인구집단별로 가구 현황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5년도에 인구센서스 기반으로 2단계 층화표집으로 추출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개년 간의 조사결과가 공개되었다. 한국복지패널은 표본 추출 시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의 전체 표본의 50%으로 과대표집되어 있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합하다. 본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만7세에서 만18세로 정의하였다.

가) 소득기준에 따른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현황

저소득 가구의 기준은 제도마다 상이하나 본 분석에서 활용되는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경상소득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 가구’를 정의하고 있다. 한국

복지패널 12차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기준에 따른 아동·청소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 중 저소득 가구 아동·청소년은 11.9%, 일반 가구 아동·청소년은 88.1%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아동·청소년 현황을 전국 7개 권역별로 다시 살펴보면, 광주/전남/전북/제주도 지역(23.6%)에서 그 비중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경기 지역(23.1%)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은 5.6%로 저소득 가구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가장 적었다.

〈표 II-2-1〉 지역별 저소득 가구 아동·청소년 현황

(단위: %)

구분	비율
전체	100.0
저소득 가구	11.9
서울	5.6
수도권(인천/경기)	23.1
부산/경남/울산	14.4
대구/경북	10.2
대전/충남	11.6
강원/충북	11.6
광주/전남/전북/제주도	23.6
소계	100.0
일반 가구	88.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한국복지패널 12차 자료 재분석(2018.12.7.다운로드)

다음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수급가구9)’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본다. 전체 아동 수 대비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의 아동·청소년은 4.5%,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의 아동·청소년은 5.2%,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의 아동·청소년은 5.0%, 교육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의 아동·청소년은 5.5%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의 아동·청소년 현황은 각 수급권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하나 가장 기준소득이 높은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아동·청소년 비율을 기준으로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경기지역과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아동·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충남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0%이하),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등 네 분야로 나누어 지급된다.

〈표 II-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가구 아동·청소년 현황

(단위: %)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전체	4.5	5.2	5.0	5.5
서울	0.5	0.4	0.4	0.6
수도권(인천/경기)	1.1	1.3	1.3	1.3
부산/경남/울산	1.0	1.3	1.2	1.4
대구/경북	0.7	0.6	0.7	0.7
대전/충남	0.3	0.3	0.3	0.3
강원/충북	0.3	0.4	0.5	0.5
광주/전남/전북/제주도	0.8	0.8	0.8	0.7

주: 전체 아동·청소년 수 대비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한국복지패널 12차 자료 재분석(2018.12.7.다운로드)

나) 가구특성에 따른 아동·청소년 현황

제도와 정책별로 차이가 있으나 가구 특성에 따른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기준은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정(모·부자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으로 구분된다. 가구특성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황을 한국복지패널 12차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모자가정은 3.9%, 부자가정은 1.7%로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약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은 1.2%였다. 이를 다시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지역의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지역 간 편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3〉 가구특성에 따른 아동·청소년 현황

(단위: %)

구분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및 소년소녀 가정
전체	3.9	1.7	1.2
서울	0.4	0.1	0.2
수도권(인천/경기)	1.2	0.7	0.2
부산/경남/울산	0.5	0.3	0.3
대구/경북	0.3	0.1	0.0
대전/충남	0.3	0.0	0.2
강원/충북	0.3	0.1	0.1
광주/전남/전북/제주도	0.9	0.4	0.3

주: 전체 아동·청소년 수 대비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한국복지패널 12차 자료 재분석(2018.12.7.다운로드)

앞서의 가구 특성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황은 소득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의 경우 대동소이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득기준과 가구특성에 모두 부합할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기준과 가구특성 기준을 모두 고려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황을 교차분석한 결과, 저소득 모자가정 2.0%, 부자가정 0.6%로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아동·청소년 비율이 2.6%로 나타났다. 저소득 조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은 1%였다.

〈표 II-2-4〉 가구소득 및 가구특성에 따른 아동·청소년 현황

(단위: 명, %)

구분	가구특성				전체
	모자 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일반 및 기타	
전체	70(3.9)	31(1.7)	22(1.2)	1,692(93.2)	1,815(100.0)
일반 가구	33(1.8)	20(1.1)	3(0.2)	1,543(85.0)	1,599(88.1)
저소득 가구	37(2.0)	11(0.6)	19(1.0)	149(8.2)	216(11.9)

주: 괄호안의 수치는 전체 아동·청소년 수 대비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한국복지패널 12차 자료 재분석(2018.12.7.다운로드)

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복지제도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초·중·고등학교 재학 기준으로 총 121,783명이며, 이 중 초등학생 93,027명, 중학생 18,068명, 고등학생 10,334명으로 중학생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령기 아동·청소년 대비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1%로 나타났다. 각 학교급별 전체 아동·청소년 대비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3.5%, 중학생의 1.3%, 고등학생의 0.6%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으로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2-5〉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

단위: 명, %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018	93,027(3.5)	18,068(1.3)	10,688(0.6)	121,783(2.1)
2017	82,733	15,945	10,334	109,012
2016	73,972	15,080	9,816	98,868

주: 괄호안의 수치는 2018년도 각 학교급 별 전체 아동·청소년 수 대비 비율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연보 원자료 재분석(2018.12.7.다운로드)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탈북 아동·청소년은 2,538명이며 매년 탈북 아동·청소년들이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초·중·고등학교 재학 기준으로 초등학생 1,027명, 중학생 726명, 고등학생 601명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급별 전체 아동·청소년 대비 탈북 아동·청소년 비율은 초등학생의 0.04%, 중학생의 0.05%, 고등학생의 0.05%였으며, 전체 학령기 아동·청소년 대비 탈북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0.05%로 나타났다.

〈표 II-2-6〉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현황

(단위: 명, %)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017	1,027(0.04)	726(0.05)	785(0.05)	2,538(0.05)
2016	1,143	773	601	2,517
2015	1,224	824	427	2,475

주: 괄호안의 수치는 2017년도 각 학교급 별 전체 아동·청소년 수 대비 비율을 의미함.

자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7), 2017년 탈북학생 주요통계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연보 원자료 재분석(2018.12.7.다운로드)

4)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동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동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8.12.28.인출).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015년 말 기준 40.5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2012년에 45.3만 명, 2013년 44.2만 명, 2014년 42.8만 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가 줄어든다기보다 전반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김정숙·연보라, 2018). 윤철경 외(2012)에 의하면, 국제이동(내국인, 외국인)을 제외한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1.8만 명이며, 초·중·고등학교별로는 초등학교 2.8만 명, 중학교 6.7만 명, 고등학교 22.2만 명으로 고등학교 과정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월등히 높다.

〈표 II-2-7〉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수

(단위: 명)

구분		인구 수				비고
		2012.말	2013.말	2014.말	2015.말	
학령 인구	주민등록상 학령인구(A)	7,126,098	6,862,319	6,650,243	6,433,576	• 2015.12.31. 기준 • 안전행정부(2015).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외국인자녀 중 학령인구(B)	13,372	14,780	23,158	19,266	• 2004~2015년간 누적된 학령인구 순입국자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2004~2015) 원 자료 활용
학생수	교육통계상 학생인구(C)	6,715,622	6,460,545	6,262,541	6,061,849	• 2015.4.1. 기준 재학생수 •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 교육통계연보.
	순학업중단자수(D)	29,895	26,044	21,413	19,523	• 2015.4.~2015.12. 9개월간 발생한 학업중단자 수(추정치)
	고등학교 조기졸업자 수(E)	-	-	3,610	4,667	• 2013년 만 14세 이하, 2014년 만15세 이하, 2015년 만16세 이하 고3학생 중 졸업자수(추정치)
학교 밖 청소년 수(F)		453,743	442,598	428,663	405,849	• F=(A+B)-(C-D+E)

자료: 윤철경 외(2017), p.374, 김정숙·연보라(2018), p.25.(재인용)

〈표 II-2-8〉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급별 현황

국제이동 (내국인)	국제이동 (외국인)	국제이동 제외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수 전체
		초	중	고	
82,719 명 (20.4%)	4,832 명 (1.2%)	318,298 명 (78.4%)			405,849 명 (100.0%)
순 출국 학생수 55,383 명	(외국인 순입국자·중도입국)/ 외국인 학생수 (다문화청소년)	28,329 명	67,479 명	222,490 명	
귀국후 미복교자 27,336 명					

자료: 윤철경 외(2017), p.379, 김정숙·연보라(2018), p.26. (재인용)

2.1.2. 아동·청소년 문화소외계층 현황

아동종합실태조사(2013)¹⁰⁾에서는 5년 주기로 만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종합실태조사(2013)에서 만6세에서 만17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중 취미기능교실 및 문화 활동¹¹⁾의 이용 여부 및 필요 여부, 사회활동 경험 중 문화·예술 관련 활동¹²⁾의 경험 여부 및 참여 횟수를 중심으로 문화소외계층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난 한달 간 취미기능교실의 이용 여부 및 필요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아동·청소년의 25.7%가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74.3%는 이용한 경험이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도 소득 수준¹³⁾을 기준으로 빈곤가구의 13.3%가 취미기능교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구의 26.3%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세분화된 소득수준으로 취미기능교실 이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초수급가구 아동·청소년의 16.1%, 차상위가구 아동·청소년의 6.0%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가구 중 기초수급가구 아동·청소년의 취미기능교실 이용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아동·청소년의 이용률이 각각 약 26%, 농어촌지역의 경우 17.3%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낮았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 가구 아동·청소년의 27.2%, 한부모·조손 가구 아동·청소년의 14.4%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양부모 가구 아동·청소년의 취미기능교실 이용률이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미기능교실의 필요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77.7%가 아동·청소년의 취미기능교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취미기능교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득수준 기준으로 빈곤가구 아동·청소년의 81.6%, 일반가구 아동·청소년의 77.5%가 취미기능교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세분화된 소득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초수급가구 아동·청소년의 82.2%, 차상위가구 아동·청소년의 79.3%가 취미기능교실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취미기능 교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아동·청소년의 76.5%, 중소도시 아동·청소년의 79.6%, 농어촌 아동·청소년의 71.1%가 취미기능교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중소도시 아동·청소년의 욕구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 가구 아동·청소년과 한부모·조손 가구 아동·청소년의 약 77.5%가 취미기능교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10) 2013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경우 조사시기가 다소 오래되었으나 문화활동 이용 여부 및 필요 여부, 문화/예술 활동 경험 등에 대한 항목이 있어 활용하였다. 2019년도에 아동종합실태조사 공개될 예정이며 해당 자료를 통해 정확한 취약계층 아동현황 계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11) 취미기능교실은 컴퓨터, 영어, 미술 등을 의미하며 문화활동은 문화유산 답사, 연극, 견학, 방학 중 캠프 등에 해당한다.
- 12) 문화/예술 관련 사회활동은 영화감상, 문학 창작성상활동, 음악/연극/무용 등 공연감상 활동, 탈춤/민속놀이 등 전통문화체험활동, 문화유적 답사 등에 해당한다.
- 13) 2013년도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였으나 2018년 현재 시점에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표 II-2-9〉 아동청소년 취미기능교실 이용 및 필요 여부

(단위: %, %p)

구분		이용 여부(A)		필요 여부(B)		필요여부와 이용여부 간의 차이(B-A)
		이용	비이용	필요	불필요	
전체		25.7	74.3	77.7	22.3	52.0
연령	만6-8세	38.3	61.7	84.9	15.1	46.6
	만9-11세	37.4	62.6	84.4	15.6	47.0
	만12-17세	17.0	83.0	72.7	27.3	55.7
소득수준1	빈곤	13.3	86.7	81.6	18.4	68.3
	일반	26.3	73.7	77.5	22.5	51.2
소득수준2	기초수급	16.1	83.9	82.2	17.8	66.1
	차상위	6.0	94.0	79.8	20.2	73.8
	일반	26.3	73.7	77.5	22.5	51.2
지역	대도시	25.7	74.3	76.5	23.5	50.8
	중소도시	26.7	73.3	79.6	20.4	52.9
	농어촌	17.3	82.7	71.1	28.9	53.8
가족유형	양부모	27.2	72.8	77.6	22.4	50.4
	한부모·조손	14.4	85.6	77.5	22.5	63.1

주: 소득수준1과 소득수준2의 정의가 조사 당시와 현재 시점이 다름에 유의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복지실태조사 재구성 및 재분석

복지서비스 중 지난 한달 간 문화활동의 이용 여부 및 필요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아동·청소년의 15.5%가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84.5%는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소득수준 기준 빈곤가구의 11.0%만이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일반가구의 15.7%보다 4.7%p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분화된 소득수준별로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청소년의 12.7%, 차상위가구 아동·청소년의 6.6%가 문화활동을 이용하여 빈곤가구 중 기초수급가구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 이용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 이용률은 대도시 14.9%, 중소도시 16.7%, 농어촌지역 10.0%로 농어촌지역이 낮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 가구 아동·청소년의 16.2%, 한부모·조손 가구 아동·청소년의 10.8%가 이용하여 양부모 가구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 필요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75.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문화활동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빈곤가구 아동·청소년의 75.5%, 일반가구 아동·청소년의 75.2%가 문화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세분화된 소득기준별로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청소년의 76.6%, 차상위가구 아동·청소년의 72.5%가 문화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문화활동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욕구는 소득수준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 욕구는 대도시 76.1%, 중소도시 75.6%, 농어촌 66.4%로 농어촌지역 아동·청소년의 욕구가 다소 낮았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 가구 아동·청소년과 한부모·조손 가구의 아동·청소년의 약 76%가 유사한 비율로 문화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2-10〉 아동·청소년 문화활동 이용 및 필요 여부

(단위: %, %p)

구분		이용 여부(A)		필요 여부(B)		필요여부와 이용여부 간의 차이(B-A)
		이용	비이용	필요	불필요	
전체		15.5	84.5	75.2	24.8	59.7
연령	만6-8세	18.9	81.1	81.3	18.7	62.4
	만9-11세	22.6	77.4	81.0	19.0	58.4
	만12-17세	11.6	88.4	70.9	29.1	59.3
소득 수준1	빈곤	11.0	89.0	75.5	24.5	64.5
	일반	15.7	84.3	75.2	24.8	59.5
소득 수준2	기초수급	12.7	87.3	76.6	23.4	63.9
	차상위	6.6	93.4	72.5	27.5	65.9
	일반	15.7	84.3	75.2	24.8	59.5
지역	대도시	14.9	85.1	76.1	23.9	61.2
	중소도시	16.7	83.3	75.6	24.4	58.9
	농어촌	10.0	90.0	66.4	33.6	56.4
가족유형	양부모	16.2	83.8	74.9	25.1	58.7
	한부모·조손	10.8	89.2	76.5	23.5	65.7

주: 소득수준1과 소득수준2의 정의가 조사 당시와 현재 시점이 다름에 유의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복지실태조사 재구성 및 재분석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관련 사회활동 참여율 및 참여횟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아동·청소년의 68.9%가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수준별 참여율은 빈곤가구 아동·청소년 60.1%, 일반가구 아동·청소년 69.4%로, 일반가구 아동·청소년의 참여율이 9.3%p 높았다. 참여횟수는 각각 5회로 소득수준별 큰 격차 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세분화된 소득수준별 참여율은 기초수급가구 아동·청소년 59.9%, 차상위가구 아동·청소년 60.6%로, 빈곤가구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 사회활동 경험률이 비슷하였다.

지역 간 차이를 다시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66.8%, 중소도시 70.3%, 농어촌 72.4%가 문화·예술 관련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농어촌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횟수는 대도시 5.2회, 중소도시 5.2회, 농어촌 4.2회로, 참여율과는 반대로 농어촌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관련 사회활동의 횟수가 가장 적었다. 가구유형별로는 양부모 가구 아동·청소년의 참여율이 70.0%, 한부모·조손 가구 아동·청소년의 참여율이 63.2%로 양부모 가구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과 참여횟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1〉 아동·청소년 특성별 문화·예술 관련 사회활동 참여율 및 참여횟수

(단위: 회, %)

구분		문화·예술	참여횟수	
		참여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8.9	5.12	7.42
연령	만9-11세	69.5	4.33	5.92
	만12-17세	68.7	5.44	7.92
소득 수준1	빈곤	60.1	5.35	10.39
	일반	69.4	5.11	7.27
소득 수준2	기초수급	59.9	5.10	10.43
	차상위	60.6	5.95	10.25
	일반	69.4	5.11	7.27
지역	대도시	66.8	5.20	6.57
	중소도시	70.3	5.17	8.35
	농어촌	72.4	4.24	4.24
가족 유형	양부모	70.0	5.23	7.44
	한부모·조손	63.2	4.57	7.45

주: 소득수준1과 소득수준2의 정의가 조사당시와 현재 시점이 다름에 유의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복지실태조사 재구성 및 재분석

2.1.3. 소결

앞서 제시한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현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기준에 따른 아동·청소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 아동·청소년’은 11.9%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의 아동·청소년은 각 수급권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하나 가장 기준소득이 높은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비율을 고려하면 5.5%의 아동·청소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기준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주요 지표로 정부의 제도와 정책 지원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또한 지역별로 저소득 아동·청소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였다. 분석 자료의 한계로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이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서 저소득 가구의 아동·청소년이 현저히 적었고, 인천/경기 지역, 광주/전남/전북/제주도 지역은 저소득 가구의 아동·청소년 비율이 서울에 비해 약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급여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의 아동·청소년 비율은 인천/경기 지역과 부산/경남/울산 지역이 높았고, 인천/경기 지역은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소득 및 지역을 기반한 지표는 향후 문화예술교육 지원대상의 범위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표이다.

다음으로 가구특성에 따른 아동·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전체 아동·청소년의 2.6%, 조손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의 아동·청소년은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양육자의 돌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소득도 낮아 매우 취약한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문화 관련 서비스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인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과 탈북 아동·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지난 3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8년 기준,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은 전체 초·중·고 학생 중 2.1%를 차지하며 이 중 초등학교생이 가장 많다. 탈북 아동·청소년은 전체 초·중·고 학생 중 0.05%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사회적·문화적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계층으로 볼 수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2012년 45.3만 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3년 44.2만 명, 2014년 42.8만 명, 2015년 40.5만 명으로 추정된다. 국제이동을 제외한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1.8만 명이며, 초·중·고등학교별로는 초등학교 2.8만 명, 중학교 6.7만 명, 고등학교 22.2만 명으로 고등학교 과정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월등히 높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점차 줄고 있으나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종합실태를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문화소외계층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미기능교실과 문화활동 모두 이용 여부와 필요 여부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먼저 취미기능교실은 이용 여부와 필요 여부 간의 차이가 52%p였으며, 문화활동은 그 차이가 59.7%p로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화와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 기초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순으로 이용률이 높으나, 필요 여부는 기초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이용 여부와 필요 여부 간의 비율 차이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청소년이 취미기능교실과 문화활동에 있어서 일반가구의 아동·청소년보다 상대적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 문화소외계층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화소외계층의 현황을 살펴봄에 있어 앞서 분석한 소득이 매우 주요한 지표임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차상위계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실제이용과 필요 여부 간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차상위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문화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부모·조손 가구의 아동·청소년도 필요 여부와 이용 여부 간 비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해당 가구의 아동·청소년은 돌봄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 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접하는데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주목해야 할 문화소외계층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관련 사회활동 참여율 및 참여횟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반가구의 아동·청소년들이 빈곤가구의 아동·청소년보다 문화·예술 관련 사회활동 참여율이 낮고,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환경에 참여할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조손 가구의 아동·청소년도 상대적으로 양부모 가구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문화·예술 환경에 참여할 기회가 적은 문화소외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은 사회·경제적이 요인에 따라 문화와 관련된 활동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소득수준이 낮고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한부모나 조손 가구, 다문화 가구, 탈북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문화와 관련된 활동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문화소외계층이 문화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해 문화활동과 관련한 제도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한 결과로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대상의 10%를 소외계층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등의 아동·청소년 및 가족으로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화적인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아동·청소년 문화소외계층의 비율이 다르고, 그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2.2 노인

2.2.1 노인 규모와 분포

먼저 우리나라의 2017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에 따른 노인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인구 중 노인은 14.2%(약 735만 명)이며 노인 중 연령대별로는 만65세 이상 74세가 8.0%, 만 75~84세가 4.9%, 만85세 이상이 1.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21.5%), 경북(19.0%), 전북(18.9%), 강원(18.1%), 부산(16.3%)의 순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았다.

〈표 II-2-12〉 지역별 노인 인구 비율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인구	노인 중 연령대별 구분			노인 비율 (만65세 이상)
		만65~74세	만75~84세	만85세 이상	
전체	51,779	8.0	4.9	1.3	14.2
서울특별시	9,857	8.3	4.4	1.1	13.8
부산광역시	3,471	9.9	5.2	1.2	16.3
대구광역시	2,475	8.2	4.7	1.1	14.0
인천광역시	2,949	6.8	3.8	1.0	11.7
광주광역시	1,464	7.2	4.1	1.0	12.4
대전광역시	1,502	7.0	4.0	1.0	12.0
울산광역시	1,165	6.3	3.0	0.7	10.0
세종특별자치시	280	5.2	3.4	1.0	9.6
경기도	12,874	6.5	3.9	1.0	11.4
강원도	1,550	9.5	6.8	1.8	18.1
충청북도	1,594	8.3	6.0	1.5	15.8
충청남도	2,117	8.6	6.7	1.8	17.1
전라북도	1,855	9.7	7.2	2.0	18.9
전라남도	1,896	10.7	8.6	2.3	21.5
경상북도	2,692	9.9	7.3	1.9	19.0
경상남도	3,380	8.2	5.3	1.4	14.9
제주특별자치도	657	7.6	5.0	1.5	14.2

자료: 행정안전부(2017), 주민등록인구현황 2017.12 기준(KOSIS 2018.12.10. 다운로드)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313만명, 여자노인이 422만명으로 남자노인(42.6%)보다 여자노인(57.4%)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두드러지는데 만65~74세 노인 중 남자노인 47.1%, 여자노인 52.9%, 만75~84세의 남자노인 39.5%, 여자노인 60.5%, 만85세 이상은 남자노인 26.2%, 여자노인 73.8%의 비율로 75세 미만에서 남자노인의 비율이 다소 높아진 것을 제외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자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져서 만85세 이상 노인 중 약 2/3는 여자노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2-13〉 노인 인구의 성별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노인 인구 수 (만65세 이상)			성별 비율							
				전체 노인		만65~74세		만75~84세		만85세 이상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	7,356	3,131	4,225	42.6	57.4	47.1	52.9	39.5	60.5	26.2	73.8
서울특별시	1,360	599	761	44.1	55.9	46.7	53.3	42.9	57.1	28.8	71.2
부산광역시	566	244	321	43.2	56.8	46.9	53.1	40.3	59.7	25.4	74.6
대구광역시	347	146	202	42.0	58.0	45.7	54.3	39.2	60.8	26.3	73.7
인천광역시	345	148	197	43.0	57.0	48.0	52.0	39.0	61.0	25.4	74.6
광주광역시	181	76	105	42.2	57.8	46.2	53.8	39.6	60.4	24.8	75.2
대전광역시	181	78	102	43.3	56.7	47.5	52.5	40.1	59.9	27.2	72.8
울산광역시	117	52	65	44.4	55.6	49.8	50.2	38.7	61.3	21.2	78.8
세종특별자치시	27	11	16	42.0	58.0	47.3	52.7	39.0	61.0	24.7	75.3
경기도	1,468	635	833	43.2	56.8	47.3	52.7	40.4	59.6	27.7	72.3
강원도	280	118	162	42.1	57.9	46.9	53.1	39.8	60.2	26.4	73.6
충청북도	252	106	146	42.1	57.9	47.6	52.4	38.7	61.3	25.7	74.3
충청남도	363	153	210	42.1	57.9	47.6	52.4	38.9	61.1	27.9	72.1
전라북도	351	144	207	41.1	58.9	46.8	53.2	37.7	62.3	25.9	74.1
전라남도	408	164	245	40.1	59.9	46.7	53.3	36.3	63.7	23.7	76.3
경상북도	513	211	302	41.2	58.8	47.1	52.9	37.3	62.7	25.3	74.7
경상남도	504	206	299	40.8	59.2	47.0	53.0	36.1	63.9	22.7	77.3
제주특별자치도	93	38	55	41.2	58.8	47.5	52.5	38.5	61.5	18.9	81.1

자료: 행정안전부(2017), 주민등록인구현황 2017.12. 기준(KOSIS 2018.12.21. 다운로드)

노인의 가구유형¹⁴⁾별 현황은 조사를 통해 확보되는 내용으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결과를 사용하였다.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만65세 이상인 가구수는 689만 가구로, 1세대 가구 약 249만(36.1%), 2세대 가구 198만(28.8%), 1인 가구(독거)가 137만(19.9%), 3세대 가구가 93만(13.6%), 4세대 이상 가구가 약 1.4만(0.2%), 비친족 가구가 10만 가구(1.4%)로 추정되었다.

노인 1인 가구는 전체 노인 가구의 1/5 수준인 19.9%로 외부와의 교류가 적을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예술활동과 교육 등 다양한 정보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인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남(26.3%), 경북(24.4%), 경남(24.2%), 전북(23.9%), 강원(22.3%), 충북(22.0%), 충남(21.3%)의 순으로 전라, 경상, 강원 등 도 지역의 노인 1인 가구 비중이 22~26% 범위로 높았다. 반면 서울(16.3%), 경기(16.5%), 세종(16.6%), 인천(18.1%) 등 대도시에서 노인 1인 가구 비중은 16~18%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4) 가구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 1세대 가구: 부부, 부부+미혼형제자매, 부부+기타친인척, 가구주+미혼형제자매, 가구주+기타친인척, 기타1세대가구
- 2세대 가구: 부부+미혼자녀, 부+미혼자녀, 모+미혼자녀, 부부+양친, 부부+한부모,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 조부모+미혼손자녀,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기타2세대 가구
- 3세대 가구: 부부+미혼자녀+양친, 부부+미혼자녀+부친, 부부+미혼자녀+모친, 기타3세대 가구

〈표 II-2-14〉 만65세 이상 노인 가구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노인 가구수	가구 유형별									
		1인가구		1세대가구		2세대가구		3세대가구		4세대이상가구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6,890	1,371	19.9	2,488	36.1	1,983	28.8	934	13.6	14	0.2
서울	1,272	209	16.4	432	33.9	431	33.9	182	14.3	2	0.2
부산	528	109	20.7	195	36.9	155	29.3	63	11.9	1	0.1
대구	331	67	20.3	123	37.2	93	28.0	44	13.3	1	0.2
인천	325	59	18.1	107	33.1	101	31.2	52	15.9	1	0.2
광주	174	35	20.1	64	36.9	50	28.7	23	13.0	0	0.2
대전	171	33	19.2	64	37.1	48	28.0	24	14.2	0	0.2
울산	110	21	19.2	41	37.3	30	27.8	16	14.7	0	0.2
세종	24	4	16.6	9	34.9	7	28.1	4	18.1	0	0.4
경기	1,378	228	16.5	471	34.2	418	30.3	237	17.2	3	0.3
강원	262	58	22.3	99	37.9	68	25.9	31	11.8	1	0.2
충북	237	52	22.0	90	37.9	61	25.6	30	12.6	1	0.3
충남	340	72	21.3	134	39.4	86	25.4	41	11.9	1	0.2
전북	327	78	23.9	125	38.4	82	25.3	35	10.6	1	0.2
전남	374	98	26.3	144	38.4	91	24.4	34	9.0	1	0.2
경북	479	117	24.4	188	39.2	117	24.4	48	10.0	1	0.2
경남	471	114	24.2	174	37.0	119	25.2	56	12.0	1	0.2
제주	87	15	17.6	29	33.1	26	30.2	14	16.6	0	0.4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KOSIS(2018.12.21.다운로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의 수는 2017년 기준, 4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8%였다(보건복지부, 2017). 지역별로 보면 부산(1.3%), 전북(1.3%), 전남(1.2%), 경북(1.1%), 강원(1.1%)의 순이었다.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17개 광역시·도 지역별 인구의 약 1% 내외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저소득 노인임을 알 수 있다.

〈표 II-2-15〉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인구 (A)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B)	전체 인구 대비율 (B/A ×100)
전체	51,779	430.5	0.8
서울특별시	9,857	76.9	0.8
부산광역시	3,471	43.8	1.3
대구광역시	2,475	25.5	1.0
인천광역시	2,949	24.8	0.8
광주광역시	1,464	12.1	0.8
대전광역시	1,502	11.8	0.8
울산광역시	1,165	5.3	0.5
세종특별자치시	280	1.1	0.4
경기도	12,874	71.3	0.6
강원도	1,550	17.7	1.1

구분	전체 인구 (A)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B)	전체 인구 대비율 (B/A ×100)
충청북도	1,594	13.3	0.8
충청남도	2,117	17.1	0.8
전라북도	1,855	24.2	1.3
전라남도	1,896	23.1	1.2
경상북도	2,692	29.6	1.1
경상남도	3,380	27.6	0.8
제주특별자치도	657	5.3	0.8

자료: 행정안전부(2017), 주민등록인구현황 2017.12 기준(KOSIS 2018.12.10. 다운로드)

보건복지부(2017),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p.38-39.

2.2.2 노인 문화·여가활동 현황

1) 조사대상 노인 현황

노인의 문화·여가활동분석을 위해 3년마다 실시되는 전국조사인 노인실태조사의 2017년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2008년 이후 4번째 실시되는 법정 조사로 매 3년 마다 실시되고 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2017년 6월 12일~8월 28일까지 934개 조사구의 만65세 이상 노인 10,299명(대리응답 226명 포함)에 대한 직접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 시 전국 노인가구의 거주분포를 고려한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노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42.5%, 여자가 57.5%의 비율을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만65세 이상 69세 이하가 32.4%, 만70세 이상 74세 이하가 24.9%, 만75세 이상 84세 이하가 34.3%, 만85세 이상이 8.5%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광역시의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가 42.2%, 광역도의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가 26.4%,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가 31.4%였다. 경제적 상태를 최저소득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비율로 알아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 경우가 7.9%였으며, 비수급인 경우는 92.1%였다.

〈표 II-2-16〉 노인의 문화여가활동 분석대상자 일반 현황

(단위: %, 명)

구 분	비율	
성별	남	42.5
	여	57.5
	계	100.0(10,299)
연령별	65-69세	32.4
	70-74세	24.9
	75-84세	34.3
	85세이상	8.5
	계	100.0(10,299)
지역별	특별사광역시의 동부	42.2
	도의 동부	26.4
	읍면부	31.4
	계	100.0(10,29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수급가구	7.9
	비수급가구	92.1
	계	100.0(10,29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2018.12.7.다운로드)

2) 문화·여가활동 현황

노인의 지난 1년간 주된 문화·여가활동 현황을 보면,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만 한 경우가 15.7%로 약 1/6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산책(15.7%), 그 외 사회활동(15.2%), 스포츠 참여(9.4%), 휴식활동기타(5.6%), 취미오락활동 중 화류·고스톱(5.5%), 화초가꾸기(5.5%), 종교 활동(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만 한 비율은 남자(15.3%)에 비해 여자(16.1%)가 다소 높았고, 남자노인은 산책(17.2%), 그 외 사회활동(12.5%), 스포츠참여(10.5%), 등산(6.9%) 등의 순 이었고, 여자노인은 그 외 사회활동(17.2%), 산책(14.6%), 스포츠참여(8.6%), 취미오락활동 중 화류·고스톱(6.8%) 등의 순이었다. 주된 문화여가활동이 문화참여활동인 경우는 남자(3.1%)에 비해 여자(4.7%)가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TV시청 및 라디오청취만 하거나 취미오락 중 화류·고스톱, 화초가꾸기 등 실내에서 가능한 활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스포츠참여, 등산, 산책, 낚시 등 실외 의 적극적 활동의 비율은 낮아졌다. 문화참여 활동의 비율은 만75세 미만 4.1%, 만75~84세 4.3%, 만85세 이상 2.5%으로 만85세 미만까지는 유지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2-17〉 노인의 지난 1년간 주된 문화여가활동(성별, 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성별		연령별			전체
			남	여	만65~74세	만75~84세	만85세이상	
TV시청 및 라디오청취만			15.3	16.1	13.9	16.7	24.9	15.7
TV시청, 라디오 청취 외 주된 문화여가 활동	문화관광 활동	영화보기	0.4	0.3	0.5	0.1	0.1	0.4
		기타	0.1	0.0	0.1	0.1	0.1	0.1
	문화참여 활동	악기연주/노래교실	1.2	3.7	2.6	2.9	1.7	2.7
		미술활동	1.2	0.6	0.9	0.9	0.5	0.9
		춤/무용	0.2	0.3	0.3	0.2	0.2	0.3
		기타	0.5	0.1	0.3	0.3	0.1	0.3
	스포츠경기관람		0.5	0.1	0.3	0.1	0.5	0.2
	스포츠참여		10.5	8.6	10.9	8.1	4.6	9.4
	자동차, 오토바이 드라이브		0.4	0.1	0.3	0.2	0.0	0.2
	취미 오락 활동	화류, 고스톱	3.8	6.8	4.0	7.6	7.3	5.5
		등산	6.9	1.3	5.2	2.0	0.2	3.7
		화초가꾸기	3.2	7.3	6.0	4.9	4.8	5.5
		독서, 만화책, 성경보기	3.9	4.7	4.0	4.9	5.2	4.4
		낚시	1.7	0.1	1.1	0.4	0.2	0.8
		바둑, 윗놀이	4.5	0.3	2.0	2.3	1.7	2.1
		교양강좌, 노인교실	1.0	1.3	1.1	1.3	1.3	1.2
		기타	3.1	2.0	2.8	2.0	1.9	2.5
	휴식 활동	산책	17.2	14.6	16.8	15.1	10.8	15.7
		음악감상 등	1.0	1.0	1.1	0.8	0.7	1.0
		기타	6.1	5.3	4.7	6.0	10.3	5.6
	사회 및 기타활동	종교활동	2.7	6.7	5.0	5.0	5.0	5.0
		그외 사회활동	12.5	17.2	14.7	15.8	16.4	15.2
		기타활동	2.1	1.6	1.6	2.2	1.4	1.8
계			100.0 (4,352)	100.0 (5,882)	100.0 (5,882)	100.0 (3,512)	100.0 (841)	100.0 (10,23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2018.12.7.다운로드)

노인이 희망하는 주된 문화·여가활동은 TV시청 및 라디오청취(29.9%), 관광활동(11.2%), 스포츠참여(8.5%), 산책(8.3%), 그 외 사회활동(7.5%)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악기노래/노래교실(6.7%), 화초가꾸기(4.2%), 종교활동(5.4%)에서 여자노인의 비율이 높았고, 등산(5.8%), 바둑·윗놀이(3.5%), 미술활동(1.4%)에서 남자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실외활동(스포츠 참여, 관광활동, 등산, 산책)에서 만80세 이상 등 고연령으로 갈수록 참여 희망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실내에서 가능한 활동(화류·고스톱, 독서, TV시청 및 라디오청취)에서 참여 희망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문화참여활동에 대해서는 6.8%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악기연주/노래교실(4.9%), 미술활동(0.9%), 춤/무용(0.5%), 기타(0.5%)의 순이었다. 악기연주/노래교실에서 여자노인의 희망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만75세 미만 7.6%, 만75~84세 6.2%, 만85세 이상 4.8%)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2-18〉노인의 희망하는 주된 문화여가활동 1순위(성별, 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성 별		연령별			전체
		남	여	만65~74세	만75~84세	만85세이상	
문화관람활동	영화보기	0.2	0.3	0.3	0.2	0.0	0.2
	기타	0.1	0.1	0.2	0.1	0.1	0.1
문화참여활동	악기연주/노래교실	2.5	6.7	5.5	4.2	3.5	4.9
	미술활동	1.4	0.6	1.0	0.9	0.8	0.9
	춤/무용	0.4	0.7	0.6	0.5	0.4	0.5
	기타	0.8	0.3	0.5	0.6	0.1	0.5
스포츠경기관람		0.6	0.1	0.3	0.3	0.5	0.3
스포츠참여		8.6	8.4	10.5	6.3	3.2	8.5
자동차,오토바이 드라이브		0.3	0.0	0.1	0.2	0.0	0.1
관광활동		11.4	11.1	13.7	8.1	6.2	11.2
취마오락활동	화류,고스톱	1.8	3.2	1.7	3.8	4.1	2.6
	등산	5.8	1.0	4.3	1.6	0.3	3.1
	화초가꾸기	2.0	4.2	3.1	3.5	2.8	3.2
	독서,만화책,성경보기	2.6	3.0	2.5	3.3	3.0	2.8
	낚시	2.8	0.1	1.6	0.8	0.4	1.3
	바둑,윷놀이	3.5	0.2	1.5	1.9	1.2	1.6
	교양강좌,노인교실	1.4	2.7	2.2	2.0	1.6	2.1
휴식활동	기타	2.0	1.5	1.8	1.6	1.4	1.7
	TV 시청	29.4	30.4	24.8	35.7	43.4	29.9
	산책	9.3	7.6	8.8	8.2	5.2	8.3
	음악감상 등	0.9	1.2	1.0	1.1	1.8	1.1
	기타	1.9	1.9	1.9	1.5	3.2	1.9
사회 및 기타활동	종교활동	2.7	5.4	4.4	3.9	4.9	4.3
	그외 사회활동	6.2	8.4	6.4	8.4	10.9	7.5
	기타활동	1.6	1.0	1.2	1.4	1.0	1.3
계		100.0 (4,285)	100.0 (5,787)	100.0 (5,850)	100.0 (3,450)	100.0 (774)	100.0 (10,07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2018.12.7.다운로드)

문화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다른 경로로서 평생교육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의 12.7%가 평생교육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다. 여자노인의 참여율이 16.3%로 남자노인 8.0%에 비해 2배 높았고, 연령별로는 만75세 미만 13.0%, 만75~84세 13.4%, 만85세 이상 8.2%로 만85세 전·후로 급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생교육을 이용한 경우 교육내용은 건강관리·운동관련 교육이 57.4%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관련 교육 29.4%, 어학 교육 5.9%, 정보화 교육 2.9%로 건강관리·운동 교육과 문화·예술 관련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7%에 달하였다.

〈표 II-2-19〉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여부(성별, 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성 별		연령별			전체
	남	여	만65~74세	만75~84세	만85세이상	
평생교육 참여경험 있음	8.0	16.3	13.0	13.4	8.2	12.7
평생교육 참여경험 없음	92.0	83.7	87.0	86.6	91.8	87.3
계	100.0 (4,355)	100.0 (5,879)	100.0 (5,881)	100.0 (3,510)	100.0 (843)	100.0 (10,23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2018.12.7.다운로드)

평생교육을 받은 장소는 경로당(48.5%)이 절반에 가깝게 많았고, 노인복지관/센터(22.1%), 구민회관/주민센터(10.3%), 공공문화센터(8.8%), 종교기관 운영 노인교실(7.4%)의 순이었다. 평생교육에 참여한 빈도는 주 2~3회가 47.8%, 주 1회 34.8%, 주 4회 이상 8.7%, 월 1회 5.8%로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91%는 주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20〉평생교육 노인참여자의 이용 현황(성별, 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성 별		연령별			전체
		남	여	만65~74세	만75~84세	만85세이상	
평생교육 내용	건강관리, 운동 관련 교육	41.8	32.9	45.1	39.1	44.1	57.4
	문화·예술 관련 교육	34.8	29.1	36.9	36.6	32.8	29.4
	어학 교육	10.6	8.9	11.2	11.4	10.2	5.9
	인문학 교육	3.6	7.8	2.1	3.4	4.0	1.5
	정보화 교육	6.7	17.0	2.9	6.3	7.8	2.9
	취업·직업 교육	0.8	2.0	0.4	1.4	0.0	0.0
	기타	1.6	2.3	1.4	1.7	1.1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생교육 이용 장소	노인(종합)복지관/센터	35.0	42.8	32.2	34.3	37.8	22.1
	경로당	19.2	10.7	22.3	11.7	27.4	48.5
	대한노인회 운영 노인교실(대학)	2.4	3.5	2.0	1.8	3.4	1.5
	종교기관 운영 노인교실(대학)	5.8	2.9	6.8	3.7	8.9	7.4
	시군구민회관/주민센터	13.8	12.1	14.4	16.8	9.6	10.3
	초·중고대학(교)	1.2	0.9	1.3	1.6	0.6	0.0
	공공문화센터	10.4	10.7	10.3	12.8	6.6	8.8
	시설문화센터	7.8	7.5	7.8	11.0	3.6	0.0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매체 활용	2.1	5.5	0.9	2.9	1.1	1.5
	기타	2.4	3.5	2.0	3.4	1.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생교육 참여 빈도	주 4회 이상	11.9	16.4	10.3	12.6	11.2	8.7
	주 2~3회	49.3	49.0	49.5	49.8	48.9	47.8
	주 1회	34.6	29.4	36.5	33.4	36.4	34.8
	2주1회	2.0	2.3	1.9	1.8	2.1	2.9
	월 1회	1.1	1.7	0.8	1.0	0.4	5.8
	월 1회 미만	1.1	1.2	1.0	1.3	0.8	0.0
계		100.0 (1,303)	100.0 (347)	100.0 (956)	100.0 (763)	100.0 (472)	100.0 (68)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2018.12.7.다운로드)

노인이 주로 문화참여활동 및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장소인 '노인복지관'의 이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 노인의 9.2%가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노인이 9.7%로 남자노인 8.5%에 비해 약간 높았을 뿐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만75~84세 노인의 이용율이 11.1%로 다른 연령대(만75세 미만 8.2%, 만85세 이상 7.5%) 노인에 비해 높았다.

〈표 II-2-21〉노인의 지난 1년간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성별, 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성 별		연령별			전체
	남	여	만65~74세	만75~84세	만85세이상	
노인복지관 이용경험 있음	8.5	9.7	8.2	11.1	7.5	9.2
노인복지관 이용경험 없음	91.5	90.3	91.8	88.9	92.5	90.8
계	100.0 (4,355)	100.0 (5,879)	100.0 (5,881)	100.0 (3,511)	100.0 (842)	100.0 (10,23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2018.12.7.다운로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 39.9%,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18.9%, 식사서비스 이용 13.2%,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35.0%),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17.5%), 식사서비스 이용(15.6%), 친목도모(15.0%),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10.7%)의 순이었고, 여자노인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43.1%),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19.8%), 식사서비스 이용(11.7%),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10.4%)의 순으로 나타나 남자노인의 경우 식사서비스 이용과 친목도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2-22〉노인복지관 이용의 주된 이유(성별, 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성 별		연령별			전체
	남	여	만65~74세	만75~84세	만85세이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10.7	10.4	10.7	11.7	1.7	10.5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35.0	43.1	44.5	35.0	36.7	39.9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17.5	19.8	18.8	19.4	16.7	18.9
식사서비스 이용	15.6	11.7	7.8	17.4	30.0	13.2
주간보호 등 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	0.0	0.2	0.0	0.3	0.0	0.1
상담,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1.4	0.7	0.4	1.6	1.7	1.0
일자리, 소득지원 프로그램 이용	2.7	4.2	4.5	2.8	1.7	3.6
자원봉사활동 참여	1.6	3.0	3.9	0.5	1.7	2.5
친목도모	15.0	6.5	8.9	10.9	10.0	9.9
기타	0.5	0.4	0.4	0.5	0.0	0.4
계	100.0 (366)	100.0 (566)	100.0 (485)	100.0 (386)	100.0 (60)	100.0 (93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2018.12.7.다운로드)

연령대별로 만75세 미만은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44.5%),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18.8%),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10.7%)로 나타났고, 만75~84세는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35.0%),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19.4%), 식사서비스 이용(17.4%)이었으며, 만85세 이상은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36.7%), 식사서비스 이용(30.0%),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16.7%)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식사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취미·여가활동을 이유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미이용의 이유를 알아본 결과,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20.2%), 이용하는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19.2%), 이용하기에는 젊다고 생각해서(17.6%), 시간이 없어서(15.1%), 몸이 불편해서(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23〉노인복지관 미이용의 주된 이유(성별, 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성 별		연령별			전체
	남	여	만65~74세	만75~84세	만85세이상	
시설이 좋지 않아서	0.3	0.3	0.3	0.3	0.1	0.3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4.8	4.0	4.5	4.2	3.6	4.3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통이 불편하여	16.2	23.2	14.7	28.3	27.1	20.2
이용하는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	21.4	17.5	16.9	23.2	19.6	19.2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3.2	4.8	3.4	5.4	3.1	4.1
시간이 없어서	15.6	14.7	19.3	10.2	4.2	15.1
몸이 불편해서	9.2	15.1	6.6	17.8	34.8	12.6
이용하기에는 젊다고 생각해서	23.5	13.2	28.1	3.2	0.3	17.6
시설이 없거나 유지되지 않아서	0.4	0.2	0.2	0.5	0.4	0.3
다른 여가시설을 이용해서	5.3	6.6	5.7	6.6	6.3	6.1
기타	0.3	0.4	0.4	0.3	0.4	0.3
계	100.0 (3,919)	100.0 (5,220)	100.0 (5,364)	100.0 (3,060)	100.0 (713)	100.0 (9,13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2018.12.7.다운로드)

3) 노인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여가활동

전반적으로 노인 계층은 젊은 연령대의 계층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등에 대한 정보, 참여에서 소외되는 면이 있다. 노인 중 경제적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과 지역별(읍·면 거주 등) 기준으로 좁혀서 문화·여가활동의 현황 및 만족도 수준을 다음과 살펴보았다.

경제적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노인은 지난 1년간의 주된 문화·여가활동이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만(22.0%)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산책(15.5%), 그 외 사회활동(14.2%), 휴식활동 기타(8.4%), 종교활동(7.3%), 독서 등(5.5%), 화류·고스톱(5.3%)의 순이었다.

문화참여활동은 4.5%로 전체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만 한다는 응답이 17.0%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사회활동(19.3%), 산책(12.2%), 화류·고스톱(9.7%), 스포츠참여(6.9%)의 순이었다. 문화참여활동은 서울 및 광역시 동부(4.3%), 도의 동부(4.5%), 읍·면(3.4%)으로 나타나 읍·면 지역 노인의 참여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2-24〉 노인의 지난 1년간 주된 문화여가활동(수급여부, 지역별)

(단위: %, 명)

구 분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지역별			전체
			수급	비수급	서울광역시 의 동부	도의 동부	읍면	
TV시청 및 라디오청취만			22.0	15.2	16.1	13.6	17.0	15.7
TV시청, 라디오 청취 외 주된 문화여가 활동	문화관람 활동	영화보기	0.2	0.4	0.6	0.2	0.1	0.4
		기타	0.0	0.1	0.1	0.1	0.1	0.1
	문화참여 활동	악기연주/노래교실	3.0	2.6	3.0	2.7	2.1	2.7
		미술활동	1.0	0.8	0.9	1.1	0.6	0.9
		춤/무용	0.4	0.3	0.3	0.4	0.2	0.3
		기타	0.1	0.3	0.1	0.3	0.5	0.3
	스포츠경기관람		0.2	0.3	0.3	0.1	0.3	0.2
	스포츠참여		4.9	9.8	11.0	9.8	6.9	9.4
	자동차,오토바이 드라이브		0.0	0.2	0.2	0.3	0.2	0.2
	취마 오락 활동	화류,고스톱	5.3	5.5	3.6	3.6	9.7	5.5
		등산	1.1	3.9	5.1	3.1	2.3	3.7
		화초가꾸기	3.1	5.7	4.8	5.7	6.4	5.5
		독서,만화책,성경보기	5.5	4.3	4.5	4.7	4.0	4.4
		낚시	0.2	0.8	0.8	0.8	0.7	0.8
		바둑,윷놀이	0.6	2.2	2.2	2.0	2.0	2.1
		교양강좌,노인교실	1.6	1.1	1.2	1.5	0.9	1.2
		기타	2.7	2.4	2.2	2.4	2.8	2.5
		휴식활동	산책	15.5	15.7	17.8	16.5	12.2
	음악감상 등		1.4	0.9	1.1	0.9	0.9	1.0
	기타		8.4	5.4	5.0	6.6	5.6	5.6
	사회 및 기타활동	종교활동	7.3	4.8	6.3	5.9	2.5	5.0
		그외 사회활동	14.2	15.3	11.6	16.0	19.3	15.2
		기타활동	1.2	1.9	1.1	2.0	2.6	1.8
	계			100.0 (812)	100.0 (9,425)	100.0 (4,325)	100.0 (2,699)	100.0 (3,21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8.12.7.다운로드)

경제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수급 노인의 경우,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으로 TV시청 및 라디오청취가 4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관광활동(8.3%), 산책(7.7%), 그외 사회활동(6.9%), 스포츠참여(5.9%), 종교활동(5.2%)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비수급노인과 비교할 때 TV시청 및 라디오청취를 희망하는 비율은 11%p 높고(비수급노인 29.0%), 관광활동(비수급 노인 희망율 11.5%), 스포츠참여(8.7%) 산책(8.4%), 그 외 사회활동(7.5%)과 비교해서 모두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악기연주·노래교실 등 문화참여활동 희망 비율은 수급노인 7.1%, 비수급노인 6.8%로 수급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거주 노인의 희망 문화여가활동에서 TV시청 및 라디오청취가 35.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관광활동(9.1%), 그 외 사회활동(9.1%), 스포츠참여(6.4%), 산책(6.3%), 악기연주·노래교실(5.2%), 화류·고스톱(4.8%) 등의 순이었다. 문화참여활동은 7.0%로 읍·면 거주노인의 악기연주·노래교실 등의 문화참여활동에 대한 욕구 수준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25〉 노인의 희망하는 주된 문화여가활동 1순위(수급여부, 지역별)

(단위: %, 명)

구 분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지역별			전체
		수급	비수급	서울 광역시 동부	도의 동부	읍·면	
문화관람활동	영화보기	0.4	0.2	0.2	0.4	0.1	0.2
	기타	0.0	0.2	0.3	0.1	0.0	0.1
문화참여활동	악기연주/노래교실	4.7	4.9	4.7	4.9	5.2	4.9
	미술활동	0.9	0.9	0.8	1.0	0.9	0.9
	춤/무용	1.0	0.5	0.5	0.7	0.4	0.5
	기타	0.5	0.5	0.5	0.5	0.5	0.5
스포츠경기관람		0.3	0.3	0.2	0.3	0.4	0.3
스포츠참여		5.9	8.7	9.3	9.8	6.4	8.5
자동차,오토바이 드라이브		0.0	0.2	0.1	0.1	0.2	0.1
관광활동		8.3	11.5	12.1	12.2	9.1	11.2
취마·오락활동	화류,고스톱	2.5	2.6	1.6	1.6	4.8	2.6
	등산	1.0	3.2	4.1	2.8	1.9	3.1
	화초가꾸기	1.6	3.4	2.9	3.6	3.4	3.2
	독서,만화책,성경보기	3.1	2.8	2.9	3.0	2.5	2.8
	낚시	0.4	1.3	1.3	1.2	1.2	1.3
	바둑,윷놀이	1.3	1.6	1.3	1.8	1.7	1.6
	교양강좌,노인교실	2.0	2.1	1.9	2.1	2.4	2.1
	기타	1.9	1.7	1.8	1.6	1.7	1.7
휴식활동	TV 시청	40.8	29.0	25.9	30.3	35.1	29.9
	산책	7.7	8.4	11.0	6.5	6.3	8.3
	음악감상 등	1.8	1.0	1.4	0.6	1.0	1.1
	기타	1.5	1.9	2.4	1.8	1.3	1.9
사회 및 기타활동	종교활동	5.2	4.2	5.4	4.4	2.5	4.3
	그외 사회활동	6.9	7.5	6.4	7.2	9.1	7.5
	기타활동	0.5	1.3	0.8	1.3	1.8	1.3
계		100.0 (795)	100.0 (9,281)	100.0 (4,261)	100.0 (2,667)	100.0 (3,148)	100.0 (10,076)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8.12.7.다운로드)

다음으로 평생교육 참여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저소득 노인의 참여 경험율은 10.7%로 비수급 노인 12.9%과 비교하여 낮았으며,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 거주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12.2%로 서울 및 광역시 동부(12.9%), 도의 동부(13.0%)에 비해 낮았다.

〈표 II-2-26〉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여부(수급여부, 지역별)

(단위: %, 명)

구 분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지역별			전체
	수급	비수급	서울 광역시의 동부	도의 동부	읍면	
평생교육 참여경험 있음	10.7	12.9	12.9	13.0	12.2	12.7
평생교육 참여경험 없음	89.3	87.1	87.1	87.0	87.8	87.3
계	100.0 (813)	100.0 (9,422)	100.0 (4,326)	100.0 (2,698)	100.0 (3,210)	100.0 (10,23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8.12.7.다운로드)

평생교육 참여 내용 관련, 경제적 상황 차이에 따라서는 수급 노인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 교육 37.9%, 건강관리·운동 관련 교육 31.0%, 어학교육 12.6%로 나타났고, 비수급 노인의 경우 건강관리·운동 관련 교육 42.7%, 문화·예술교육 34.6%, 어학교육 10.5%의 순으로 나타나 저소득 노인의 문화예술 관련 교육 이용률이 다소 높았다.

평생교육 이용 기관은 수급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관이 47.1%로 가장 많았고, 경로당 16.1%, 종교기관 운영 노인교실 8.0%, 구민회관/주민센터 8.0%의 순이었으며, 비수급 노인은 노인복지관 34.1%, 경로당 19.5%, 구민회관/주민센터 14.2%, 공공문화센터 10.8%의 순이었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지원을 받는 노인은 노인복지관, 종교기관 운영 노인교실을 통해 평생교육을 받는 비율이 비수급 노인에 비해 높았고, 비수급 노인의 경우 공공문화센터를 통해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평생교육 이용 빈도에서 생활보장 여부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읍·면 거주 노인의 평생교육 내용은 건강관리·운동 관련 교육(50.1%), 문화·예술관련 교육(28.6%), 정보화교육(8.4%)의 순으로 나타나 문화·예술관련 교육에서 서울 및 광역시 동부 37.9%, 도의 동부 36.9%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건강관리·운동 관련 교육 및 정보화 교육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기관은 읍·면지역의 경우 경로당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복지관 28.2%, 공공문화센터 10.3%, 구민회관/주민센터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및 광역시 동부가 노인복지관 37.6%, 구민회관/주민센터 16.6%, 공공문화센터 10.7%이며, 도의 동부가 노인복지관 38.1%, 구민회관/주민센터 15.3%, 경로당 12.2%인 것과 비교할 때, 읍·면지역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접근성이 낮고 구민회관/주민센터의 기능이 동부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읍·면 거주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경로당인 것으로 보인다.

읍·면 거주 노인의 평생교육 이용 횟수를 보면 주2~3회(49.1%), 주1회(35.5%), 주4회 이상(9.0%)으로 주 1회 이상의 비율이 90% 이상이나, 2주 1회 비율이 3.6% 등 서울 및 광역시 동부와 광역 도의 동부와 비교할 때 이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I-2-27〉평생교육 노인참여자의 이용 현황(수급여부, 지역별)

(단위: %, 명)

구 분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지역별			전체
		수급	비수급	서울광역시의 동부	도의 동부	읍면	
평생교육 내용	건강관리, 운동 관련 교육	31.0	42.7	35.2	43.5	50.1	41.8
	문화예술 관련 교육	37.9	34.6	37.9	36.9	28.6	34.8
	어학 교육	12.6	10.5	13.2	9.7	7.7	10.6
	인문학 교육	4.6	3.5	4.8	2.6	2.8	3.6
	정보화 교육	8.0	6.6	6.6	4.8	8.4	6.7
	취업직업 교육	0.0	0.9	1.3	0.9	0.3	0.8
	기타	5.7	1.3	1.1	1.7	2.0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생교육 이용 장소	노인(종합)복지관/센터	47.1	34.1	37.6	38.1	28.2	35.0
	경로당	16.1	19.5	9.3	12.2	40.0	19.2
	대한노인회 운영 노인교실(대학)	2.3	2.4	2.1	2.6	2.6	2.4
	종교기관 운영 노인교실(대학)	8.0	5.6	7.3	5.4	3.8	5.8
	시군구민회관/주민센터	8.0	14.2	16.6	15.3	8.5	13.8
	초중고대학(교)	6.9	0.7	1.6	1.4	0.3	1.2
	공공문화센터	5.7	10.8	10.7	10.2	10.3	10.4
	사설문화센터	2.3	8.1	9.1	9.7	3.8	7.8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매체 활용	2.3	2.2	3.6	2.0	0.3	2.1
	기타	1.1	2.5	2.1	3.1	2.3	2.4
	계	100.0 (86)	100.0 (1,217)	100.0 (561)	100.0 (352)	100.0 (390)	100.0 (1,303)
평생교육 참여 빈도	주 4회 이상	11.6	11.9	14.3	11.1	9.0	11.9
	주 2~3회	46.5	49.6	51.0	47.4	49.1	49.3
	주 1회	37.2	34.4	31.7	38.4	35.5	34.6
	2주 1회	1.2	2.1	1.4	1.1	3.6	2.0
	월 1회	2.3	1.0	0.7	2.0	0.5	1.1
	월 1회 미만	1.2	1.1	0.9	0.0	2.3	1.1
	계	100.0 (86)	100.0 (1,217)	100.0 (561)	100.0 (352)	100.0 (390)	100.0 (1,303)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2018.12.7.다운로드)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을 보면 수급 노인의 이용 경험 비율이 11.7%로 비수급 노인(8.9%)에 비해 높았고, 지역별로는 읍·면 거주 노인이 7.8%로 서울 및 광역시 동부(9.7%), 도의 동부(9.9%)로 읍·면 거주 노인의 노인복지관 이용 비율이 낮았다.

〈표 II-2-28〉노인의 지난 1년간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수급여부, 지역별)

(단위: %, 명)

구 분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지역별			전체
	수급	비수급	서울광역시의 동부	도의 동부	읍면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 있음	11.7	8.9	9.7	9.9	7.8	9.2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 없음	88.3	91.1	90.3	90.1	92.2	90.8
계	100.0 (812)	100.0 (9,422)	100.0 (4,326)	100.0 (2,699)	100.0 (3,210)	100.0 (10,23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2018.12.7.다운로드)

노인복지관 이용의 주된 이유는 수급 노인의 경우 식사서비스 이용이 36.2%로 가장 많았고,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 33.0%,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12.8%의 순이었고, 비수급 노인의 경우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 40.7%,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19.5%,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11.0%의 순으로 나타나 수급 노인의 경우 식사서비스 이용이 가장 높지만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비율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 거주 노인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이 37.2%였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16.4%, 친목도모 13.6%,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11.6%로 나타났다. 서울 및 광역시 동부와 도의 동부 거주 노인과 비교하면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 식사서비스 이용을 위한 복지관 이용 비율이 낮고 일자리·소득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이용률이 6.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2-29〉노인의 노인복지관 이용의 주된 이유(수급여부, 지역별)

(단위: %, 명)

구 분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지역별			전체
	수급	비수급	서울·광역시의 동부	도의 동부	읍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6.4	11.0	10.5	9.8	11.6	10.5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33.0	40.7	39.9	42.4	37.2	39.9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12.8	19.5	18.1	22.3	16.4	18.9
식사서비스 이용	36.2	10.6	16.5	12.1	8.8	13.2
주간보호 등 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	1.1	0.0	0.2	0.0	0.0	0.1
상담,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0.0	1.1	1.0	0.0	2.4	1.0
일자리, 소득지원 프로그램 이용	1.1	4.1	3.8	1.5	6.0	3.6
자원봉사활동 참여	0.0	2.7	1.7	2.7	3.2	2.5
친목도모	8.5	10.0	7.9	9.1	13.6	9.9
기타	1.1	0.4	0.5	0.0	0.8	0.4
계	100.0 (94)	100.0 (838)	100.0 (419)	100.0 (264)	100.0 (250)	100.0 (93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8.12.7.다운로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수급 노인은 몸이 불편해서 25.7%, 이용하는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 21.7%, 거리가 너무 멀어서(교통이 불편해서) 17.2%, 이용하기에는 젊다고 생각해서 12.3%로 나타났다. 비수급 노인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교통이 불편해서) 20.4%, 이용하는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 19.0%, 이용하기에는 젊다고 생각해서 18.0%, 시간이 없어서 15.8%의 순으로 나타나 수급 노인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와 거리(교통편)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가 복지관 이용에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거주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교통이 불편해서)가 39.5%로 가장 많았고 시간이 없어서 14.9%, 이용하는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 12.9%, 이용하기에는 젊다고 생각해서 11.1%로 나타났다. 이는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비교할 때 거리와 교통편에 따른 접근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표 II-2-30〉노인의 노인복지관 미이용의 주된 이유(수급여부, 지역별)

(단위: %, 명)

구 분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지역별			전체
	수급	비수급	서울·광역시의 동부	도의 동부	읍면	
시설이 좋지 않아서	0.6	0.2	0.2	0.5	0.2	0.3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3.4	4.4	5.2	4.8	2.8	4.3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통이 불편하여	17.2	20.4	10.5	12.4	39.5	20.2
이용하는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	21.7	19.0	20.7	24.3	12.9	19.2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6.5	3.9	5.4	4.6	1.9	4.1
시간이 없어서	6.9	15.8	16.1	13.8	14.9	15.1
몸이 불편해서	25.7	11.5	13.5	13.3	10.8	12.6
이용하기에는 젊다고 생각해서	12.3	18.0	21.1	20.0	11.1	17.6
시설이 없거나 유지되지 않아서	0.1	0.3	0.3	0.2	0.5	0.3
다른 여가시설을 이용해서	4.9	6.1	6.5	6.1	5.4	6.1
기타	0.7	0.3	0.5	0.3	0.2	0.3
계	100.0 (697)	100.0 (8,444)	100.0 (3,842)	100.0 (2,400)	100.0 (2,901)	100.0 (9,13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8.12.7.다운로드)

4) 노인의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노인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 44.1%, 그저 그렇다 32.4%, 만족하지 않는다 17.6%, 매우 만족한다 3.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3%로, 만족한다는 경우가 47.6%로 만족하지 않는(19.9%) 경우보다 많았다.

성별로 보면 여자노인의 만족 비율이 46.0%, 불만족 비율 20.4%로, 남자노인의 만족 비율 50.0%, 불만족 비율 19.3%에 비해 만족률은 낮고 불만족률은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만75세 미만 노인은 문화·여가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51.4%, 불만족하는 경우 18.0%, 만75~84세 노인은 만족 44.4%, 불만족 21.4%이었으며, 만85세 이상 노인은 만족 34.5%, 불만족 27.5%로 나타나 만75세 미만 노인의 절반은 문화·여가생활에 만족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하는 비율은 16.9%p 감소하고, 불만족하는 비율은 9.5%p 증가하여 연령과 문화·여가생활만족도의 반비례 경향을 보였다.

〈표 II-2-31〉노인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성별, 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성 별		연령별			전체
	남	여	만65~74세	만75~84세	만85세이상	
매우 만족함	4.1	3.1	4.2	2.9	1.3	3.5
만족함	45.9	42.9	47.2	41.5	33.2	44.1
그저 그렇다	30.7	33.7	30.6	34.2	38.0	32.4
만족하지 않음	17.2	17.9	15.9	18.9	24.5	17.6
전혀 만족하지 않음	2.1	2.5	2.1	2.5	3.0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2018.12.7.다운로드)

경제적 상황에 따른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를 보면 수급 노인의 만족비율은 28.6%, 불만족 비율은 37.0%인 것에 반해, 비수급 노인의 만족비율 49.3%, 불만족비율 18.4%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읍·면 거주 노인의 문화여가생활 만족 비율은 47.4%, 불만족 비율 17.9%로 서울 및 광역시 동부 지역 노인의 만족 비율 47.4%, 불만족 비율 22.2%와 광역도의 동부 거주 노인의 만족비율 48.5%, 불만족 비율 18.6%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지역별 문화여가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32〉 노인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수급여부, 지역별)

(단위: %, 명)

구 분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지역별			전체
	수급	비수급	서울광역시의 동부	도의 동부	읍면	
매우 만족함	1.0	3.8	4.0	2.6	3.7	3.5
만족함	27.6	45.5	43.4	45.9	43.7	44.1
그저 그렇다	34.4	32.2	30.4	32.9	34.7	32.4
만족하지 않음	30.2	16.5	19.2	16.5	16.4	17.6
전혀 만족하지 않음	6.8	1.9	3.0	2.1	1.5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2018.12.7.다운로드)

2.2.3 소결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 비율은 2017년 말 기준 전국의 14.2%이며 지역별로는 11.7%(인천)에서 21.5%(전남)의 범위로 파악된다. 연령별로는 만75세 미만 노인 비중이 만75세 이상 노인에 비해 약 1.3배 높아 문화여가 등 사회활동에서 활동적인 연령대 노인 비율이 다소 높았다. 성별로는 여자노인 비중이 높으며, 가구유형별로 노인독거가구의 비중이 전체 노인가구의 약 1/5 수준으로 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약 1/4까지 높아지고, 서울 및 광역시 거주 노인은 1/6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은 약 1% 내외로 볼 수 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약 16%는 문화여가생활로 TV시청 및 라디오청취 등 소극적 활동만을 하였고 이는 만85세 이상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만85세 이상 노인의 1/4), 경제적 저소득 노인일수록(수급노인의 22%) 더욱 그러하였다. 노인의 문화여가활동 특성 중 하나는 연령이 만85세 이상 등 후기 노령기에 진입하면서 건강 등의 문제로 실외, 적극적 문화여가 활동의 급감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음악·미술 등 문화참여활동에 대해서 노인의 약 4~5%가 주된 문화여가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약 6~7%가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이라고 하였는데 연령이 높아지면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노인의 약 13%는 평생교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평생 교육 내용 중 문화·예술관련 교육이 약 30%로 건강관리·운동관련 교육(5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곳

은 경로당이 가장 많았고 노인복지관(센터)의 순이었는데, 서울 및 광역시 거주 노인은 노인복지관(센터)을 통해 평생교육을 접하는 비율이 높았고, 읍면 거주 노인은 경로당에서 평생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아서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 기관의 차이를 보였다.

노인의 약 9%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데, 연령대로는 75~84세 미만(노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연령대)에서, 저소득(수급) 노인의 이용 경험율이 높았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이 약 40%로 나타나 노인복지관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확대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특별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경우 식사서비스 이용(36.2%)과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33.0%)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문화소외지역의 집중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접촉 기관으로 노인 복지관이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동·교통의 어려움(20.2%)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대상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실시에서 이송서비스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과 같이 지역적 문화소외를 경험하는 경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지역특성에 맞게 접촉하는 것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저소득인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문화여가생활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고연령 노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저소득 노인에 대해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및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3 장애인

2.3.1 장애인 현황 실태

1) 장애인의 법률적 정의 및 장애유형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정의하는 법률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장애인복지법』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고,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15개 유형의 장애의 종류와 특징은 <표 II-2-33>과 같다.

〈표 II-2-33〉 장애의 종류와 특징

분류	유형	특징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내부 기관 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
	정신장애	장루·요루장애
		배변 기능이나 배뇨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한 경우
		간장애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 장애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
		뇌전증장애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적장애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성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

현재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사업 중 장애인복지관협회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대상 교육사업의 대상은 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이 시설들의 주 이용자는 15개 장애유형 중 주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 II-2-34>처럼 발달장애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더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정신적 장애를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5개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쳐 발달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표 II-2-3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지적장애는 주로 지능지수에 의하여 3등급으로 구분되고 있다. 지적발달이 가장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경우를 지적장애 1급으로 하고 있으며, 지능지수 35미만이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가 35이상 50미만인 경우이고, 지적장애 3급은 지능지수가 50이상 70이하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은 앞으로 다른 기준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표 II-2-35〉 지적장애인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등급

장애등급	장애 정도
제1급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자폐성장애인을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질병분류인 ICD-10의 진단지침에 따라 진단명이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F84)인 경우에 자폐성 장애 판정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즉 소아기 자폐증을 포함하여, 비전형 자폐증, 레트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자폐성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①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②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③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④ 자폐성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3등급으로 장애를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앞의 지적장애와 마찬가지로, 현재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은 앞으로 다른 기준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표 II-2-36〉 자폐성 장애의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장애등급	장애정도
제1급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제2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장애인 실태

장애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등록장애인 현황, 소득 및 건강상태,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 및 이유, 장애차별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았다. 등록장애인 현황은 보건복지부(2018)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1) 연도별 등록장애인 수 추이

장애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7년 12월 말 등록장애인 인구는 2,545,637명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기준 총인구(5,178만 명) 대비 4.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범주 확대 등으로 인해 등록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대에는 증가 현상이 둔화되는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연말 기준 장애인등록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2-37〉 연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천명)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	1,454	1,611	1,777	1,968	2,015	2,247	2,429	2,517	2,519	2,511	2,501	2,494	2,490	2,511	2,546

자료: 보건복지부(2018), 장애인등록현황

(2)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수

장애유형별로 등록장애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다. 전체 등록장애인 254만 6천여 명 중 지체장애인은 125만 4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 중 49.3%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각각 20만 1천명(7.9%)과 2만4천명(0.9%)이다. 2018년에는 조금 더 늘어 22만 6,000명(지적 20만 1,000명, 자폐성 2만 5,000명)

이다. 이 중 성인이 17만 명(75%), 영유아 및 아동이 47천 명(21%), 65세 이상이 약 9,000명(4%)이다.

또한 전체 장애인 수(255만 명)는 정체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2010년에는 17만6천 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22만 5천 명으로 늘어났고, 2022년에는 2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II-2-38〉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천명, %)

장애유형	인원	구성비
지체장애	1,254	49.3
뇌병변장애	253	9.9
시각장애	253	9.9
청각장애	302	11.9
언어장애	20	0.8
안면장애	3	0.1
신장장애	84	3.3
심장장애	6	0.2
호흡기장애	12	0.5
간장애	11	0.4
장루·요루 장애	15	0.6
뇌전증 장애	7	0.3
지적장애	201	7.9
자폐성장애	24	0.9
정신장애	101	4.0
계	2,546	100.0

자료: 보건복지부(2018), 장애인등록현황

(3) 연령별 등록장애인 수

연령별 상황을 보면, 61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전체의 54.0%를 차지하고 있다. 노년기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상황이 많음과 더불어, 장애인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의 장애인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표 II-2-39〉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인원	구성비
0-20세	99	3.9
21세-30세	94	3.7
31세-40세	152	6.0
41세-50세	302	11.9
51세-60세	523	20.5
61세 이상	1,376	54.0
계	2,546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8), 장애인등록현황

(4) 장애등급 및 성별 등록장애인 수

전체 장애인 중 남성은 1,476천명으로 5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1,070천명으로 4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각 등급별로도 대략적으로 6:4의 비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2-40〉 장애등급 및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천명, %)

장애등급	남		여		합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1급	117	58.8	82	41.2	199	100
2급	199	58.2	142	41.8	341	100
3급	267	60.8	172	39.2	439	100
4급	195	51.5	184	48.5	379	100
5급	289	53.0	256	47.0	545	100
6급	410	63.7	234	36.3	644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8), 장애인등록현황

(5) 시도별 등록장애인 수

2016년 말 기준으로 시도별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가장 많은 522,437명(20.8%)이 거주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391,027명, 15.6%), 경북(169,643명, 6.8%), 부산(168,950명, 6.7%)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인구가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에 많다보니 장애인도 대도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시도별 구성비율과 장애인 구성비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 경기의 경우 장애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비율에 비해 적은 편이고, 반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전체 인구비율에 비해 장애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제주의 경우 전체 인구비율과 장애인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결국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 밀집 지역에는 장애인이 인구구성비율에 비해 적은 수준이고,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시는 장애인이 전체 인구 구성 비율과 비슷하게 존재했고,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와 같은 도 단위 지역의 경우 장애인이 인구구성비율에 비해 많았다.

〈표 II-2-41〉 시도별 등록장애인 현황(2016년 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등록장애인				전체 인구
	인원	지역별 비율	남	여	지역별 비율
서울	391,027	15.6	227,271	163,756	19.2
부산	168,950	6.7	100,326	68,624	6.8
대구	117,111	4.7	69,090	48,021	4.8
인천	135,623	5.4	81,961	53,662	5.7
광주	68,569	2.7	38,538	30,031	2.8
대전	71,425	2.8	41,767	29,658	2.9
울산	49,533	2.0	30,082	19,451	2.3
세종	9,845	0.4	5,787	4,058	0.5
경기	522,437	20.8	311,539	210,898	24.6
강원	98,928	3.9	57,623	41,305	3.0
충북	94,688	3.8	54,283	40,405	3.1
충남	126,406	5.0	72,848	53,558	4.1
전북	130,345	5.2	71,020	59,325	3.6
전남	141,578	5.6	75,500	66,078	3.7
경북	169,643	6.8	96,293	73,350	5.2
경남	180,665	7.2	104,838	75,827	6.5
제주	34,278	1.4	18,822	15,456	1.2
계	2,511,051	100.0	1,457,588	1,053,463	100.0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 통계연보.

(6) 장애인 가구 소득 실태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장애인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2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상당히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외부 신체기능장애 53.0%, 내부기관장애 47.8%, 발달장애 39.6%, 정신장애 66.2%로, 정신장애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더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소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발달장애인의 소득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 등과 함께 살다보니 다른 가구원의 소득에 의해 가구소득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표 II-2-42〉 장애인 가구 소득 실태

(단위: %)

가구소득	외부 신체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전체
50만원 이하	4.6	3.8	0.8	2.3	4.2
51-100만원	21.2	15.3	10.5	33.2	20.6
101-150만원	14.9	16.7	12.0	18.8	14.9
151-200만원	12.3	12.0	16.3	11.9	12.6
201-250만원	9.0	13.5	9.9	9.3	9.3
251-300만원	8.6	10.7	8.8	7.7	8.7
301-350만원	6.9	4.3	11.3	3.1	6.9
351-400만원	5.3	5.6	7.0	7.7	5.5
401만원 이상	17.3	18.1	23.4	5.9	1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8.10.18.다운로드)

2.3.2 장애인의 문화관련 욕구와 이용실태

장애인 문화 관련 욕구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 및 여가활동 실태, 문화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장애인 실태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에서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2018.10.18. 다운로드)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2007년 법 개정 이후 매 3년 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번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는 1990년 1차 조사 이후 8번째로 실시되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2017년 9월~10월까지 전국 총 36,200가구에 대한 방문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통계의 신뢰수준 95% 하에 표본오차는 $\pm 0.515\%$ 이었다.

1) 문화 및 여가활동 실태

지난 1주일 동안 참여한 문화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다수(96.6%)의 장애인이 TV를 시청하였고, 사교일(51.4), 휴식(44.3%), 가족관련 일(외식 등)(34.3%), 컴퓨터 인터넷(30.5%), 사회봉사 및 종교 활동(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문화 및 여가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감상 및 관람(6.4%), 승부놀이(4.2%), 문화예술참여(3.5%), 자기계발 활동(6.2%), 여행(6.8%), 해외여행(5.5%) 등의 활동은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즉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5개 장애유형을 외부 신체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¹⁵⁾ 외부 신체기능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여행,

15) 장애인의 경우 지역별 특성 보다는 장애유형별 특성이 더 강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에 보다 민감할 필

해외여행, 사교일, 휴식에의 참여가 비교적 많았으나, 문화예술관람, 컴퓨터 및 인터넷, 문화예술참여 등의 활동에의 참여는 비교적 적었다. 또 내부기관 장애인의 경우 TV시청, 문화예술참여, 자기계발 활동, 해외여행 등의 활동이 비교적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많았지만, 장애인단체 활동은 비교적 적었다. 내부기관 장애유형의 단체나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발달장애인들은 문화예술 관람, 컴퓨터 및 인터넷, 스포츠, 가족관련 일의 참여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많았으나, 해외여행, 사교 일의 참여는 비교적 저조하였다. 정신장애인들은 문화예술참여, 사회봉사 및 종교 활동, 장애인단체 활동에의 참여가 비교적 많았지만, 여행, 해외여행, 사교일, 승부놀이, 컴퓨터 및 인터넷, 자기계발 활동, 스포츠, 가족 관련 일, TV시청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처럼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들의 문화예술관람 및 문화예술참여 수준이 타 장애영역에 비해 낮았다. 문화예술시설에 편의시설 등 물리적 환경이 구축되지 않음에 따라 외부 신체기능장애인들의 참여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발달장애인들의 문화예술관람 및 문화예술참여 수준은 다른 장애 영역에 비해 높았다. 그 이유는 복지기관이용을 통해 문화예술을 관람하거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들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가 쉽지 않았다.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해 참여가 어려웠을 수 있고, 또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참여를 소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

〈표 II-2-43〉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율

(단위: %)

구분	외부 신체기능장애	내부기관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전체
문화예술 관람	5.7	8.9	12.1	9.3	6.4
TV시청	96.7	98.1	95.9	92.2	96.6
컴퓨터 및 인터넷	29.1	39.8	43.7	24.4	30.5
승부놀이(바둑, 당구 등)	4.4	3.8	3.6	2.7	4.2
문화예술참여(독서, 사진촬영 등)	3.2	5.2	4.9	6.1	3.5
자기계발 활동(기술자격증공부 등)	6.1	7.5	6.0	5.2	6.2
스포츠(축구, 농구 등)	8.1	7.4	18.4	3.8	8.5
사회(자원)봉사/종교 활동	17.7	16.9	19.2	20.5	17.8
여행	7.0	6.5	6.7	2.3	6.8
해외여행	5.8	5.6	3.8	0.9	5.5
사교일(친구, 친척 만남 등)	54.1	48.3	35.2	26.3	51.4
장애인 단체/기관의 자조모임	2.1	1.6	6.1	5.6	2.5
가족관련 일(외식, 쇼핑 등)	34.6	35.9	38.8	16.9	34.3
휴식(사우나 등)	44.9	44.6	42.3	35.7	44.3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8.10.18.다운로드)

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현황보다는 장애유형별 현황을 제시하였다.

2) 문화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장애인들의 문화 여가활동 만족 정도에 대하여, 매우 만족(4.0%), 약간만족(45.3%), 그리고 약간불만족(38.5%), 매우 불만족(12.2%)으로 나타나, 문화 여가 활동에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장애인이 대략 49.3%,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장애인이 50.7%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2-44〉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외부 신체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전체
매우 만족	3.9	3.8	5.3	3.4	4.0
약간 만족	45.2	44.0	50.8	39.8	45.3
약간 불만족	38.7	38.5	33.2	44.6	38.5
매우 불만족	12.2	13.7	10.8	12.1	1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8.10.18.다운로드)

장애인들의 문화여가 활동이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이나 체력 부족(29.4%)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28.0%)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여(10.6%),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9.9%), 교통 혼잡 및 이용교통수단 불편(8.5%) 등의 이유로 문화여가 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장애인들이 문화여가활동을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부담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시간과 문화여가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 등 문화적인 환경이 장애인 친화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이 문화여가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동이 편리해야 함은 물론, 문화시설 등에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편의시설 개선과 확대가 요구된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의 경우 타 장애영역에 비해, 시간의 부족(11.6%), 이동의 불편(9.7%), 여가시설 내 편의시설의 부족(0.9%)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내부기관 장애인의 경우 타 장애영역에 비해 경제적 부담(31.9%), 건강이나 체력의 부족(52.5%)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타 장애영역에 비해, 의사소통의 어려움(16.5%), 도우미가 없어서(11.5%),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15.0%)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16.4%), 여가시설 내 편의시설 부족(1.5%)이 높게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타 장애영역에 비해, 적당한 취미의 부재(25.3%), 의사소통의 어려움(8.2%)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결국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의 경우 타 장애영역에 비해 이동의 불편과 편의시설의 부족에 따른 불만족이 비교적 많았고, 내부기관 장애인의 경우 건강이나 체력의 부족에 따른 불만족이 많았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문화 및 여가활동을 잘 하고 싶어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도우미나 정보가 부족해서 만족스러운 활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도 적

당한 취미가 없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만족스러운 활동을 잘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타 영역과의 비교를 넘어 전체 장애인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만족스럽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신체적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동편의 및 시설 내 편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지원, 도우미 배치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2-45〉 문화 및 여가활동의 불만족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외부 신체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전체
경제적 부담	28.4	31.9	24.6	21.4	28.0
시간의 부족	11.6	3.1	5.8	5.4	10.6
이동의 불편	9.7	3.6	0.8	1.9	8.5
도우미가 없어서	2.2	1.8	11.5	7.7	3.1
여가시설의 부족	1.5	0.2	2.6	1.7	1.5
여가시설 내 편의시설 부족	0.9	0.0	1.5	0.0	0.9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1.8	1.7	15.0	5.5	2.8
적당한 취미의 부재	8.9	4.0	16.4	25.3	9.9
건강이나 체력의 부족	30.3	52.5	5.2	22.8	29.4
의사소통의 어려움	4.3	0.0	16.5	8.2	5.1
기타	0.2	1.1	0.0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8.10.18.다운로드)

3)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지난 1년 동안 장애인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실태를 보면 영화(24.0%)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문화행사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였다. 무용의 경우 0.2%의 장애인만이 관람을 하였고, 서양 음악(1.1%), 전통예술(1.5%), 연극(1.9%), 문학행사(1.9%), 대중음악 및 연예(2.2%), 뮤지컬(2.5%), 미술전시(3.5%)도 3.5%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모든 관람 분야에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발달장애인들의 관람 참여율이 높았다. 복지기관이 용을 통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체로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행사 관람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활동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고, 그 원인은 주로 우리 문화예술 환경이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한 점 등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계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표 II-2-46〉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단위: %)

구분	외부 신체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전체
문화행사	1.8	1.7	3.4	1.4	1.9
미술전시	2.5	2.3	3.2	3.3	3.5
서양음악	1.0	1.0	1.6	1.4	1.1
전통예술	1.4	1.4	2.9	0.0	1.5
연극	1.7	2.2	4.8	0.6	1.9
뮤지컬	2.2	1.5	7.2	2.2	2.5
무용	0.2	0.2	0.4	0.0	0.2
영화	22.0	31.0	41.5	25.7	24.0
대중음악, 연예	2.1	1.2	6.0	0.0	2.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2018.10.18.다운로드)

4) 예술행사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얻는 방법

예술행사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는 주로 TV, 라디오(35.2%), 인터넷상의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 사이트(30.1%), 주변사람(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현수막, 간판, 지하철 광고 등 안내문(4.8%), 공공단체 교육기관(4.7%), 동호인 모임(1.0%) 등을 통해 예술행사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들은 타 장애영역에 비해 TV나 라디오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고, 발달장애인은 TV나 라디오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적은 대신 주변사람(27.8%), 공공단체 교육기관(15.1%)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발달장애인들은 주변의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을 통해 정보를 주로 얻는 반면 비발달장애인들은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문화예술 행사 소식을 알리는 방식에 대한 차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II-2-47〉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단위: %)

구분	외부 신체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전체
신문잡지	2.3	2.7	0.0	3.2	2.1
TV 라디오	36.5	45.7	22.0	36.2	35.2
안내문 (현수막, 간판, 지하철 광고 등)	5.0	2.4	6.2	0.0	4.8
인터넷 상의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	31.4	30.6	21.4	30.7	30.1
소셜 미디어	1.7	2.4	2.4	0.0	1.8
공공단체 교육기관	3.1	1.2	15.1	8.2	4.7
주변 사람	18.3	13.6	27.8	18.9	19.2
해당 안내책자	0.5	0.8	1.0	0.0	0.5
경기발행 안내 이메일 및 뉴스레터	0.4	0.0	0.2	0.0	0.3
동호인 모임	0.5	0.6	3.2	2.8	1.0
기타	0.4	0.0	0.6	0.0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8.10.18.다운로드)

5) 예술행사 관람 시 가장 큰 어려움

예술행사 관람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비용 부담(36.5%), 시간 부족(18.4%),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음(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교통 불편(3.9%), 편의시설 불편(6.2%), 편의지원 부족(3.9%), 관련 정보 부족(4.6%), 함께 관람할 사람 부재(5.0%) 등의 이유로 예술행사 관람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의 경우 편의시설 부족, 편의지원 부족 등의 사유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내부기관 장애인의 경우 타 장애영역에 비해 비용부담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함께 관람할 사람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교통 불편, 편의지원 부족, 근거리 시설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어려움이 비교적 많았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장애유형을 고려한 문화 복지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예컨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위사소통과 접근성,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이동의 문제나 물리적인 시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표 II-2-48〉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단위: %)

구분	외부 신체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전체
비용이 많이 든다	36.1	48.2	31.6	42.2	36.5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21.1	10.4	8.9	8.2	18.4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9.6	9.9	12.3	10.8	10.0
교통이 불편하다	3.9	1.3	2.7	12.1	3.9
편의시설이 불편하다	6.8	9.0	3.2	0.0	6.2
편의지원이 부족하다 (화면해설서비스 등)	4.2	0.0	4.0	4.7	3.9
관련정보가 부족하다	4.6	5.9	5.3	0.0	4.6
함께 관람할 사람이 없다	3.5	3.9	14.7	5.4	5.0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다	9.4	10.0	14.5	16.6	10.4
기타	0.7	1.4	2.9	0.0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8.10.18.다운로드)

6) 예술행사 관람 시 가장 중요한 기준

예술행사를 관람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비용의 적절성(26.6%), 내용 및 수준

(22.9%), 접근성(20.9%), 교통편의성(10.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참가자의 유명도, 편의시설 구비여부, 전문가의견, 주변 네티즌 의견 등을 문화예술 행사 관람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의 경우 타 장애영역에 비해 비용의 적절성, 주위나 네티즌의 의견을 많이 참조하였고, 내부기관 장애인의 경우 전문가의견이나 언론보도를 많이 참조하였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교통의 편의성, 편의시설 구비, 접근성을 보다 많이 참조하였고, 정신장애인의 경우 비용의 적절성을 보다 참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2-49〉 예술행사 관람시 가장 중요한 기준

(단위: %)

구분	외부 신체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전체
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	40.4	48.7	35.6	45.0	40.5
관람비용의 적절성	23.8	19.7	21.6	24.7	23.3
참가자의 유명도	4.7	5.5	2.4	3.2	4.4
행사개최 장소의 유명도	0.9	0.0	0.1	0.0	0.7
교통의 편의성	6.2	5.9	14.4	7.5	7.2
편의시설 구비여부(놀이방 등)	4.2	3.8	5.5	2.8	4.3
전문가 의견, 언론보도	2.1	8.0	0.8	2.2	2.3
주위 의견, 네티즌 의견	5.5	1.8	5.4	4.0	5.2
접근성(가깝다)	11.9	6.6	14.2	10.5	11.8
기타	0.3	0.0	0.0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2018.10.18.다운로드)

2.3.3 소결

이상의 실태를 총정리해 보면, 장애인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건강 상태, 이동 수단의 부족, 편의시설의 부족, 지원인의 부족,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차별 등 때문에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문화 및 여가 활동, 문화예술관람 및 문화예술참여 수준은 상당히 낮았다. 다만 발달장애인들의 문화예술관람 및 문화예술참여 수준은 다른 장애 영역에 비해 높았는데, 그 이유는 복지기관이용을 통해 문화예술을 관람하거나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복지기관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수준을 그나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 및 여가 활동, 문화예술관람 및 문화예술참여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었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유형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체적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동편의 및 시설 내 편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지원, 도우미 배치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위사소통과 접근성,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이동의 문제나 물리적인 시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다.

Ⅲ.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 및 주요쟁점 분석

1. 부처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2.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Ⅲ.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 및 주요쟁점 분석

1.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¹⁶⁾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1.1.1. 목적 및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문화예술교육지원 주요 목적은 가출, 자립, 탈학교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적 치유와 사회성 회복을 도우며 문화예술 돌봄 기능을 하는데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가출, 자립, 탈학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1.1.2. 사업내용

부처 간(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협력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목표는 학교 밖 청소년(가출·자립·탈학교 등)의 사회적 관계성 회복을 통한 자존감 향상 및 문화예술 돌봄 기능을 확대하는데 있다.

사업기간은 8개월간(2018. 05월~12월)이고, 소요예산은 985.5백만원이고, 지원규모는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쉼터, 학교폭력치유센터, 비인가 대안학교 등 기타 관련 시설 대상 총 70개 시설에 73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기타 관련 시설’은 운영단체가 제안하는 ‘일반 공모’ 형태로 진행).

참여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가출·자립·탈학교 등)이고, 사업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존감 향상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창작 프로그램으로 60시수(20~30회)를 지원하고, 지원내용은 강사비, 교보재 및 현장학습, 교육기자재, 결과발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1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법령상의 용어로 되어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고려하여 공식명칭으로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후에는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로 표현하고자 함.

1.1.3. 운영체계

가) 예산 및 인력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규모는 소요예산 999백만원이고, 전체시설은 331개소이고, 교육시설은 70개소이고, 프로그램은 73개이고, 일자리 창출은 73명이다. 소요예산의 세부 내역으로는 부처 간 협력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단체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985.5백만원(학교 밖 청소년 지원 13,500천원×73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I-1-1〉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명, 개)					
구분	소요예산	전체시설	교육시설	프로그램	일자리
학교 밖 청소년	999	331	71	74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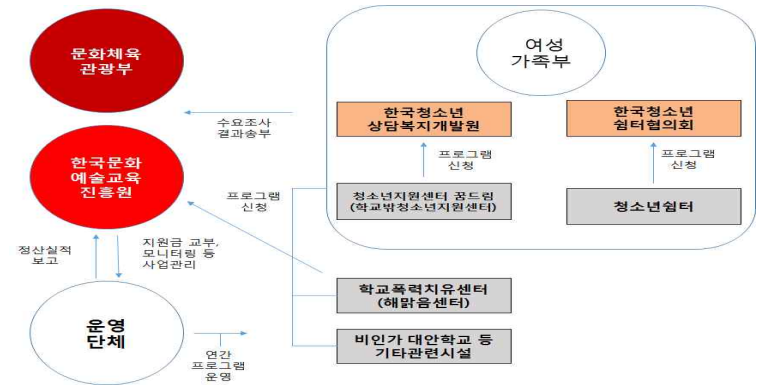
자료: 201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나) 전달체계

사업 추진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간 협력 사업으로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연계하고,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연계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운영단체 공모·선정 및 지원금 교부, 모니터링 등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단체는 정산 및 실적을 보고한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의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로부터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서 지원하고,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전국의 청소년쉼터로부터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서 지원한다. 이외에 학교폭력치유센터(해맑음센터), 비인가 대안학교 등은 기타관련 시설로부터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서 지원한다.

구체적인 기관별 역할 분담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총괄 및 예산을 지원하고,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쉼터협의회는 전국의 산하 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시설과 매칭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치유센터(해맑음센터)·비인가 대안학교 등(기관관련시설)은 공모를 통하여 지원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사업기획 및 운영총괄을 담당하고, 운영단체 공모·선정 및 지원금 교부·관리, 교육현장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운영단체 등 관계자 대상 워크숍 및 간담회를 기획하여 운영한다. 교육시설은 교육장소 제공 및 참여자 모집·관리, 운영단체 출강확인서 확인,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 모니터링 등을 협력한다.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는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하고, 강사 파견 및 인력을 관리(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인력 관리, 일모아시스템 운용)하고, 정산 및 결과를 보고(e-나라도움시스템 운용)를 한다.

〈그림 III-1-1〉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추진체계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다운로드일(2018.11.26.)

〈표 III-1-2〉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역할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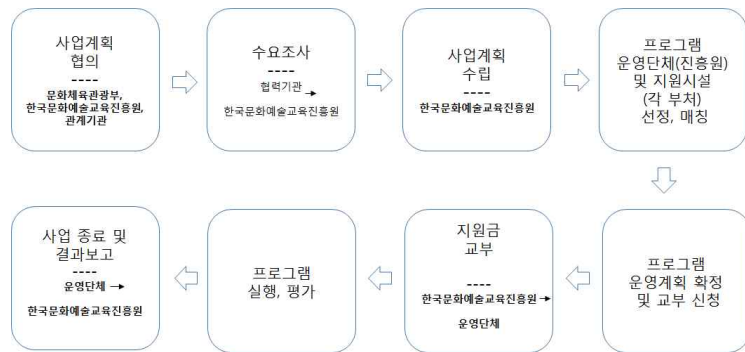
구분	추진내용
문제부	○ 사업 총괄 및 예산지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쉼터협의회 학교폭력치유센터	○ 산하 시설 대상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시설 매칭 ○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현장 모니터링 협력
교육진흥원	○ 사업 기획· 운영 총괄 ○ 운영 단체 공모·선정 및 지원금 교부관리 ○ 교육 현장 모니터링 등 사업 관리 ○ 운영단체 등 관계자 대상 워크숍 및 간담회 기획 운영
교육시설	○ 교육장소 제공 및 참여자 모집 · 관리 ○ 운영단체 출강확인서 확인 ○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 모니터링 협력
운영단체	○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 강사파견 및 인력관리(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인력 관리, 일모아시스템 운용) ○ 정산 및 결과보고(e-나라도움시스템 운용)

출처: 201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다) 사업 추진절차

사업의 추진절차는 사업계획 협의(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기관), 수요조사(협력기관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사업계획 수립(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프로그램 운영단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원시설, 선정 및 매칭, 프로그램 운영계획 확정 및 교부신청, 지원금 교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단체로), 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사업 종료 및 결과보고(운영단체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로 추진된다.

〈그림 III-1-2〉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추진 절차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다운로드일(2018.11.26.)

1.1.4. 실태 및 현황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지원규모는 아래와 같이 70개 시설, 73개 반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30회 내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1회 교육인원(20명 내외), 연간 정기과정, 상·하반기, 월 단위, 기타 등으로 운영되고, 지원항목으로는 강사비, 교통비, 교육 진행비(재료비, 발표회 등) 및 운영비 등이 있다.

〈표 III-1-3〉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지원규모

유형	시설유형	지원규모	신청방법
지정 공모	청소년쉼터	25개 시설	수요조사 목록에서 시설 선택하여 신청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25개 시설	
	학교폭력치유센터	1개 시설	
일반 공모	자율형	19개 시설	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관련시설 설립신청
계	70개 시설, 73개 반 운영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다운로드일(2018.11.26.)

추진방법은 기관별 수요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단체 공모, 선정, 매칭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모두 1회 진행인원은 10~15명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25개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25개 청소년쉼터를, 학교폭력치유센터는 1개 해맑음센터를 지원한다.

운영여건은 60시수(20~30회, 회당 2~3시간 구성, 주1~2회)의 교육을 지원하고, 임차를 통한 일부 기자재 지원도 가능하다. 운영단체의 지원형태는 민간경상보조금(보조금 2회 분할 지급,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방식이며, 예산지원은 1개 사업 당 13.5백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프로그램 내용의 탁월성, 기관별 유형에 따른 시설 및 청소년 특성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목표, 내용, 접근방법 등이 적절히 반영 가능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III-1-4〉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추진방법

구 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학교폭력치유센터
지원규모	25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5개 청소년 쉼터	1개 해맑음센터
대상인원	1회 진행 인원 10~15명 기준	1회 진행 인원 10~15명 기준	1회 진행 시 10~15명 기준
운영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시수(20~30회, 회당 2~3시간 구성, 주1~2회)의 교육 지원 임차를 통한 기자재 지원 일부 가능 		
운영 단체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보조금 2회 분할 지급,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예산	1개 사업 당 13.5백만원 지원	
	지원조건	프로그램 내용의 탁월성과 함께, 기관별 유형에 따른 시설·청소년 특성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목표, 내용, 접근방법 등에 적절히 반영 가능한 단체 선정	

출처: 201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1.1.5. 주요 연계기관

가)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1) 법적근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5.5.29.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두드림·해밀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확대·변경되면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여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는 청소년들의 꿈을 찾아 주고, 각자의 욕구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학업복귀나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꿈드림의 뜻은 '꿈=드림(Dream)', '꿈을 드림'(드림)의 명사형)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2) 청소년지원센터의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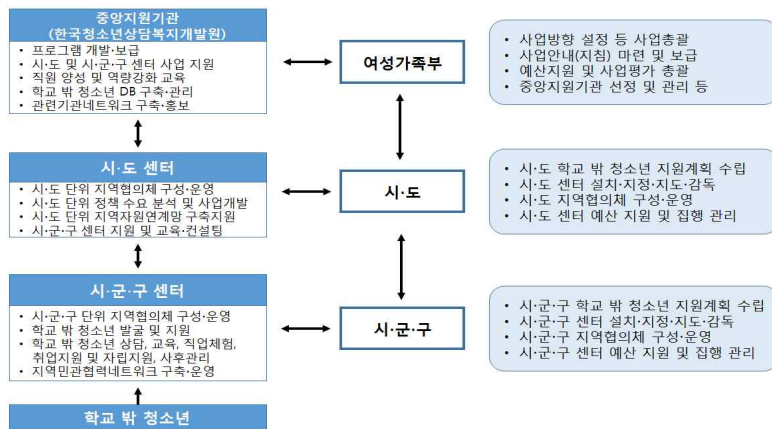
청소년지원센터의 전달체계는 크게 정부 및 지자체, 운영기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 및 지자체의 전달체계에서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방향 설정 및 사업을 총괄하고, 사업안내(지침) 마련 및 보급, 예산지원 및 사업평가 총괄, 중앙 지원기관 선정 및 관리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 광역지자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설치·지정·지도·감독을 하고,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예산지원 및 집행을 관리한다. 시·군·구 기초지자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설치·지정·지도·감독을 하고,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센터의 예산지원 및 집행을 관리한다.

둘째, 중앙지원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사업 지원, 직원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학교 밖 청소년 DB 구축·관리하고,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홍보를 담당한다.

셋째, 시도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는 시도 단위 지역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정책 수요 분석 및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자원 연계망을 구축하고 지원한다. 그리고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지원 및 교육 컨설팅을 실시한다.

넷째,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는 시·군·구 단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 및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 사후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의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그림 III-1-3〉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비스 전달 체계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청소년사업안내. p.817

(3)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지정센터 현황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지정센터는 2018년 현재 전국 206개소가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표 III-1-5〉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206	25	15	9	9	6	3	5	1	31	10	13	15	10	16	15	20	3
시·도 센터	16	1	1	1	1	1	1	1	-	1	1	1	1	1	1	1	1	1
시·군·구 센터	190	24	14	8	8	5	2	4	1	30	9	12	14	9	15	14	19	2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청소년사업 안내. p.821

(4) 주요 프로그램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주요 프로그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지원, 자립지원, 건강검진, 기타 서비스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먼저 상담지원은 청소년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관계 상담, 친구관계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교육지원은 학업동기 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진행,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지원, 대학입시 지원, 학업중단 숙려상담, 취학관리 전담기구 사례관리, 복교지원 등이 포함된다. 셋째,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지원은 직업탐색·체험 프로그램 제공,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취업훈련 연계지원(내일이룸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비즈쿨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자립지원은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초 소양교육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건강검진은 10대 특성에 맞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본인부담 없음), 건강생활 관리 지원, 체력관리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기타서비스로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I-1-6〉 청소년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

구분	내 용
상담지원	○ 청소년 심리, 진로,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교육지원	○ 학업동기 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진행 ○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지원 ○ 대학 입시 지원 ○ 학업중단 숙려상담, 취학관리 전담기구 사례관리 ○ 복고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 직업탐색체험 프로그램 제공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취업훈련 연계지원(내일아름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비즈쿨 등)
자립지원	○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기초 소양교육 제공
건강검진	○ 10대 특성에 맞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본인부담 없음) ○ 건강생활 관리 지원 ○ 체력관리 지원
기타서비스	○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등

출처: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user/sub01_2_3.asp)

특히, 자립지원의 자기계발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나 사회진입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자기발전을 돕기 위해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개 분야(문화예술, 신체단련, 봉사활동, 환경보존, 과학정보)의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재능이나 잠재력을 발견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즉, 전국의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 운영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 영역에서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표 III-1-7〉 청소년지원센터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분야	세부 활동 내용
문화예술	○ 악기, 댄스, 사진, 미술, 공예 등
신체단련	○ 해양, 무술, 구기 등
봉사활동	○ 일손 돕기, 위문 등
환경보존	○ 숲 체험, 갯벌체험, 생태탐사, 환경탐사, 시설보존 등
과학정보	○ 컴퓨터, IT, 모형, 로봇, 우주탐구 등

출처: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user/sub05_4_5.asp)

나) 청소년쉼터

(1) 법적근거

청소년쉼터의 운영지원을 통해 가출(징후)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거주·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가출 청소년 조기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 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 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다. 청소년쉼터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 향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제31조(청소년복지 시설의 종류),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신고 등) 등에 두고 있다.

(2) 청소년 쉼터의 종류

청소년쉼터의 종류는 크게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된다.

일시쉼터의 보호기간은 24시간에서 7일 이내로 일시 보호로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단기쉼터는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로 단기보호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장기쉼터는 3년 이내로 중·장기 보호로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III-1-8〉 청소년쉼터의 종류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기간	24시간에서 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9개월)	3년 이내 중·장기 보호 ※ 1년에 1회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4년)
이용 대상	가출 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립 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
핵심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 지원(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기능	○ 위기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 청소년쉼터와 연계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 ○ 와·식·주,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지원 ○ 일사·중장기 청소년쉼터와 연계 ○ 가정 및 사회 복귀 대상	○ 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분류, 연계서비스 ※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 권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 권장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 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 복귀	자립지원
비고	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 남·여 분리 운영	반드시 남·여용 실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	

주: 중·장기 쉼터 퇴소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아직 개소 운영되지 않는 시·도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관 개소 시까지 한시적으로 청소년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허용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 청소년쉼터 보호기간 4년을 넘은 입소생으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게 된다 하라도 정원초과를 이유로 다른 청소년의 입소를 거부해서는 안 됨.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1조제2호에 규정된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지침에 달리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준용함.

출처: 2018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p.533

(3) 운영 현황

연도별 청소년쉼터 현황은 2000년 83개소, 2011년 83개소, 2012년 92개소, 2013년 103개소, 2014년 109개소, 2015년 119개소, 2016년 119개소, 2017년 123개소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I-1-9〉 연도별 청소년쉼터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시	10	10	13	21	22	26	28	30
고정형	8	8	8	15	16	18	18	20
이동형	2	2	5	6	6	8	10	10
단기	49	48	49	50	50	52	51	53
남자	24	24	25	26	26	26	26	27
여자	25	24	24	24	24	26	26	26
중장기	24	25	30	32	37	41	40	40
남자	10	10	11	11	16	17	18	18
여자	14	15	19	21	21	24	10	10
계	83	83	92	103	109	119	119	123

출처: 2017년 청소년백서(여성가족부). p. 160

(4) 전달체계

청소년쉼터의 전달체계는 여성가족부는 기본 운영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 사업운영 및 평가계획 수립, 컨설팅 총괄,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를 담당한다.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사업계획 수립·검토·조정, 현장 지도·점검, 보조금 집행 및 지도·점검을 담당한다.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연간 사업계획 수립, 가출 등 위기청소년 보호·자립 지원을 담당한다. 청소년복지시설의 내시실화사업단(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정위탁)은 내시실화사업(교육, 컨설팅, 실적관리시스템 운영, 홍보 등) 계획 수립,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 현장점검 및 컨설팅 지원,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운영 매뉴얼 제작 및 교육, 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련 통계 관리, 가출 등 위기청소년 정책 개발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홍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한다.

〈그림 III-1-4〉 청소년쉼터의 전달체계



출처: 2018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p.534

(5) 운영 모형

청소년쉼터의 공동운영 모형에서 청소년쉼터 기능을 특화하여 입소 청소년의 욕구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타 청소년쉼터와 차별화되고, 다변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기능특화의 유형예시는 비행예방형, 진로탐색형, 자립촉진형, 학업형, 경제성 지적장애 치유형, 사회성향상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행예방형은 소년보호 처분 등 비행 및 범죄 이력자를 대상으로 범죄 재유입 예방을 위한 인성 및 재사회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진로탐색형은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한 진로를 탐색하고, 취·창업을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자립촉진형은 경제적 자립 및 독립생활 영위를 위한 개인 경제교육, 독립거주생활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학업형은 가출청소년 중 학업지속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반, 재학반, 대안학교 진학반 등 학업복귀 전문 프로그램 등이 있다. 경제성 지적장애 치유형은 경제적 지적장애 청소년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등이 있다. 사회성향상형은 자립의지가 약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 및 재사회화 활동프로그램 등이 있다.

즉, 전국의 청소년쉼터에서 운영하는 기능특화 운영모형 중 비행예방형, 학업형, 사회성지향형 프로그램 영역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6) 주요업무

청소년쉼터의 주요업무는 가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선도·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지원, 사례관리, 가출청소년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와 연계,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를 통한 상담지원 및 보호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학교폭력치유센터(해맑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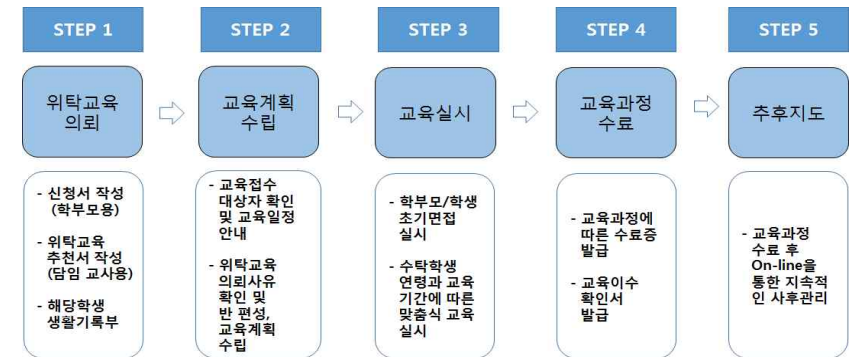
(1) 배경 및 목적

학교폭력치유센터(해맑음센터)는 교육부가 지정하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전국 단위의 심리·예술치유기관이다. 해맑음 미소처럼 숨겨진 자신감을 회복하는 단계를 거쳐 자신만의 미래의 꿈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폭력의 두려움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형 중·단기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숙형 종합지원센터이다.

(2) 위탁교육 절차

위탁교육 절차는 다음과 같이 '위탁교육 의뢰, 교육계획 수립, 교육 실시, 교육과정 수료, 추후지도'의 5단계로 요약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림으로 제시한다.

〈그림 III-1-5〉 학교폭력치유센터(해맑음센터)의 위탁교육 절차



출처: 해맑음센터 홈페이지(<http://uri-i.kr/v3/edu/process.php>). 다운로드일(2018.11.26.)

(3) 교육 대상 및 모집

학교폭력치유센터(해맑음센터)의 교육대상 장·단기형 학생모집 시기는 기수별 2주 단위로 하고 있다. 대상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한다. 교육기간은 단기형(2주 과정)과 장기형(1년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학교적응기간 포함). 단, 단기형 위탁교육과정은 학생의 적응력 정도에 따라 연장여부 심사 후 장기형 위탁교육과정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숙형 위탁교육으로 주중(월~금)에는 학교폭력치유센터(해맑음센터)에 있어야 하지만, 주말(토~일)에는 가정에 다녀올 수 있다.

(4) 운영 방침

학교폭력치유센터(해맑음센터)의 운영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교육 대상자는 원적교에서 학적을 관리하며, 위탁교육기간의 출석·수업·평가 결과 등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둘째, 접수된 위탁교육 신청서, 추천서, 생활기록부 심의 후 위탁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한다.

셋째, 위탁교육 대상자는 합숙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위탁교육 대상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 및 학부모와 협의하여 복교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복교 사실을 시·도교육청 학교 및 학부모에게 즉시 통보한다.

다섯째, 위탁교육 대상자 경비는 숙식비를 비롯한 위탁교육비 전액을 무료로 제공한다.

(5) 프로그램

프로그램 크게 기초교과, 예술치유, 전문교육, 심리상담, 심리검사, 체험활동, 학부모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첫째, 기초교과는 6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기초교육을 학생들 연령별, 수준별, 흥미와 이해를 고려하여 개별 방식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며, 수업시간에 어려웠던 부분은 보충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완전학습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예술치료는 미술, 음악 등의 예술 자유적 접근을 통하여 내면에 억압된 감정을 정화(catharsis)하여 부정적 감정들을 해소시키며, 나아가 자기조절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접근방법으로 운영된다.

셋째, 전문교육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어 있는 학교폭력과 성,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문제 발생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소양교육과 사회 적응력 및 대처능력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하여 긍정적 행동을 지향하는 교육 프로그램(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중독예방교육, 예절·인성교육, 진로적성선택 및 학습지도)을 운영한다.

넷째, 심리상담은 내담자인 학생과 상담사가 직접적인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전인적 학습과정이자 심리적 치유활동으로서 상담, 봉사, 자문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바람직한 발달 및 성장을 추구하는 활동(단기 2주 상담, 개인상담)으로 운영된다.

다섯째, 심리검사는 인지기능검사, 진로·적성검사, 성격 및 인성검사, 행동평가, 투사검사 등을 실시한다.

여섯째, 체험활동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 체험을 통해 정서적 환기를 경험하고, 간접적 체험에 국한되어 있던 교육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체험해봄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학습의 경험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미디어활동, 동아리활동, 외부체험활동)으로 운영된다.

일곱째, 학부모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11:00~13:00)에 운영되고, 효과적인 자녀양육과 건강한 부모역할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방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위로상담, 사이코드라마)으로 운영된다.

학교폭력치유센터(해맑음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영역 중 예술치료, 체험활동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1.2.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1.2.1. 목적 및 대상

부처 간 협력사업인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의 목적은 일반·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 감수성 및 자기이해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아울러 지역별·분야별·체험형 문화예술교육서비스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잠재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합 결과발표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 간 교류와 연대감을 강화하는데 있다.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대상은 전국 40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소외계층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단체별 해당 권역 내 3~5개 내·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프로그램 진행).

1.2.2. 사업내용

부처 간(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목표는 일반·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감수성 및 자기이해 증진, 창의성 및 인성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사업주관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시설이다. 사업기간은 8개월간(2018. 05월~12월)이고, 소요예산은 320백만원이고, 지원규모는 7개 내외 운영단체, 40개 청소년수련시설, 4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일반·소외계층 청소년이고, 사업내용은 청소년들의 문화 감수성 및 자기이해 증진, 창의성 및 인성함양을 위한 60시수(20~30회) 내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하고, 지원내용은 강사비, 교보재 및 현장학습, 교육기자재, 결과발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1.2.3. 운영체계

가) 예산 및 인력

방과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규모는 소요예산 320백만원이고, 전체시설은 797개소이고, 교육시설은 40개소이고, 프로그램은 40개이고, 일자리 창출은 12명이다. 소요예산의 세부 내역으로는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단체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20백만원(방과 후 청소년지원 8,000천원×4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I-1-10〉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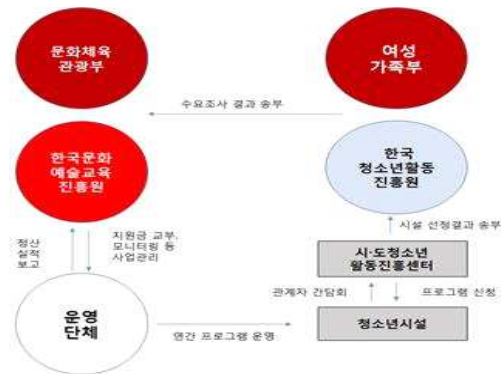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명, 개)					
구분	소요예산	전체시설	교육시설	프로그램	일자리
방과 후 청소년	320	797	40	40	12

출처: 201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나) 전달체계

사업 추진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간 협력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연계하고,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연계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를 공모·선정 및 지원금 교부, 모니터링 등 사업을 관리하고,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는 정산 및 실적보고를 한다. 그리고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각 청소년시설로부터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송부한다.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는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하고, 강사 파견 및 인력을 관리를 한다.

〈그림 III-1-6〉 방과 후 청소년의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추진체계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다운로드일(2018.11.26.)

구체적인 기관별 역할분담은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는 사업총괄 및 예산을 지원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사업기획과 운영총괄,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공모·선정 및 지원금 교부·관리, 교육현장 모니터링 등 사업을 관리하고, 교육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를 기획하여 운영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역할은 시·도 주관단체 및 청소년시설 대상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관리, 시·도 주관단체 및 청소년시설 간담회 지원, 교육현장 모니터링 등 사업을 관리하고, 필요 시 권역 내 청소년 교류활동 및 통합 발표회를 기획·운영한다.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은 권역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운영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간담회 지원, 필요 시 권역 내 청소년 교류활동 및 통합 발표회를 기획하여 운영한다.

청소년시설의 역할은 교육장소 제공 및 참여자 모집·관리,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출강확인서 확인·발급,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 모니터링 협력, 필요 시 권역 내 청소년 교류활동 및 통합 발표회를 기획하여 운영한다.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강사파견 및 인력관리(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인력 관리, 일모아시스템 운용)를 하고, 정산 및 결과보고(e-나라도움시스템 운용)를 한다.

〈표 III-1-11〉 방과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역할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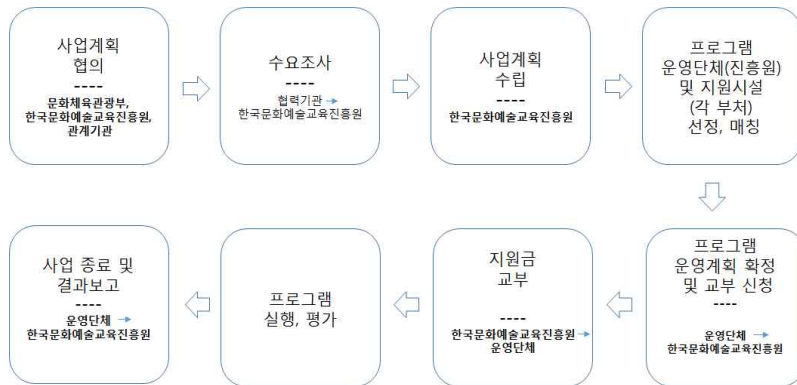
구 분	추진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 사업 총괄 및 예산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 기획·운영 총괄 ○ 운영 단체 공모·선정 및 지원금 교부 관리 ○ 교육 현장 모니터링 등 사업 관리 ○ 운영단체 등 교육시설 관계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 기획 운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사·도 주관단체 및 청소년시설 대상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관리 ○ 사·도 주관단체 및 청소년시설 간담회 지원 ○ 교육 현장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 (필요 시) 권역 내 청소년 교류 활동 및 통합 발표회 기획·운영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권역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운영 관리 ○ 운영단체 및 청소년시설 간담회 지원 등 ○ (필요 시) 권역 내 청소년 교류 활동 및 통합 발표회 기획·운영
교육시설	○ 교육장소 제공 및 참여자 모집 관리 ○ 운영단체 출강확인서 확인 ○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 모니터링 협력 ○ (필요 시) 권역 내 청소년 교류 활동 및 통합 발표회 기획·운영
운영단체	○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 강사파견 및 인력관리(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인력 관리, 일모아시스템 운용) ○ 정산 및 결과보고(e-나라도움시스템 운용)

출처: 201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다) 추진 절차

사업의 추진절차는 사업계획 협의(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기관), 수요조사(협력기관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사업계획 수립(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프로그램 운영단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원시설 선정 및 매칭, 프로그램 운영계획 확정 및 교부신청, 지원금 교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단체로), 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사업 종료 및 결과보고서(운영단체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로 연계되어 사업이 종료된다.

〈그림 III-1-7〉 방과 후 청소년의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추진 절차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다운로드일(2018.11.26.)

1.2.4. 실태 및 현황

방과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40개 시설, 4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방과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추진방법은 기관별 수요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단체 공모 및 선정, 매칭으로 추진된다.

지원규모는 7개 내외 운영단체 선발, 청소년수련시설 선정기관(40개)과 매칭하고, 대상인원은 평균 15~20명 내외로 운영하고, 운영요건은 60시수(20~30회, 회당 2~3시간 구성, 주1~2회)의 교육을 지원하고(임차를 통한 기자재 지원 일부 가능), 운영단체의 지원형태는 민간경상보조금(보조금 2회 분할 지급,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으로 지원하고, 지원예산은 1개 프로그램 당 8백만원을 지원(1개 단체 당 5개 내외 시설 담당)하고 있다.

2017년 대비 2018년도에는 운영단체는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와 권역 내 강사 선발·관리·역량강화, 현장 모니터링 등 권역 내 사업 관리 방향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권역 내 청소년 교류활동(집중워크숍) 및 권역 통합발표회는 필요 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전담하여 기획하여 운영하고(본 지원 사업 예산을 교류활동 예산으로 책정 및 집행 불가), 또한, 시설별 발표회는 운영단체에서 기획하여 운영하고, 본 지원사업 예산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I-1-12〉 방과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추진방법

구 분		청소년시설						
지원규모		○ 7개 내외 운영단체 선발, 청소년수련시설 선정기관(40개) 매칭						
대상인원		○ 평균 15~20명 내외						
운영요건		○ 60시수(20~30회, 회당 2~3시간 구성, 주1~2회)의 교육 지원 ○ 임차를 통한 기자재 지원 일부 가능						
운영 단체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보조금 2회 분할 지급,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예산	○ 1개 프로그램 당 8백만원 지원(1개 단체 당 5개 내외 시설 담당)						
2017년 대비 변경사항		<table><tr><th>2017년</th><th>▶</th><th>2018년</th></tr><tr><td>해당 권역 내 전체 교육시설 청소년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통합워크숍 및 통합발표회 프로그램 제시 필요</td><td></td><td>해당 권역 내 시설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관리 집중 운영</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단체는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와 권역 내 강사 선발·관리·역량강화, 현장 모니터링 등 권역 내 사업 관리 방향 중심으로 사업 제안 필요○ 권역 내 청소년 교류 활동(집중워크숍) 및 권역 통합 발표회는 필요 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 측 전담 기획·운영 예정(본 지원 사업 예산을 교류활동 예산으로 책정 및 집행 불가)○ 필요 시, 시설별 발표회는 운영단체 기획·운영, 본 지원 사업 예산 활용 가능	2017년	▶	2018년	해당 권역 내 전체 교육시설 청소년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통합워크숍 및 통합발표회 프로그램 제시 필요		해당 권역 내 시설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관리 집중 운영
2017년	▶	2018년						
해당 권역 내 전체 교육시설 청소년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통합워크숍 및 통합발표회 프로그램 제시 필요		해당 권역 내 시설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관리 집중 운영						

출처: 201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1.2.5. 주요 연계 기관

가) 상상학교

상상(相翔)학교는 서로(상), 높이 날다(상)+(학교)의 합성어로 청소년들이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펴 높이 날 수 있게 꿈을 응원하고, 문화감수성 및 자기이해 증진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부처 간 협력 사업이다. 사업운영은 전반적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 목적은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체험형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고, 청소년의 문화예술 재능 및 소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매년 1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만13세~18세)으로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 지역별 예술 강사 지원, 활동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지원 등을 하고, 전문 교육운영단체와 매칭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계는 먼저 전문 교육운영단체를 선정(사업계획 및 교육역량을 고려하여 선정)한 후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기관을 선정(기관 내 자원 현황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음으로 운영기관-교육운영단체와 매칭(운영기관 신청 프로그램과 교육운영단체 활동지역을 고려하여 매칭)하여 운영기관별 청소년 모집 및 교육을 실행(운영기관과 교육운영단체가 협력하여 청소년을 모집 후 교육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러한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요약된다.

〈그림 III-1-8〉 방과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추진단계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ywa.or.kr/>). 내용을 근거로 그림 제시

나)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을 거점으로 청소년들이 지역(마을)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미래를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전용시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하며,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등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조직적인 체험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이러한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련시설은 단순히 외형적 요소인 시설, 설비 또는 공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시설에서 운영되는 수련

거리와 이를 기획·운영하며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자의 3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활동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과 특성의 특성상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유형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13〉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 및 특성

시설종류	시설 개념 기능 및 특성
청소년 수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입지조건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시설은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1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집회장,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 시설, 2개소 이상의 자치활동실, 2개 이상의 특성화 수련활동장, 1개소 이상의 상담실, 1개소 이상 휴게실, 1개소 이상 지도자실이 필수 사·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의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해야 함(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청소년 수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입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시설기준으로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식당, 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수련의 숲, 강의실, 특성화 수련활동장, 지도자실, 휴게실, 비상설비, 기타시설 등을 설치 기본적인 기능은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숙박을 하며 단체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것
청소년 문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시설로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사·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함(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청소년 야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입지조건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유스 호스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박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 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014.7.22. 시행) 입지조건은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청소년 특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입지조건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시·도·시·군·구·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등

출처: 청소년수련시설포털 사이트(http://youthnet.or.kr/?page_id=80). 다운로드일(2018.11.26.)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현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186개소(23%), 청소년수련원 191개소(23.6%), 청소년문화의집 262개소(32.4%), 청소년야영장 41개소(5.1%), 유스호스텔 117개소(14.5%), 청소년특화시설 11개소(1.4%)로 합계는 80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III-1-14〉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기준 :2018년 12월)

시설유형	개소수	비율
청소년수련관	186	23%
청소년수련원	191	23.6%
청소년문화의집	262	32.4%
청소년야영장	41	5.1%
유스호스텔	117	14.5%
청소년 특화시설	11	1.4%
합계	808	

출처: 청소년수련시설포털 사이트(http://youthnet.or.kr/?page_id=80), 다운로드일(2018.11.26.)

1.3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3.1.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돌봄사업 개요

가) 목적 및 대상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보호, 교육, 놀이와 오락의 제공, 급식,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근간은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아동의 증가, 가족 해체, 저소득 맞벌이가구 증가 등의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정으로 부터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부방이다. 이러한 아동들을 공적인 영역에서 돌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부는 2004년에 공부방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하면서 그 명칭을 지역아동센터로 하였고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청소년 대상의 대표적인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선보호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별 신고정원의 90% 이상이 우선보호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우선보호아동은 소득기준, 연령기준, 가구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아동으로 정의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

동은 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등의 아동에 해당된다. 해당아동들은 드림스타트, 종교단체, 학교 교육복지시설 등의 추천으로 모집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해당아동들에 대한 지원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으로 등록된다.

〈표 III-1-15〉 지역아동센터 우선보호아동 선정기준

- 1)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 소득 기준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2) 가구특성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 조손가족의 아동(가구원수 선정기준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경우)
 - 한부모가족의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외의 가구형태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인 경우)
 -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나) 사업내용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라는 목적과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은 기본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화프로그램은 지역 및 특정 상황과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기본프로그램은 다시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호영역에는 예절교육, 위생지도, 급식지도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프로그램과 저녁 돌봄, 생활안전 지도, 5대 안전의무교육 등의 안전관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있다. 교육영역은 학습지도, 예체능 활동, 적성 및 사회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영역에서는 관람·견학, 캠프 및 여행 등의 체험활동, 공연, 체육대회 등의 참여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서지원 영역에는 아동 및 가족상담, 보호자 교육 등의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연계영역에는 기관 홍보 및 자원봉사자 연계 등의 인적연계, 복지단체 및 기관 등과의 연계가 해당된다. 특화프로그램은 주말·공휴일 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야간보호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표 III-1-16〉 지역아동센터 제공 서비스

영역	세부영역	세부프로그램	프로그램 예시
보호	생활	일상생활관리	센터생활적응지도, 일상생활지도, 일상예절교육, 부적응아동지도 등
		위생건강관리	위생지도, 건강지도 등
		급식지도	급식지도, 식사예절교육 등
	안전	생활안전지도	저녁돌봄 등
		안전귀가지도	안전귀가지도, 생활안전지도 등
		5대안전의무교육	교통안전, 실종유괴예방, 약물오남용예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 등
교육	학습	숙제지도	숙제지도, 학교생활관리 등
		교과학습지도	수준별 학습지도, 온라인교육(IPTV 학습 등),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등
	특기적성	예체능활동	미술, 음악, 체육지도 등
		적성교육	진로지도, 적성교육(독서, 요리, 과학 등) 등
	성장과 권리	인성·사회성 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자치회의, 동아리 활동 등
문화	체험활동	관람·견학	공연 및 연극 관람, 박물관 등 견학 등
		캠프·여행	체험활동, 캠프 및 여행 등
	참여활동	공연	공연 등
정서지원	상담	행사(문화/체육 등)	전시회, 체육대회 등 등
		연고자 상담	부모 및 가족상담, 연고자 상담 등
		아동 상담	아동상담 등
	가족지원	정서지원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홍보	보호자교육	보호자교육 등
		행사·모임	부모소모임, 가정방문 등
		기관홍보	기관홍보 등
	연계	인적연계	자원봉사활동, 인적결연후원, 후원자관리 등
		기관연계	지역조사와 탐방, 전문기관 연계, 복지단체 연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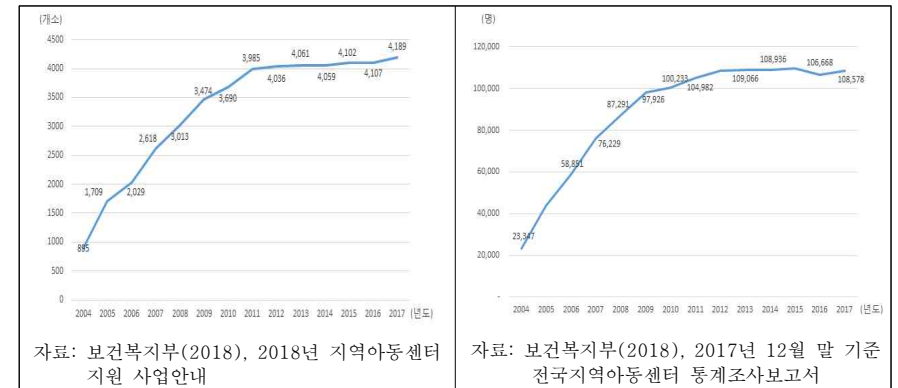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다) 지역아동센터 현황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 이후 신고제로 시설 진입을 허가하면서 2011년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 2004년 895개소에서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4,189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운영 중에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수 또한 2004년 이후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108,578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9〉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및 이용 아동 수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은 783개소로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1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서울지역이 450개소로 10.7%에 해당한다. 세 곳은 신도시로 12개에 머물고 있다.

〈표 III-1-17〉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

지역	지역아동센터 개수	비율 (%)
강원	168	4.0
경기	783	18.7
경남	261	6.2
경북	267	6.4
광주	306	7.3
대구	198	4.7
대전	145	3.5
부산	208	5.0
서울	450	10.7
세종	12	0.3
울산	54	1.3
인천	182	4.3
전남	379	9.0
전북	285	6.8
제주	66	1.6
충남	240	5.7
충북	185	4.4
전체	4,189	100.0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하는 인력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규정되어있으며 등록아동의 수에 따라 구분된다. 10인 미만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설장 1인이 운영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아동이 10명 이상, 30명 미만 인 경우 시설장 1인과 생활복지사 각 1인, 아동 30명 이상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 영양사 1인(아동 50명 이상인 경우)이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인건비 지급을 기준으로 기관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시설종사자(시설장과 생활복지사)와 국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어 파견되어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 무급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인력으로 구분된다.

〈표 III-1-1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기준

구분	시설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아동 30명 이상	1명	2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
아동 10인 미만 ¹⁾	1명	-	-

주: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1, 부칙 제4조에 따라 아동 10인 미만 시설 배치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시설은 인정되나 '12. 8. 5. 부터 10인 미만 시설은 신규설치 신고할 수 없음

2) 기존('12. 8. 4. 이전) 10인 미만 시설은 10인 이상으로 변경가능. 기존 시설(10인 이상)에서 10인 미만 시설로 변경 불가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 수를 시도 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1,5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이 12,050명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로 321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울산이 1,198명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당 평균 이용아동 수를 살펴보면 최저 25.8명에서 최고 31.4명으로 평균적으로 센터 당 약 28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9〉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

지역	이용 아동 수	센터당 평균 이용아동 수
강원	4,320	28.7
경기	21,577	31.4
경남	6,578	27.3
경북	6,617	27.6
광주	7,970	28.4
대구	4,911	27.4
대전	3,894	30.7
부산	4,747	25.8
서울	12,050	30.6
세종	321	29.5
울산	1,198	24.4

지역	이용 아동 수	센터당 평균 이용아동 수
인천	4,442	27.4
전남	9,802	27.7
전북	7,141	27.2
제주	1,710	29.5
충남	6,340	29.5
충북	4,960	28.8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2,934개소로 70%에 해당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인이 904개소로 21.6%로 나타났다.

〈표 III-1-20〉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단위: 개소,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4,036 (100.0)	4,061 (100.0)	4,059 (100.0)	4,102 (100.0)	4,107 (100.0)	4,189 (100.0)
개인	2,614(64.8)	2,650(65.2)	2,669(65.7)	2,796(68.2)	2,860(69.6)	2,934(70.0)
법인	재단	305(7.6)	447(11.0)	431(10.6)	300(7.3)	300(7.3)
	사단	190(4.7)	226(5.6)	225(5.5)	249(6.1)	241(5.9)
	사회복지	341(8.5)	336(8.3)	332(8.2)	331(8.1)	322(7.8)
일반 단체	시민단체	101(2.5)	100(2.5)	109(2.7)	67(1.6)	68(1.7)
	종교단체	425(10.5)	250(6.1)	231(5.7)	272(6.6)	183(4.5)
* 지자체	직영	-	-	-	-	19(0.5)
	위탁	-	-	-	-	22(0.5)
**기타	60(1.4)	52(1.3)	62(1.6)	87(2.1)	92(2.2)	-

주: 1) * 2016년부터 지자체 직영/위탁 별도 표시함(15년까지 기타에 지자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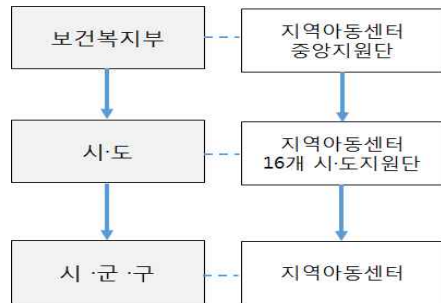
2) ** 기타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학교법인, 주민자치위원회 등 임(17년부터 법인 또는 일반단체에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라)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아동·청소년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 돌봄 서비스를 광역시·도와 시·군·구의 행정체계 내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총괄책임 하에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 위탁하는 형태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을 허브로 16개 시·도지원단이 있으며 시·도지원단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III-1-10〉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전달체계



(1) 중앙정부

(가)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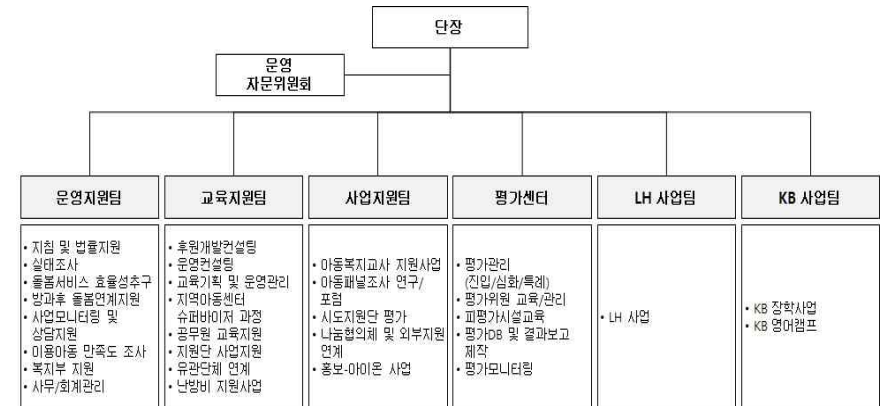
중앙정부 전달체계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아동권리과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총괄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권리과는 (1)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법령과 제도 개선 (2)국고보조금 지원, 아동복지교사 예산지원·사업총괄 및 평가, (3)사업 운영 지도·점검, 평가총괄 및 표준화 모델 개발·보급, (4)시설정보시스템 개편 및 관리 총괄, (5)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보건복지부의 위탁 기관인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은 중앙 및 시·도지원단의 사업운영을 총괄하며 16개 시·도지원단의 허브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종사자 교육기획,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2)시·도지원단 사업 조정·평가 및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3)시설정보시스템 관리지원 및 중앙지원단전산관리시스템 구축·관리, (4)연구개발 및 시설 평가사업 운영, (5)홍보, 민간자원 개발·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6)

중앙부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과 같다. 이와 같은 사업은 1개의 운영자문위원회와 6개의 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현황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III-1-11〉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조직도



자료: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홈페이지, 다운로드일(2018.12.01.)

(2) 지방자치단체

(가)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는 시·도 단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2)관할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 (3)아동복지교사 시·도별 사업총괄 및 지도점검, (4)시·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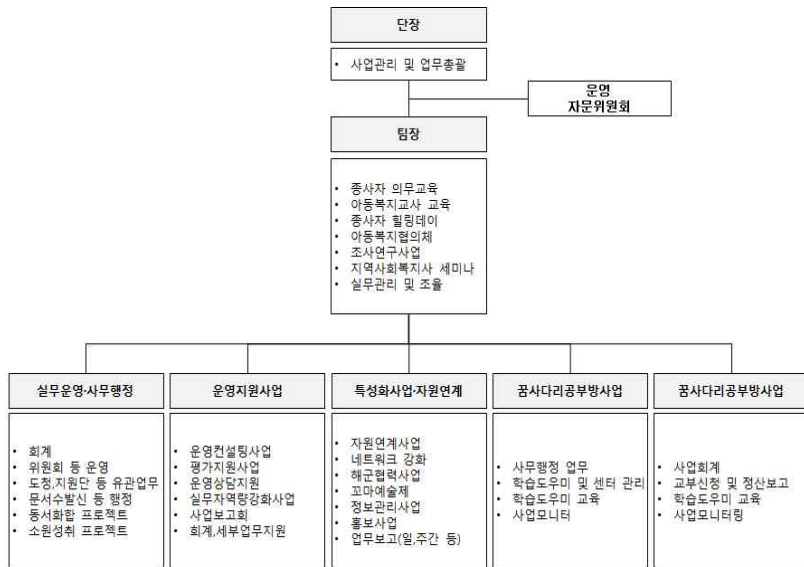
(나)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비영리 단체법인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¹⁷⁾ 공간 및 운영체계, 예산에서 운영단체·법인과 분리되어 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시·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2)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3)시설정보시스템 관리·평가사업·아동복지교사 교육 등 지원, (4)시·도 특성화사업 개발, (5)홍보, 정보관리, 민간자원 개발·연계지원 등으로 네트워크 구축, (6)시·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

17) 현재 비영리 사단법인 부스리기사랑나눔회에 의해 위탁운영 되고 있음

단은 각 지역별로 조직현황이 다르나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과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전남지원단을 예시로 조직현황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III-1-12〉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조직도



자료: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홈페이지. 다운로드일(2018.12.01.)

(다)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는 관할지역내 지역아동센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시·군·구 지역아동센터 관리, 예산지원 등 운영, (2)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이용·종결 관리, (3)아동복지교사 예산집행, 운영관리(채용·계약, 배정·노무, DB관리 등), (4)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후원금 내역 관리, (5)시·군·구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2.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가) 지역아동센터 문화프로그램 현황

지역아동센터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5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5개 영역 내에 문화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중점프로그램의 비율을 살펴보면 문화영역은 전체 프로그램의 21.8%를 차지하고 있어 보호영역 다음으로 문화영역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영역의 특기적성 영역에도 문화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의미한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관람·견학, 캠프·여행 등의 체험활동, 공연, 문화/체육 행사 등의 참여활동, 교육영역의 특기적성 영역에 속하는 예체능 활동지도, 적성교육 등이 이에 해당된다.

〈표 III-1-21〉 지역아동센터 중점프로그램

(단위: 개소, %)

구분		센터 수	비율	전체 센터수 대비 비율	
전체		91,546	100.0	-	
보호	일상생활관리	4,115	4.5	27.0	99.5
	위생건강관리	4,123	4.5		99.7
	급식지도	4,125	4.5		99.7
	생활안전지도	4,096	4.5		99.0
	안전귀가지도	4,097	4.5		99.0
	5대안전의무교육	4,125	4.5		99.7
교육	숙제지도	4,030	4.4	21.3	97.4
	교과학습지도	4,094	4.5		99.0
	예체능활동	4,054	4.4		98.0
	적성교육	3,368	3.7		81.4
	인성·사회성 교육	3,977	4.3		96.2
문화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4,089	4.5	21.8	98.9
	관람·견학	4,099	4.5		99.1
	캠프·여행	4,035	4.4		97.6
	공연	3,683	4.0		89.1
	행사(문화/체육)	4,029	4.4		97.4
정서지원	연고자상담	4,091	4.5	13.8	98.9
	아동상담	4,118	4.5		99.6
	보호자교육	3,657	4		88.4
지역사회연계	행사·모임	3,703	4.1	16.9	89.5
	기관홍보	3,981	4.3		96.3
	인적연계	3,788	4.1		91.6
	기관연계	4,069	4.4		98.4

주: 중복응답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나)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현황

문화예술교육은 단편적인 예술교육이나 문화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문화가 맞물려 작용하는 교육으로 이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발달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정의 되어 진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화와 관련한 서비스는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한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을 아동·청소년 돌봄 시간에 다양한 문화관련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존감 및 문화적인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운영관리를 위한 전담행정인력의 인건비, 운영 학습비, 교육 기자재, 결과발표회비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프로그램 운영 강사연수 예산을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 교육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를 기준으로 32개의 운영단체가 600개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2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9,662명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2〉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 현황

운영단체	교육시설	프로그램	교육인원
32개	600개	622개	9,662명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20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지역별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를 기준으로 울산시가 58명의 아동이 3개의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적었고 그 다음으로는 세종시가 75명의 아동이 5개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시·도는 전라남도도 1,798명의 아동이 107개의 프로그램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경기도로 1,449명의 아동이 98개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3〉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

(단위: 개, 명)

지역	프로그램 수	이용아동 수
강원	28	535
경기	98	1,449
경남	57	897
경북	76	1,103

광주	20	313
대구	28	407
대전	11	220
부산	8	114
서울	17	264
세종	5	75
울산	3	58
인천	15	198
전남	107	1,798
전북	48	662
제주	10	115
충남	52	862
충북	39	591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내부자료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음악, 미술, 미디어, 연극, 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은 해당 지역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에 의해 결정되어 지역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4〉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동 지역	프로그램 분야	단체 명
강원, 충북	미디어	강원문화예술교육연구소
강원	음악, 무용, 미술	예술교육연구소 (썬팡타스틱)
서울, 경기, 인천	무용,	미술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 인천	연극, 통합	돌락날락 예술가게
서울, 경기, 인천	통합	문화예술NGO <예술과 시민사회>
서울, 경기, 인천	서예, 미술, 미디어	Art&Culture Story 문밖세상
서울, 경기, 인천	무용	설향무용단
서울, 경기, 인천	미술, 난타	색색깔깔 놀이체험단
서울, 경기, 인천	연극	아트팩토리
대구, 경북, 경남	미디어, 미술	로카
울산, 경남, 부산	음악, 통합, 미술	문화예술센터 결
대구, 경남, 부산	문학, 미디어, 미술	상상편집소 퍼플
대구, 경북	미술	안다미로귀때박물관
대구, 경북, 경남	음악, 미술, 무용	예술마을사람들
경남	통합	은하문화예술교육연구소
대구, 경북, 경남	음악, 미술	한국문화예술교육멘토링협회
충북, 충남, 세종	미술	공감문화예술아카데미개비
충남, 세종, 대전	음악	문화공간대
충북	통합	문화학교 숲
세종, 대전	음악	뮤직팩토리
충남, 세종, 전북	통합, 연극, 문학	(사)충남교육연구소
제주	통합	가을바람
제주	음악, 미술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	미술	굿붐스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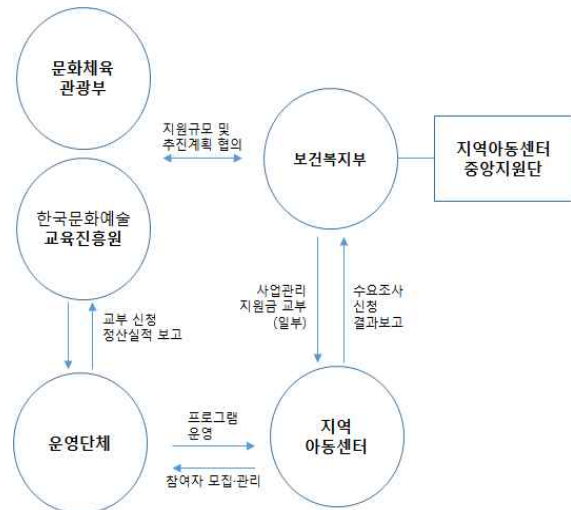
전북, 광주	무용	띠움
전북, 전남, 광주	음악, 미디어	문화공동체 아우름
전북, 전남, 광주	난타	(사)타악연회원 아귀
전북, 전남, 광주	통합	야호문화나눔센터
전북, 전남, 광주	통합, 미술	(주)메이아이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지역아동센터) 교육시설 신청 안내

다) 사업추진체계

지역아동센터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총괄적인 추진계획 하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다. 중앙부처는 협의를 통해 매년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범위를 결정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를 공모하고 선정하며 사업운영과정 전반을 관리한다.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이 지원아동센터로부터 문화예술교육 수요를 취합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전달하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단체와 매칭한다. 선정된 운영단체는 지역아동센터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교육대상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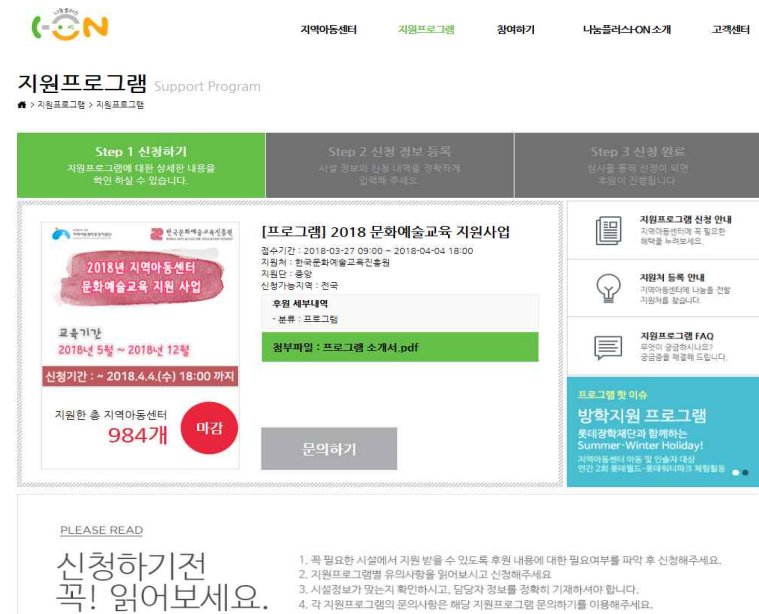
〈그림 III-1-13〉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추진체계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다운로드일(2018.12.1.)

지역아동센터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을 통해 신청하고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은 16개 시도지원단과의 협력 하에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나눔 플러스 I-ON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나눔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나눔 플러스 I-ON에서 후원기업 및 정부부처, 종교단체 등 다양한 지원 단체의 프로그램을 조회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은 지원프로그램 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한다. 선정 시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참여하게 된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도 나눔 플러스 I-ON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림 III-1-14〉 지역아동센터 나눔 플러스 I-ON 내 문화예술교육 신청 플랫폼



출처: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홈페이지. 다운로드일(2018.12.1.)

2.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2.1. 지원사업의 목적 및 대상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목적은 지역 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정기적인 문화예술교육 경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아동·노인·장애인 참여자가 예술을 접하고 향유하며, 삶에 의미 있는 경험을 함께 만들어가고, 특히 특정 예술 장르와 기능 습득에서 나아가, 개인의 일상과 삶을 표현하고 풀어내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로, 아동의 경우 법인 양육시설·보호치료시설·자립지원시설·일시보호시설·종합시설이 포함되고,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포함된다. 즉 기관을 지원하면 기관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의 경우 지원규모를 보면, 아동의 경우 132개 시설, 30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 235개 시설, 316개 프로그램, 장애인의 경우 208개 시설, 408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I-2-1〉진흥원 복지기관 지원 사업 시설 수 및 프로그램 수(2018)

구분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계
시설 수	132	235	208	575
프로그램 수	300	316	408	1,024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2.2. 사업 내용

2.2.1 아동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에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강사와 함께하는 6개 분야(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의 예술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2.2.2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국의 노인복지관에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강사와 함께하는 5개 분야(무용, 미술, 사진, 연극, 음악)의 활동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한국 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노년층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예술로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느낀 삶의 변화와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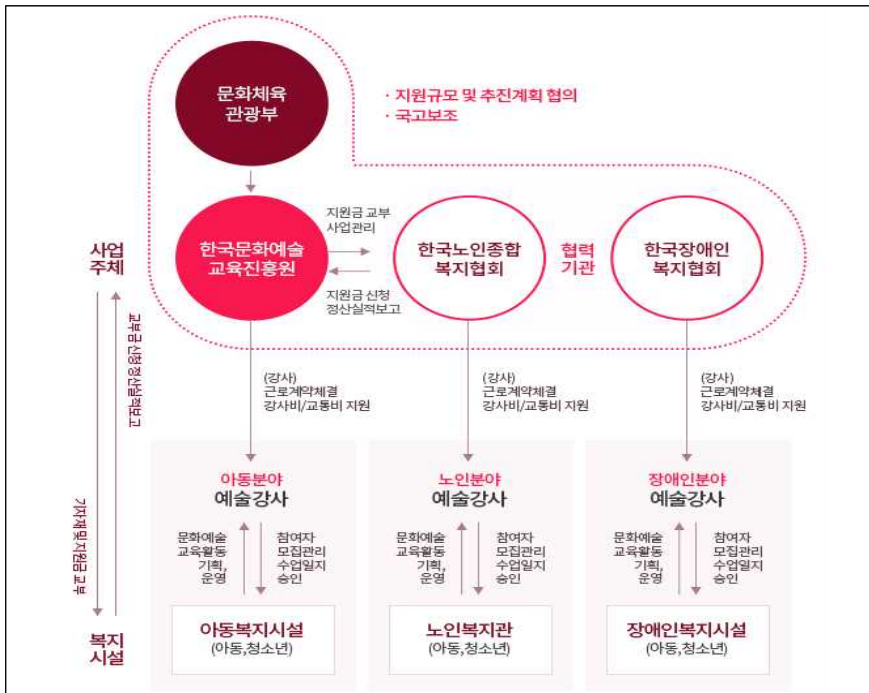
2.2.3 장애인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전국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강사와 함께하는 6개 분야(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의 활동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장애인이 예술을 접하고 향유하며, 삶에 의미 있는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종료되었으나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으로는 가족·친구와 함께하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2013~2017년)이 있다. 본 사업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기획으로 추진된 방학주말 프로그램이었다.

2.3. 운영체계

아동의 경우진흥원에서 직접 아동복지시설을 모집, 선정하고, 이후 선정 시설에 강사를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다. 반면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진흥회에서 각각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지원금을 교부하고, 각 협회에서 기관을 모집,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업추진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III-2-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



2.4. 운영실태 및 현황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된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한 첫해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 성과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대상과 내용이 더욱 다각화, 세분화되고 있는데, 아동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대상 범위를 지역아동센터까지 넓혔고 강의,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기획형 프로그램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연극제를 개최하여 노인 계층이 문화예술교육 수혜자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과 장애인 주변인(가족, 친지 등)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2.4.1 아동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아동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복지시설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자존감 회복과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문화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정책 사업이다. 2004년부터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 후원,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메세나협회의 주관으로 진행하였고 2007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다.

‘아동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미취학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1년간 총 5만 3,822명이 참여하였고, 국악, 연극, 영화, 무용, 음악, 미술 총 6개 분야의 예술강사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현장체험 학습을 운영하며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금과 기자재가 함께 지원되었다.

〈표 III-2-2〉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07~2017년)

구분	참여시설 수 (개)	개설반 수 (개)	참여인원 수 (명)	예술강사 수 (명)
2007년	201	647	7,263	236
2008년	178	571	6,572	216
2009년	235	616	7,695	288
2010년	143	372	4,542	210
2011년	144	386	4,610	215
2012년	147	363	4,243	200
2013년	160	379	4,423	188
2014년	145	346	4,545	204
2015년	150	331	3,690	204
2016년	145	328	3,246	165
2017년	143	303	2,993	151
계	1,791	4,642	53,822	2,277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a),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a), 「2015년 연차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 「2016년 연차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2017년 연차보고서」

2004년~2006년까지 3년간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아동·청소년(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후 2007년 한국메세나협회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사업 이관하였다. 2008년 각각 진행되었던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고, 2008년 보육시설 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소외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 예술캠프를 추진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부처 간 협력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아동양육시설(보육

원)에 한정하였다. 2011년에는 지원기관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양육시설(보육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시설에도 지원을 확대하였다. 2015년에도 지원기관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5개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2015년에는 음악 분야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표 III-2-3〉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주요사항

연도	사업진행 사항
2007년	한국메세나협회→교육진흥원(사업이관)
2008년	지원기관 범위 확대(지역아동센터 포함)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통합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업무 협약 지원기관 범위 축소(지역아동센터 제외)
2011년	지원기관 범위 확대(직업훈련시설 추가)
2015년	지원대상기관 범위의 확대(아동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음악 분야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a),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4.2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부터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사회보장서비스는 물론 문화복지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관련 정책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노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향유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께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체적인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노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관련 정책연구 및 관련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본 사업의 타당성과 방향성을 검토하였는데, 2005년 「노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연구」(문화관광정책연구원)와 ‘독거노인 대상 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사업’(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노인을 문화예술교육 정책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본격화된 노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만60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12년간 총 4만 5,443명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과 소통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표 III-2-4〉 노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06~2017년)

구분	참여시설 수 (개)	개설반 수 (개)	참여인원 수 (명)	예술강사 수 (명)
2006년	48	93	916	33
2007년	59	60	1,095	43
2008년	67	67	1,297	33
2009년	62	58	1,240	30
2010년	84	143	2,853	70
2011년	132	153	3,410	87
2012년	206	206	4,890	100
2013년	169	271	6,396	118
2014년	190	269	5,353	145
2015년	200	294	6,050	162
2016년	213	327	5,709	145
2017년	226	314	6,234	148
계	1,656	2,255	45,443	1,114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a),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a), 「2015년 연차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 「2016년 연차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2017년 연차보고서」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단체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을 시작했던 2006년부터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연극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단체 지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노인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를 선정하고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2008년 각각 진행되던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고, 2010년 무용, 음악 2개 분야를 추가하여 3개 분야(연극, 무용, 음악)에 대해 지원을 하였다. 이와 함께 지원기관 범위를 축소하여 노인복지관, 종합회관,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원하던 것을 노인복지관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011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문 역량을 활용하였다. 이때부터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 통한 사업 안내·접수·심사·강사비 지급이 시작되었다. 2011년에는 연극분야 참여 복지기관 대상으로 ‘청춘연극제’를 실시하였고, 2011년 노인 문화예술교육 요구조사 및 측정 지표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3년에는 지원분야에 미술, 사진 2개 분야를 추가로 지원하여 5개 분야(연극, 무용, 음악, 미술, 사진)를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연극분야만 다루던 ‘청춘연극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여 ‘청춘제’로 이름을 바꾸어 개최하였다. 2015년에는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1인당 최대 150,000원 지원에서 1인당 최대 170,000원(미술분야)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음악 분야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표 III-2-5〉 연도별 노인복지관 지원사업 주요사항

연도	사업진행 사항
2006년	예술강사지원사업: '노인복지관 연극교육 지원사업' 진행
	단체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 선정·지원사업 진행
2008년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통합
2010년	지원분야를 연극, 무용, 음악 3개로 확대
	지원기관 범위의 축소(노인복지관만 지원함)
2011년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청춘연극제’ 개최(연극분야 시설)
	노인 문화예술교육 요구조사 및 측정 지표 개발 실시
2013년	지원분야를 연극, 무용, 음악, 미술, 사진 5개 분야로 확대
	‘청춘연극제’→‘청춘제’ 전 분야로 확대
2015년	1인당 최대 지원예산 170,000원(미술)으로 확대
	음악 분야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a),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4.3 장애인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을 매개로 장애인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고 충족하기 위해 기획된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참여자의 문화예술적 경험뿐 아니라 교육활동을 통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의의가 있다. 장애인을 도움의 대상이 아닌 학습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적 관계 속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인 주변인(가족, 친구 등)에 대한 교육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본 사업의 설계를 위해 2005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장애·비장애 통합 문화예술교육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년 동안 총 2만 2,367명이 참여하였다.

〈표 IV-2-6〉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06-2017년)

구분	참여시설 수 (개)	개설반 수 (개)	참여인원 수 (명)	예술강사 수 (명)
2006년	23	23	2,693	17
2007년	20	20	2,874	18
2008년	32	32	343	28

구분	참여시설 수 (개)	개설반 수 (개)	참여인원 수 (명)	예술강사 수 (명)
2009년	30	30	310	31
2010년	47	63	628	45
2011년	58	65	650	48
2012년	89	101	1,060	61
2013년	96	137	1,457	67
2014년	124	263	2,202	127
2015년	182	333	2,854	173
2016년	250	402	3,611	182
2017년	237	409	3,685	195
계	1,188	1,878	22,367	992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a),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a), 「2015년 연차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 「2016년 연차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2017년 연차보고서」

2006년에 장애인 대상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였다. 강사 지원사업으로 정신지체(현 지적장애) 아동 무용교육, 장애아동 어머니 대상 연극교육을 실시하였고, 단체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중 일부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단체가 실행하였다. 2007년에는 장애아동 대상 무용교육을 실시하였고, 장애아동 부모를 위한 연극교육도 실시하였다. 2008년에는 각각 진행되던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였고, 2010년에는 음악 분야 추가로 2개 분야(지적장애아동 대상 무용, 발달장애아동-어머니 대상 음악)로 지원이 확대되었다. 2010년에는 지원기관 범위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기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축소하였다. 2011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문 역량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장애인복지관협회를 통한 사업 안내·접수·심사·강사비 지급이 시행되었다.

2011년에는 전국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활동 프로그램 실행 및 욕구조사 연구를 시행하였다. 2012년에는 2012년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및 욕구조사(장애아동 대상 프로그램 중심으로)를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미술, 영화 분야 추가로 4개 분야(무용: 지적장애아동, 음악: 발달장애아동-양육자, 미술: 아동·성인, 영화: 성인)로 지원 분야가 확대되었다. 2014년에는 국악, 연극 분야가 추가되어, 6개 분야(무용: 지적장애아동, 음악: 발달장애아동-양육자, 미술: 아동·성인, 영화: 성인, 국악: 아동·성인, 연극: 아동·성인)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전 분야에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장

에인복지관에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지원기관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원 예산도 1인당 최대 150,000원 지원에서 1인당 최대 170,000원 지원(미술분야)으로 확대하였다.

〈표 III-2-7〉 연도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주요사항

연도	사업진행 사항
2006년	다양한 장애인 문화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중 일부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단체가 실행
2007년	장애아동 대상 무용교육 실시
	장애아동 부모를 위한 연극교육 실시
2008년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통합
2010년	지원분야를 무용, 음악 2개로 확대
	지원기관 범위의 축소(장애인복지관만 지원)
2011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1년 전국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활동 프로그램 실태 및 욕구조사
2012년	2012년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태 및 욕구조사 (장애아동 대상 프로그램 중심으로)
2013년	지원 분야를 무용, 음악, 미술, 영화 총4개 분야로 확대
2014년	지원 분야를 무용, 음악, 미술, 영화, 국악, 연극 총6개 분야로 확대
	보조인력 배치 및 인건비 지원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평가 질적 연구(본사업 및 기획사업)
2015년	1인당 최대 지원예산 170,000원으로 확대(미술 분야)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a),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IV.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통합적 체계 구축 방안 분석

- 1. 사회 문화예술교육 실무자 대상 질적 분석
- 2. 타분야 사업의 운영체계 비교 분석

IV.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통합적 체계 구축 방안 분석

1. 사회 문화예술교육 실무자 대상 질적 분석

1.1. 사회 문화예술교육 실무자 면접조사

1.1.1 면접조사 개요

가) 면접조사 진행

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통합적 지역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 그룹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면접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1개 지역은 개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면접조사의 진행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IV-1-1〉 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실무자 면접조사

구분	일시 및 장소	대상	참여자	주요 논의 내용
실무자 면접조사 1차	•일시: 2018.10.26. •장소: 서울조사센터 회의실	•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센터장 (3인)	•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센터장 3인 • 연구진 5인	•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지역화 관련 배경
실무자 면접조사 2차	•일시: 2018.12.17. •장소: 오송역 컨퍼런스센터 회의실	•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센터장 (1인) • 사회문화예술교육 전문가 (1인) ※前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센터장	•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센터장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총 2인) • 연구진 4인 • 진흥원 담당자 1인	• 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중앙사업의 지역 이관 방식 • 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지역화가 가지는 의미와 본연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에 대한 논의
실무자 면접조사 3차	•일시: 2018.12.18. •장소: 전북 문화예술회관 회의실	• 사회문화예술교육 전문가 (1인) ※前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1인) • 연구진 2인	• 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지역화에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 • 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킹 등 협력 체계 구축

나) 참여자 선정과 분석 방법

실무자 면접조사의 참여자 선정방법은 질적 연구 표본추출방법인 목적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이 기법은 특정 환경, 사람, 사건 등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다른 선택에서는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이거나 특정 경험을 많이 한 사람,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면접조사 참여 지역은 총 6개 지역으로 서울·경기, 충청, 경상, 전라 등 지역 안배와 지역 특성(특별시 및 특별자치시 각 1개 지역, 광역시 2개 지역, 도 2개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표 IV-1-2〉 실무자 면접조사 참여 지역 현황

구 분	참여 지역
특별시 및 특별자치시	2개 지역 (지역1, 지역2)
광역시	2개 지역 (지역5, 지역6)
도	2개 지역 (지역3, 지역4)

사회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면접조사 1차~3차의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표 IV-1-3〉 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실무자 면접조사 참여자

구분	순번	참여자	지역	기관 및 직위	성별 및 연령대
실무자 면접조사 1차	1	A	지역1	지역1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여 (40대)
	2	B	지역2	지역2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남 (40대)
	3	C	지역3	지역3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남 (40대)
실무자 면접조사 2차	4	D	지역4	지역4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여 (40대)
	5	E	지역5	독립 센터 센터장 (前 지역5 문화예술교육지원팀장)	남 (40대)
실무자 면접조사 2차	6	F	지역6	지역6 문화재단 교육팀 팀장 (前 지역6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팀장)	여 (40대)

면접조사의 분석은 전체 면접조사 내용의 전체 녹음 및 반복 듣기를 통해 주제별로 범주화하고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 질의내용

질의내용은 주요 논의 범위를 연구진회의 등을 통해 정한 후 구체적 질의내용 정리하였다. 면접조사 1차는 지역센터의 사업·프로그램 개발, 사업·프로그램 운영과 전달체계 등 지역센터 현황 중심으로, 2차 및 3차 면접조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지역화, 향후 개선방안, 네트워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표 IV-1-4〉 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실무자 면접조사 질의 내용

구분	질의 내용	
실무자 면접조사 1차	사업/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각 지역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프로그램 현황 • 개발 사업/프로그램 개발의 과정 및 방식(육구조사, 팀워크, 지역사회 연계, 기관간 협조 등) •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이나 수요 등을 반영한 방식 • 생애주기별 진행 프로그램/사업의 개발 • 취약계층 대상으로 별도 사업/프로그램의 개발 • 사업/프로그램의 주 대상자 선정 방식 • 사업/프로그램 개발 시 애로사항 • 현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프로그램이 지역사회를 중심/기반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필요한 개선사항
	사업/프로그램 운영과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센터와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지도 • 현재 제공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주요 대상자와 이용자 • 사업/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공간 포함)을 활용 현황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 방식 (활용하지 않는 경우 이유 등) • 지역사회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사업/프로그램 운영 • 사회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 내 협력망 구축에 대한 인식 • 센터 및 프로그램/사업의 홍보 방식 • 사업/프로그램의 대략적인 운영 및 전달체계 • 사업/프로그램 운영 및 전달체계가 지역사회 특성에 부합하여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견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문화영역) 다른 지원서비스/ (복지 영역) 사회서비스 등과의 차별성 (정체성) •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지역사회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이나 전달체계가 지역사회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에 대한 의견
실무자 면접조사 2차 / 실무자 면접조사 3차	지역화의 전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지역화를 지향한다고 할 때 업무의 지역 이전에 그치지 않는 ‘지역화’의 전제 조건 (인력 및 예산 / 사업의 자율성 / 전달체계 등) • 단계별 이양이 된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거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항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중심의 사회문화예술 / 수요자 중심·생애주기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실행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안할 수 있는 내용 · 현행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실무적·심층적·구체적 내용/지역과 수요자를 고려한 개선 (발전)방안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화의 내용 • 광역단위, 기초단위에서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여 네트워킹하는 관계에서 지역센터의 역할 (현재 수행하는 역할과 이상적인 역할)

1.1.2 주요 내용

가) 지역센터 현황

2017년 세종시를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센터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경북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지자체 문화재단¹⁸⁾ 산하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18) 대부분 광역시도 출연기관

- 지역센터 위탁: 경북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문화재단에 위탁한 상태
 - 경북은 문화재단이 없으며, 경북 지역센터는 법인 산하 민간 단체

지역 센터의 사업 수행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 중앙에서 지역센터의 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원 하는 사업을 동일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적 역량 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규모, 대상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주요 내용
지역1	○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1) 어린이 청소년: 지역1 문화교육센터 2)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아동: 관악어린이창작놀이센터 3) 완전 취학의 취약계층에 적합한 사업: 서울예술치유학교 (독거노인, 청소년, 재소자, 경력단절 여성, 위기청소년 등 대상으로 마음의 안정이나 회복을 위해서 실시 4) 시민예술대학 (성인대상) ○ 생활문화예술교육 사업팀이 별도 구성
지역2	○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생애전환 문화예술사업 : 중장년 대상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실시 (이 사업안에 아카데미 사업 운영- 시민대상의 문화예술 강좌형태) — 지역 소규모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
지역3	○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토요예술학교나 지역특성화 사업, 생활문화교육사업, 문화파출소 등

센터의 인력구성은 보통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성되는데, 지역1은 직원 규모 11명 중 정규직 6명, 지역2는 직원 8명 중 정규직 4명, 지역3은 직원 6명 중 팀장만 정규직이며 5명은 계약직으로 구성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

- 재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센터의 인력구성은 보통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성되는데
 - 지역1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11명 중 정규직이 6명, 지역2는 8명 중 정규직이 4명, 지역3은 6명 중 정규직은 팀장1명으로 안정적인 인력구성과는 거리가 있음.
 - 사업비에서 계약직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는데, 사업이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업비로 활용하는 계약직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센터의 예산규모 역시 지역별 편차가 있는데, 지역1의 경우 지자체 자체 예산 사업 규모가 약 9억원과 지역센터 이외에 허브팀도 운영하는 등 조직과 예산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고, 지역3은 중앙 추진사업(예산 매칭 사업)¹⁹⁾ 11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가 약 20억원 규모였으며 자체 사업을 위한 예산 규모는 매우 미비한 상태였다.

19)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광역(혹은 기초 지자체)지자체와 50% 매칭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됨

	주요 내용
지역1	○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9억정도 (저소득교육지원 6억, 발달장애인 미술교육 1억, 청각장애인 지원교육 2억 등) ○ 센터 말고 허브 팀도 운영
지역3	○ 토요문화사업 예산이 11억. 총 사업비가 20억이 조금 넘는 수준임 — 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8개가 있는데, 교육사업중에서 인건비 빼고 하면 토요문화예술학교 사업이 가장 많음

나) 지역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지역화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었는데 하나는 ①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의 지역화를 추구하기 위한 지역센터의 운영 방향을 의미하는 다소 장기적 논의이며, 다른 하나는 ②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중앙의 운영 사업을 지역센터에 이관하는 방식에 대한 것으로 다소 실행중심적인 논의이다.

(1)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의 지역화를 위한 지역센터 운영 방향

지역에 대한 다양한 담론²⁰⁾과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의 추진이라는 지향점을 위해 지역센터가 어떤 형태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관계를 맺으며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적 지향점을 가지고 인력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 활동이 가능한 체계의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진행이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지역화로 볼 수 있음
- 지역화: 지역·대상의 초점을 두기 보다는, ‘지역안에서, 지역에 의해’에 초점을 두며
 - 지역센터의 지역에서 수요자(지역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수요자를 ‘읽고 만날 수 있는’ 역할로 이해
 - ‘지역센터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지역센터가 자체 기획력을 가질 수 있는가로 실현될 수 있으며,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문화예술교육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지역 인프라의 활용 등을 위한 센터의 역량이 구비되었는가를 지역화 준비의 하나로 생각

20)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논의에서 ‘지역’의 개념은 많은 논의를 통해 정제되어 왔다. 지리적 경계에 기반을 둔 전통적 관점의 공간적 범위 개념에서부터 환경변화에 상응하는 사회·문화적 지역성에 대한 관심, 지역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공통된 이해 관계 위에 형성된 공동 생활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지역의 공통된 유대, 사회적 상호작용에 바탕을 둔 지역 공동체로 의미의 확장을 해 온 것이다(추미경 외, 2016; 34). 이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에서 ‘지역’이 강조되는 것은 지역이 문화예술교육이 펼쳐지는 현장이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결과와 영향을 구체적으로 발현시키는 물리적, 인지적 공간이기 때문이다(임학순, 2015; 추미경 외, 2016, 재인용; 35).

지역센터 역할을 ‘능력있는 문화예술 전문 행정가’의 모습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지역내 관련 전문가(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역량있는 문화예술가 등)의 확보와 이들과 동반자로 사업하는 역할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 지역에서 지역센터의 역할은 ‘능력있는 행정가’의 모습
 - 지역 내 검증된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 파악
 - 지역단체에서, 사업진행하면서 문화예술단체 성격상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경산작업, 등 행정적 처리에 대한 지원
 -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 단체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능력
 -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노력
 - 지역단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효과를 보여주는 어려움
 - 지역센터에서 정기, 비정기 방문하여 활동 사진, 상황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제작, 확보를 통해 효과성 보여줌
- ‘능력있는 문화예술 행정가’ 역할로 접근할 경우, 지역센터의 위상과 독립성
 - 지역센터의 소속이 민간인 경우 공조직(재단등)에 속한 경우와 비교할 때 장단점이 있는데,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사업 확산을 고려한다면 공조직에 속한 활동이 필요함
 - 민간 기관: 창의성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지만, 좋은 프로그램의 공공화 및 지역 정착화에는 한계
 - 공조직(재단 등) 포함: 조직내 활동이 유연하지는 않으나 예산확보, 사업평가 등에서 행정라인과 결합하여 논의가 되므로 공공성 확보와 사업 확산 용이
- ※ 지역화에서 지역센터의 역할
 - 성과운영 관리 / 성과 확산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단체 등에 대한 효과적 지원
 - 이용자-지역단체와 질적인 교류 지원

(2) 중앙 운영 사업의 지역센터로의 이관 논의

(가) 현황

중앙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지역센터로의 이관 방식 등 지역화의 실행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의 예산 매칭을 통해 각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사업,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사업관리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만이 중앙(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역센터로 이관되어 2019년에 추진

될 예정이다. 타 사업은 문체부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개발된 신규사업으로 지역에서 직접 추진된다. 2019년 중앙(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역으로 이관되는 사업의 이관 형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중앙(진흥원)에서 관리하던 사업을 지역센터로 관리주체(예산의 관리집행 주체로)를 넘기는 역할
 - 지역센터: 행정적 역할 수행
 - 지역문화기반시설 중 공모 및 심사과정 진행, 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최종 정산, 사업평가
 - 진흥원: 사업 컨설팅 등 질 관리 역할
 - 사업방향, 내용에 대한 컨설팅 역할

(나) 지역화 방안

중앙사업의 지역센터로의 지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지역센터의 준비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역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앙사업의 효과적인 지역센터로의 안착을 위해서는 표준화된(규격화된) 지역 이관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입장1) 예산집행의 전달라인(pipeline)이 되는 것 이상의 지역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진정한 지역화를 위한 센터운영 기반의 재구축 필요
 - 지역센터에서 지역내 문화예술전문가와 같이 창의성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해보고 싶으나, 현재의 일률적 방식으로는 안됨
 -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과 지역센터의 교류가 별로 없고, 지역별로 사회기반시설의 구성, 성격이 다름
 - 지역센터에서 지역내 단체의 공모를 받아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지역 단체와의 교감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

○ (입장2) 규격화된(표준화된) 지역화가 필요

- 중앙사업 등 사업의 효과적 전국 지역센터로 안착을 지향
 - 지역센터의 여건,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중앙사업의 지역 이관에는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내리는 것이 맞음. 그리고 지역에서 운영해 보면서 차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이 가지고 있는 표준 모듈을 가져가고, 지역이 특성을 살려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포션을 제시해야 함 (자체성 포션은 차츰 확대)
- 지역화의 단계적 추진
 - (초기) 표준화된 모델로 진행
 - (중후기) 지역별 특성을 살린 자체 사업의 포션을 확대
 - ※ 표준모델을 운영해 봐야 지역 특성을 살리는 것이 가능할 것

※ (초기 표준화된 모델 진행시)

공모 단계에서는 표준화된 설계안에서 작성하도록 하되, 교부(실제 예산액 교부)단계에서는 지역센터별로 자율성을 주어 지역 특성을 살리는 방식을 도입

- (역할)
 - 지역센터: 교육, 모니터링, 간담회 등 진행 (공모단체 등에 대해서)
 - 진흥원: 17개 광역시도의 표준화된 모델 사업에 대한 컨설팅

— 자율성에 대한 예

- 대상 범주는 중앙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이용자 모집은 지역에서 지역 특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일정 기준만 준수하되) 진행
 - 예) 지역6 센터의 경우, 복지부 운영 복지기관에 대한 사업 운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여성가족부 운영 기관에 대한 사업 중심으로 실시
- 사업 운영을 위해서 인력 양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자체 점검 필요 (센터 인력 및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등)

(다) 지역화 방안에 대한 정리

① 지역화 방안

중앙사업의 지역이관을 위한 방식은 입장1과 입장2를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별로 자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차별화하여 몇 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지역화를 추진하는 방안과, 입장2를 전적으로 고려하여 전 지역센터에 대한 표준화된 모델을 내리고 단계적(초기, 중후기 등)으로 지역센터의 자율성 범위를 확대해가는 (사업 이관 중심의) 방안으로 좁혀질 수 있다.

○ (제안1) 성장형 방식의 지역화, 지역 이관이 필요

- 지역화에 대한 지속적 컨설팅을 하면서 단계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
 - 동일한 지역 이관보다는 지속적 확인과 컨설팅을 통해 지역의 준비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지역화의 수행이 필요
- => 단계별 체계적 이관 방식

○ (제안2) 표준화된 지역화를 통해 같이 경험하는 지역화 필요

- 초기 2~3년은 전국 지역센터가 표준화된 모델을 통해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 지역 센터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노하우를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리는 문화예술교육 기획을 할 수 있을 것

② 진흥원 역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든 진흥원은 단기적으로는 지역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컨설팅의 기능을 수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화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센터의 여건 기반 만

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 진흥원은 단계적 이관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컨설팅의 기능 수행

현재는 지역센터가 진흥원에 연계되는 명분이 부족하지만, 지역화의 모니터링과 컨설팅이라는 명분을 통해 진흥원의 연계 라인을 제공

③ 지역화를 위한 전제 - 공통분모

지역화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내용은 지역센터 인력의 고용 안정화와 지역화를 통해 지역센터와 지역(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 지역 주민, 관련 기관 등)이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지향점이다.

○ 지역센터의 인력

- 지역센터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을 통한 역량강화
 - “인력을 제대로 키우고 자리를 잡는다면” 그 역할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음
- 지역센터의 인력에 대한 투자는 지역센터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추진 방식의 다양화 가능
 - 현재 센터에서 지역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위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운영
 - 센터의 자체 기획력을 키운다면 지역단체와 동반성장하는 모형이 가능
 - 지역내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위한 독립적 협의를 통한 추진력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을 키울 수 있는 역할 수행

○ 지역센터의 고용 안정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센터 운영비의 안정적 확보, 사업비에서 전용하는 인건비의 경우 최소 3년간 지속사업 보장이 필요
- 지역센터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위탁자가 바뀌더라도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방식 필요

지역센터의 지역화를 위한 기반은 우수한 인력의 질 확보와 함께 ‘지역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내 다양한 기관에 대한 협조체계 구성을 위한 위상의 확보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 지역센터 운영의 독립성

- 지자체 출연기관인 문화재단 등 조직의 물줄기를 따르는 것과 동시에 중앙(진흥원)을 중심으로 타 지역 지역센터와의 협력 증진을 통해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만들어 가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으로 이해

다)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 네트워킹

(1) 광역과 기초 단위 협력

지역센터의 협력체계 구축은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에서 차별화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 광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체계는 문화재단과의 관계(지역간 문화재단 협력, 광역 문화재단-기초 문화재단의 협력 등), 지역 교육청,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등), 평생교육진흥원, 복지 관련 협회 등과의 협력망의 구축 등 기관과 협력 내용에서 지속적이며 폭넓은 협력망을 만들어야 하며, 기초 단위 협력체계는 지역내 평생교육시설, 문화지원기관, 복지기관과 사업 수행 등과 실무적 연계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 광역단위의 지역센터는 기초단위 지역과는 기초단위에 있는 문화재단과 협력을 하게 되고, 전달체계에서도 “문화재단 - 기초문화재단”의 전달체계를 가지게 된다.
- 기초단위 네트워킹: 어린이예술창작센터에서 어린이 공연을 개발해서,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어린이집들을 신청받아서 거기를 찾아가서 공연함

문화재단에 속한 경우 광역단위 문화재단과 기초단위 문화재단의 협력체계 안에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연계점, 협력지점을 찾기도 한다.

- 광역 지역센터는 기초 문화재단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도 함 (지역6 - 기초 문화재단 3개 존재)
 - 광역 지역센터는 기초 문화재단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수행 가능성을 보고 예산 등 지원 가능
 - 기초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개발
 - 기초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 지원예) 간담회 등을 통해 기초 문화재단에 3천만원씩 지원 등
 - 기초단위 문화재단 수행 사업에서 지역간 프로그램, 이용자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
- 광역단위 지역센터는 중심을 잡고, 기초단위 지역의 문화예술사(인력)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지역단체를 키우는 방식 필요
 - 같이 연계해서 사업하는 단체를 양성하여 현재는 축제 등 행사의 기획 등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협력하는 관계 형성 (지역5)

광역 지역센터에서도 도 단위의 지역센터와 광역시 지역단체의 협력 구축 내용은 지역 환경의 차이로 인해 고민하는 지점, 협력체계나 네트워킹을 이루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 도와 광역시는 균질하지 않으며 접근의 차이가 필요
 - (도 단위 지역센터) 지역 거점의 역량있는 단체를 만들고 키우는 작업 필요

예: (광역시) 1개 단체가 북구, 남구, 동구 등 하위 기초단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인 반면 (도 단위) 읍,면,군에 대한 문화예술 인프라 육성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하위 기초단위의 허브를 키우는 작업 필요 (예- F군의 문화예술교육 구심점이 되어 사업을 추진할 지역단체 발굴,양성 필요)

(2) 지역 기관과의 네트워킹 및 협력 체계 구축

중앙사업의 지역 이관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 기관이 있는데, 지역 아동센터 시도지원단, 노인·장애인복지관 지역 협회 등이 그러하다. 지역센터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내 협력 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원활한 지역화를 위해 지역센터가 서둘 수 있는 내용(정보)을 충분히 알려주는 것 필요
 -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복지관 등 지역협회 등 접촉 포인트를 찾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유 필요
 - 지역내 복지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매개기관(중앙단, 협회 등)의 정보 제공(매개기관을 확보한 경우, 수요자 모집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사업운영방식에 대한 매뉴얼 + 지역내 접촉가능한 기관 정보 제공 필요

현재 지역 센터가 지역 단체와 교류하는 단계는 주로 공모로 선정된 지역 단체와 간담회, 교육, 평가회 등을 통한 교류가 주를 이루는데, 지역6의 경우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단체와의 정기·비정기 간담회, 비정기적 모임 주최 등을 통해 비상시적 교류와 네트워킹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 지역6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 기획 단계: 지역센터에서 프로그램 기획 할 때 간담회 주최 (재단 내,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 대상)
 - 대상 파악에 대한 논의
 -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 관련 데이터 확인, 관련 사업 기관과의 간담회 진행 => 지역내 네트워크 형성
 - 사업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단계
 -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단체들이 ‘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선배 지역단체 프로그램에 신입 지역단체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사업 운영 노하우를 공유를 통한 동반 성장 및 참여 단체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지역센터가 주로 이루는 협력체계와 교류는 현재까지는 문화예술기관, 단체에 한정되어 있다

는 지적이 있었으며 문화예술 전문가가 리드하는 방식의 프로그램,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한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내 복지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3) 지역 주민과의 소통(홍보)

지역센터가 이루는 지역사회에 대한 사업 홍보는 지역별 편차가 있었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큰 지역은 홈페이지 홍보만을 통해서도 2~3일 안에 매진을 이루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용자 모집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지역센터 사업에 대한 홍보는 지역센터의 정체성을 지역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이어지며, 지역내 주민의 삶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어느정도 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도 연결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문화재단 등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에 대한 정례적 파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지역센터가 지역 주민과 접촉하면서 얻는 지역 주민의 욕구를 같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지역주민에게 지역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홍보 실시
 -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음
 - (학교) 예술강사 파견 사업이므로,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기회는 많지 않음
 - (꿈다락) 지역 주민들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음 (지역내 brand化)
 -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경제성이 무엇인가 에 대한 고민까지도 필요 (어떤 ‘사업’으로 홍보할 수 있는가 (타 교육-기능전수 및 강의식 방식 과는 다른 접근)
- 기획단계에서 수요자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 모집도 어려움
 - 수요자 참여를 고려한 컨텐츠 고민 필요
 - 지역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그룹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 필요
 - 예) 10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읍면에 사는 고령 노인의 삶은 어떠한가
 - 문화가 어떻게 접목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필요
 - 지역대상 조사 필요

라)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접근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에서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수요자는 많으나 공급자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 지역3은 섬이 전국에 가장 많은데, 농촌이 많고 인구수가 적다.
 - 대부분 군 단위로의 마을이 많이 있는데 문화예술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취약 지역이라고 하는 마을에

는 문화예술 운영 기관이 없다
 시나 읍 단위에서만 겨우 문화예술사업을 운영할 주체가 있다는 거다.
 취약지역에는 문화예술교육 운영주체가 없는거다.

문화소의계층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일반 프로그램 내 참여자 비율로 정하는 접근에서 문화소외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획하는 것과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취약계층을 10% 넣으라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획과 참여를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취약계층과 일반계층이 함께 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 (제안) 일정 비율의 참여 단체에게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획,실시하라고 하는 방안
 만약에 꿈다락 프로그램에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기획한다면 이 중, 3개 정도 단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등 으로 진행하는 거다.
 프로그램에 일정 쿼터의 참여 비율로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의 접근도 시도해볼필요가 있다
- 예)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 장애인을 위한 오케스트라 등

5) 지역별 예산 매칭의 차별화 지원에 대한 제안

지역 센터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센터의 여건은 지자체 상황에 따른 편차가 있으며 특히 예산규모는 지자체의 재정적 상황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등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현재 국비 사업의 경우 50% 지자체 매칭을 전제로 실시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매칭 비율의 조정을 건의하였다.

매칭 사업이 가지는 행정적 절차를 고려할 때 지역 욕구가 있으나 시(도)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시하지 못하는 등 경직된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매칭 예산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의 확대를 지양하고 국비 100%, 혹은 시 자체 사업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제안) 국비 100%, 혹은 아예 시비 예산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일원화된 예산지원 라인을 갖추고 이 비중을 유지하도록 함 (매칭펀드 예산의 확대는 자체 제안)
- (제안) 5:5 매칭이 아니라,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 사업은 중양 집중 편성, 아니면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한다.
 지금은 모두 일률적으로 5:5 매칭으로 들어가니까, 경직되어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 매칭되는 사업 비중이 너무 커서, 진흥원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지금 예산 지원 방식이 매칭 사업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비중이 좀 적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1.3 소결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10조)의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조·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교부신청을 하여 지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현재 17개 시·도 모두에 지역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16개 지역은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의 팀(TF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 지역센터는 문화재단 내 팀으로 운영되지 않으나 예산지원은 동일하게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17개 시·도 지역센터는 지역별로 최소 4인~최대 9인 규모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 울산 등이 4인 규모인 반면, 경북 9인, 서울과 세종이 8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 전국적으로 총 108명이며, 이 중 정규직 비율은 72.2%이다. 지역센터의 수행 사업은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예술동아리 교육활동 지원, 2019년부터 지역으로 이전되어 실시되는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 교육사 인턴십 사업 등이 있으며 이외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지자체/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자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있다.

지역센터 사업 수행 전달체계는 세 가지 유형으로 실시되는데, 유형1은 ‘문체부→지자체 보조사업(문체부:지자체의 5:5 예산매칭)→지역센터 수행’으로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동아리 교육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육사인턴십,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이 유형1의 전달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형2는 ‘문체부→진흥원 민간경상보조사업→지역센터 수행’이며 현재는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만 유형2의 전달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지역이관계획에 따라 진흥원 주관사업인 ‘부처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일부)’ 등이 지역센터로 이관되어 유형2의 형태로 수행될 예정이다. 유형3은 지자체/교육청 등 지방비로 자체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지자체/교육청→광역 문화재단(지역센터)’의 경로로 수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발표한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향후 방향으로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현재 진흥원 등 다양한 전달체계로 수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광역단위 지역센터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구조로 재구조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수요자 욕구 대응성을 높이고 지역별 문화·예술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 배경에는 지역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며 동시에 지역의 책무성을 높이는 지방분권화로의 변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화 이행을 위한 실무자 면접조사 논의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지역화 흐름으로 중앙사업의 지역 이관을 위한 객관적·현실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지역화(지역 이관)의 의미는 행정만 넘긴다는 것은 아니며 사회취약계층, 문화소의 계층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전제는 능력있는 인력의 확보와 센터 내 타 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센터 위상의 확보라 할 수 있다. 둘째, 중앙 사업의 지역센터 이관의 효과인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화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지역별 특성의 반영은 지역 내 주 대상자(문화소외계층)의 욕구 파악, 프로그램 이용 유인, 주제적 문화예술 향유자의 생산 등 수요자 중심 메커니즘을 만들고, 한편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가 주체를 파악하여 문화예술교육사업 프로그램 제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내 복지·교육·문화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맺어가는 이른바 지역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역 이관의 방식은 단계적 진행방식으로 초기에는 표준화된 사업수행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 반영을 적은 비중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점차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자율성(프로그램 대상자, 예산 활용 등)을 높이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별 센터의 역량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역 이관방식을 제안하였는데, 몇 가지 지역이관 모델을 상정하여 기획력과 자율성을 갖춘 센터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나머지 센터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성공적인 지역화의 공통 전제 조건은 사업 수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있는 인력의 양성과 확보, 고용안정에 대한 노력이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진흥원의 지원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참여와 책무에 기반한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협업 및 네트워킹은 장기적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광역단위 지역센터가 리더십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사회복지기관을 문화예술교육 사업 특화 기관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등 일정 부분 협업을 통한 지역화의 추진도 가능할 것이다. 지역 문화관련 시설들(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의집, 각종 문화 시설들)의 활용, 협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지역별 다양한 시도(성공과 실패) 사례의 공유를 통해 지역센터가 관련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내 대상자 중복을 줄이고 문화예술교육사업·프로그램의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도 필요할 것이다.

〈표 IV-1-5〉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인력 현황

(단위: 명)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8	7	5	6	4	7	4	8	7	6	5	7	7	6	9	6	6

주: * 정규직은 무기계약직(또는 예정자) 포함

〈표 IV-1-6〉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및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유형 1 (문체부/지자체→지역센터)				유형 2 (문체부→진흥원 →지역센터)	계
	유아문화예술 교육 지원*	예술동아리 교육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육사인턴십*	지역문화예술 교육 기반구축*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서울	200	-	210	2,168	-	2,578
부산	200	230	245	2,012	-	2,687
대구	200	300	245	1,372	-	2,117
인천	300	200	490	1,488	50	2,513
광주	300	250	245	1,514	-	2,309
대전	300	-	245	1,582	50	2,167
울산	300	-	245	1,342	-	1,887
세종	200	200	-	594	50	1,034
경기	300	-	210	2,042	-	2,552
강원	300	600	280	1,276	-	2,456
충북	300	700	280	1,742	-	3,022
충남	300	160	280	1,618	-	2,358
전북	300	200	280	1,626	-	2,406
전남	300	-	280	1,502	50	2,126
경북	300	-	280	1,080	-	1,660
경남	200	160	280	2,060	50	2,760
제주	200	-	105	1,072	-	1,377
합계	4,300	3,000	4,095	25,018	300	38,009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2018)

주: 1) 2019년 예산안 자료. 최종예산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2) 지역별 지자체/교육청이 실시하는 자체사업 및 예산은 미포함

〈표 IV-1-7〉 중장기적 관점의 지역 이관 가능 검토 대상 사업

사업명	부처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협력부처	보훈처	산업부	여가부		복지부	-	-	-
사업군	상이군경	근로자	방과후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지역아동 센터	아동	노인	장애인
협력기관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한국산업 단지공단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한국청소년 쉼터협의회	지역아동 센터 중앙지원단	전국 아동 복지시설	한국노인 복지관 협회	한국장애인 복지관협회
세부지원 대상	보훈복지 문화대학	산업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 센터꿈드림 •대전해맑음 센터	지역아동 센터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전국 노인 복지관	•전국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주간 보호센터 •장애인보호 작업장
예산 (2018년, 백만원)	216	391.5	320	729	3,870	2,122	2,932	3,460
(소계 4,919)						(소계 8,514)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2018)

2. 타 분야 사업의 운영체계 비교 분석

2.1. 교육 분야: 평생교육 시스템

평생교육은 소외계층 대상의 사업은 아니나 평생교육의 운영체계 및 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사회 문화예술교육에서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적 지역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 도출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평생교육의 목적 및 대상, 사업내용, 운영체계, 전달체계, 실태 및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 및 전달체계를 문화예술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1.1 목적 및 대상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평생교육진흥의무 조항, 제6항에서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를 표명하고 있다. 헌법 규정에 따라 1982년에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선언적인 의미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명시되었고, ‘사회교육전문요원제도’라는 평생교육 자격전문가 인정제도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그 이후 학교교육법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교육관련 법제가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1997년에 정비되었고, 이를 통해 「교육기본법」에서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피교육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밝힘과 동시에 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하여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는 ‘학교교육’, 제10조에서는 ‘사회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통해 교육 관련법의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3법에 비하여 주변적인 법률로 머물러 있었던 사회교육법이 1999년에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 추진체제가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은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 함께 평생교육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교육부, 2017평생교육백서, p16).

가) 목적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2022)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전으로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으로 하고 있다. 추진전략으로는 4P를 채택하여, 학습자(사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뜻하는 사람(People)전략,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뜻하는 참여(Participation)전략, 개인과 사회의 동반 번영 지

원을 뜻하는 성장과 번영(Prosperity)전략, 기관 및 제도 간 연계·협력 강화를 뜻하는 파트너십(Partnership)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4대 주요 과제로는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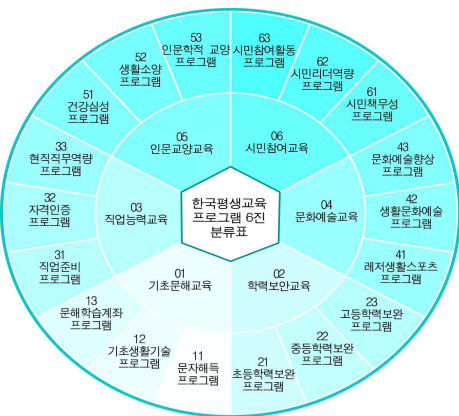
나) 대상

평생교육은 종적인 측면으로는 태교부터 노년기의 노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일생에 걸친 모든 교육을 의미하고, 횡적인 측면에서는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공간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의미한다.

2.1.2 사업 내용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의 유형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제시된 평생교육 6대 영역 즉,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진화(2010)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에 근거하여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에 대한 정의와 각 영역별 하위영역을 제시하였다(김진화, 2010).

〈그림 IV-2-1〉 한국 평생학습 프로그램 6진 분류표



자료: 김진화(2010). 평생학습계좌사업을 위한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지침.

가) 기초문해교육

기초문해교육은 언어적 기초 및 활용이 목적으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 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고 초등학력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말한다(김진화, 2010).

기초문해교육의 중분류 영역은 내국인 한글문해프로그램, 다문화한글문해프로그램, 한글생활 문해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내국인 한글문해프로그램은 한국인 중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 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이고, 다문화 한글문해프로그램은 다문화 외국인 중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 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이며, 한글생활문해프로그램은 문자해득 후 한글을 응용하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나) 학력보완교육

학력보완교육은 학력조건과 인증이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을 말한다(김진화, 2010). 학력보완교육 중분류 영역은 초등학력보완프로그램, 중등학력보완프로그램, 고등학력보완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초등학력보완프로그램은 초등학력의 보완 및 인증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이고, 중등학력보완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 학력의 보완 및 인증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이다. 고등학력보완프로그램은 전문학사 및 학사 학력의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이다.

다) 직업능력교육

직업능력교육은 직업준비 및 직무역량 개발이 목적으로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말한다(김진화, 2010). 직업능력교육의 중분류 영역은 직업준비프로그램, 자격인증프로그램, 현직직무역량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직업준비프로그램은 특정 직업에 새롭게 취직하기를 희망하고,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기능을 획득하고 관련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자격인증프로그램은 특정 직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소정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

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직직무역량프로그램은 현직 종사자에게 보다 발전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련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게 하고, 관련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라)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향유와 활용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을 말한다(김진화, 2010). 문화예술교육 중분류 영역은 레저생활스포츠프로그램, 생활문화예술프로그램, 문화예술향상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레저생활스포츠프로그램은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 및 전문적 스포츠관련 프로그램이며, 생활문화예술프로그램은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생활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문화예술향상프로그램은 문화예술작품 및 행위를 의미 있게 체험하고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마) 인문교양교육

인문교양교육은 교양확장과 소양개발이 목적으로 특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말한다(김진화, 2010). 인문교양교육의 중분류 영역은 건강심성프로그램, 기능적소양프로그램, 인문학적교양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건강심성프로그램은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촉진하고, 신체건강에 필요한 활동과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이고, 기능적소양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의 적절한 역할 수행과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소양과 관련된 기능적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인문학적교양프로그램은 전인적 품성과 지혜를 갖춘 현대인으로서 인문학적 교양과 상식을 확장하고, 문학, 역사, 철학과 관련된 체험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바) 시민참여교육

시민참여교육은 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성 활용이 목적으로 현대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

는 평생교육을 말한다. 시민참여교육 중분류 영역은 시민책무성프로그램, 시민리더역량프로그램, 시민참여활동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시민책무성프로그램은 현대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고,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며, 시민리더양성프로그램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익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민을 발굴 육성하고 그들의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시민활동프로그램은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조직 및 공익적 사업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2.1.3 운영체계

가) 인력

(1)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 인력 현황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 행정체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각 시·도 교육청이 협의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평생교육업무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1〉 광역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담당 부서

광역자치단체	주 담당 부서	담당인원
강원	교육법무과 교육지원팀	1
경기	교육정책과 평생교육팀	7
경남	교육지원담당관 평생교육담당	3
경북	인재개발정책관 소속	3
광주	자치행정국 청년정책과 소속	1
대구	교육청소년정책관 평생교육팀	6
대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소속	1
부산	교육협력담당관 평생교육팀	5
서울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23(국장 및 주무관 포함)
세종	(없음)	(없음)
울산	인재교육과 평생교육담당	3
인천	교육협력담당관 평생교육진흥담당	4
전남	청년정책담당관 인재육성팀 소속	1
전북	자치행정과 평생교육담당	3
제주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6(과장 포함)
충남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4
충북	정책기획관 교육지원팀 소속	1

자료: 교육부(2017). 평생교육백서. p. 56.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진흥원에는 원장급 17명, 국장·본부장급 16명, 실·팀장급 51명을 중심으로 총 338명이 종사하고 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국장·본부장급 4명을 포함하여 총 131명이 종사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종사자 현황

기관	종사자 현황							
	계	원장	본부장/국장	실·팀장	직원(연구원)	파견공무원	기간제근로자	기타
강원	8	1	-	1	4	2	-	-
경기	131	1	4	15	41	-	56	14
경남	4	1	1	2	2	-	-	-
경북	7	1	1	2	3	-	-	-
광주	14	1	1	2	8	1	1	-
대구	7	1	1	2	3	-	-	-
대전	40	1	1	4	34	-	-	-
부산	21	1	1	7	11	-	1	-
서울	16	1	11	3	9	-	2	-
세종	6	1	1	1	3	-	-	-
울산	9	1	1	2	3	-	1	2
인천	7	1	-	1	3	2	-	-
전남	9	1	1	2	4	1	-	-
전북	4	1	1	-	2	-	-	-
제주	36	1	1	2	3	16	13	-
충남	12	1	-	3	8	-	-	-
충북	7	1	1	2	3	-	-	-
계	338	17	16	51	144	22	74	16

자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협의회 내부자료(2017). 교육부(2017). 평생교육백서. p. 59

나) 예산

교육부는 2017년 12월 6일 2018년 교육부 예산으로 68조 2,322억원을 확정하였다.

이는 2017년 예산 61조 6,316억원과 비교했을 때 6조 6,006억원이 증가되었고, 2017년 대비 10.7% 늘어난 규모이다. 구체적인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3조 7,165억원, 고등교육에 9조 4,984억원, 평생·직업교육에 5,912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분야에 4조 4,261억원이 배정되었다. 이러한 교육부 예산 증액에 따라 평생교육 분야의 새 정부 국정과제인 매치업 운영(2018년 15.5억원)과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2018년 23.9억원) 등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평생교육예산은 오히려 감소된 모습을 보인다. ‘2018년도 교육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에 따르면 평생·직업교육 부문 예산은 5,912억원으로 2017년 6,195억원에서 283억원(4.6%) 감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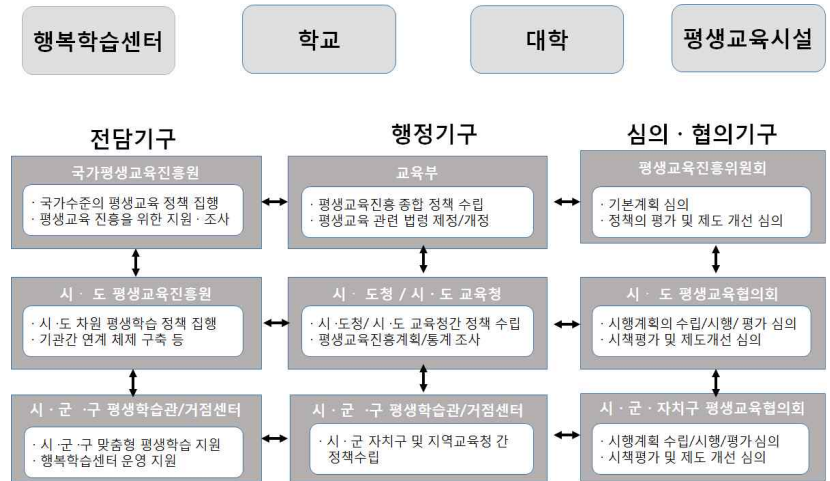
그리고 대부분은 직업교육 예산으로 순수한 평생학습정책 예산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순수한 평생교육 분야 예산으로 볼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예산은 2017년 504억원에서

336억원으로 168억원이 감소되었다. 신규 사업을 제외한 계속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평생 학습진흥 지원 10억원,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11억원,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 127억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40억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86억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7억원 등이다.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예산 336억원은 전체 교육 분야 예산의 0.049%에 불과하다.

2.1.4 전달체계

평생교육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민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년)은 국가와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평생교육 추진 체계 완성, 시간·공간 제약 없는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목표로 전달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2022)은 평생교육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평생교육정책 추진체계 내실화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운영 개선, 국가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연계협력 및 운영 내실화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림 IV-2-2〉 제3차 평생교육진흥계획에 따른 전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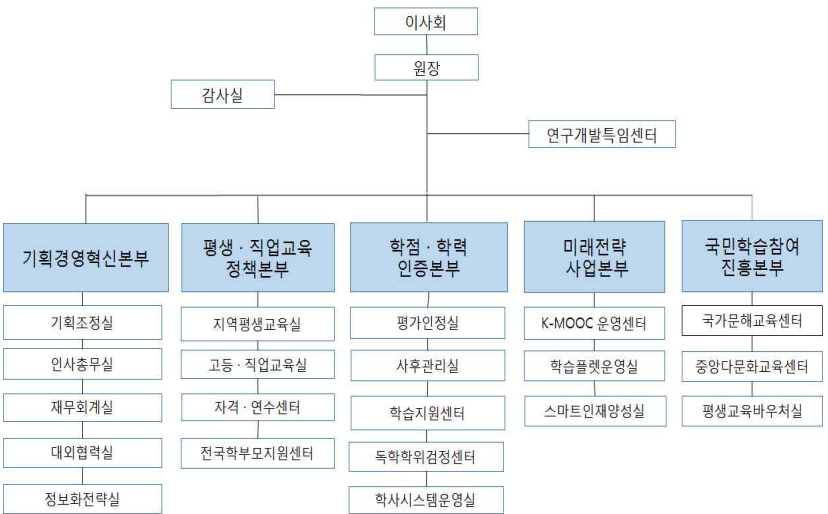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부(2017). 평생교육백서, p. 49

가) 중앙정부 전달체계

중앙정부 수준의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행정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명시한 학습권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2018년 10월 현재 평생미래교육국 산하에 4개의 과(미래교육기획과, 평생학습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이턴닝과)를 두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헌법 제31조 제5항(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3조(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평생교육법 제19조 제1항(국가는 평생교육진흥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에 따라 2008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개원하였고, 2012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다. 미션으로는 평생교육정책 실행을 통해 국민행복과 국가번영에 기여에 두고 있고, 비전으로는 학습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두고 있다. 핵심가치로는 도전적 실행, 고객 최우선, 소통과 협력에 두고 있다. 2018년 10월말 현재 조직구성은 직제 개정을 통해 1실, 1센터, 5본부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림 IV-2-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다운로드일(2018.11.26.)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기능은 평생교육 6대 영역으로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에 두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1대 기능으로는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10)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등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사업은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2)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3)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4) 평생학습계좌제, (5) 학점은행제, (6) 독학학위제, (7)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8)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9) 성인 문해교육 지원, (10)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11)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등이다.

나) 지방자치단체 전달체계

평생교육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다. 동법 제9조 제3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 전달체계는 광역자치단체 수준과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광역자치단체는 각 시·도 자치단체와 교육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전달되고,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시·군·구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행복학습센터)로 전달된다. 그리고 각 기관은 상호 협력·협 의하여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0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게 하고 있다.

〈표 IV-2-3〉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현황

기관	시설소유현황			운영현황		
	운영주체 소유	지방자치 단체소유	임대	법인설립	지정	지정기관
강원	○				○	강원발전연구원
경기		○	○	○		
경남			○		○	경남발전연구원
경북	○				○	대구대학교
광주		○		○		
대구			○		○	대구경북연구원
대전		○		○		
부산			○	○		
서울			○	○		
세종		○			○	세종인재육성재단
울산			○		○	울산발전연구원
인천			○		○	인천인재육성재단
전남			○		○	전남인재육성재단
전북		○			○	전북연구원
제주			○		○	제주발전연구원
충남			○	○		
충북	○				○	충북연구원
계	3	35	10	6	11	

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5월1일 조례 개정에 따라 2018년1월1일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함.

자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협의회 내부자료(20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nile.or.kr>) 교육부(2017). 평생교육백서. p. 57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현황을 보면, 운영주체가 소유한 경우는 3개(강원, 경북, 충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곳은 5개(경기 체인지업 캠퍼스, 광주, 대전, 세종, 전북), 임대를 한 경우가 10개(경기 본원 및 지식캠퍼스, 경남,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이다. 경기도는 3개의 캠퍼스로 나뉘져 있으며, 본원과 지식캠퍼스는 임대 형태, 체인지업 캠퍼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한 곳은 6개(경기,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충남), 다른 곳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이 11개(강원, 경남, 경북, 대구,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북)이다.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들은 대부분 지역연구원이나 지역인재육성재단을 지정하였고,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기초자치단체 전달체계

기초자치단체 역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크게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으로 나뉜다. 평생교육 업무는 행정과 교육지원청 모두 주로 과 혹은 팀 수준으로 분류하며,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도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결과, 2017년 12월 기준 기초자치단체 219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는 시·군·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지원할 수 있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총 226곳의 기초자치단체 중 153곳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갖지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동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기준 전국에 464개의 평생학습관이 운영 중이다. 그 중 평생학습관 운영의 의무가 있는 교육감이 344개를 설치 혹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V-2-4〉평생학습관 운영 현황

구분	기관수	설립주체				운영형태	
		국가지자체	법인	개인	기타	직영	위탁
교육감 설치 지정	344	258	64	7	15	279	65
지자체	122	122	-	-	-	113	9
총계	466	380	64	7	15	392	74
	〈22〉	〈1〉	〈14〉	〈2〉	〈5〉	〈20〉	〈2〉

* < >는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으로 총계에 포함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교육부(2017). 평생교육백서. p. 66

이외에도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1.5 실태 및 현황

가) 민간 전달체계²¹⁾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은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을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첫째,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다. 둘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

시하는 학원이다. 셋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다. 이 구분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표 IV-2-5〉평생교육기관 분류

관계법	구분	시설 구분	유형	
평 생 교 육 법에 의해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제20조	①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 인정시설 (교육감 지정)	각종학교, 기술학교 등	
	제21조	②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제22조	③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	
	제22조 시행령 제46조		원격교육형태	
	제23조	④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제24조	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법인, 주무관청 등록, 회원 300인 이상 시민단체를 지칭	
	제25조	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학/전문대 부설 평생(사회) 교육원 등	
	제26조 시행령 제44조	⑦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문, 방송 등의 언론기관	
	제27조	⑧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평생교육시설	산업교육기관, 학교실습기관	
제2조	평생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다 른 법령에 의한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직업교육학원		
	도서관법 제2조	도서관 중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국립중앙도서관 등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미술관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국립중앙박물관 등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여성 관련 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사회 복지 시설	사 회 복 지 사 업 법 제2조	사회복지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복지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아동보호시설
	직업 훈련 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교육훈련촉진 법제2조	직업교육훈련기관	
	기타	문화예술관련 기관 및 시설		전수회관, 문화원 및 문화의 집, 국악원 등

자료: 최돈민 외(2017). 평생교육학원의 평생교육법 소관 평생교육시설 전환 추진 방안 연구. P. 21
 교육부(2017). 평생교육백서. p. 71

21) 평생교육 백서(2017)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함.

현재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들과 연계·협력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의 상황이나 운영 프로그램 관련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나) 민간 평생교육기관 유형과 현황

(1)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 제2조의 6대 영역 중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을 포함하여 고등교육 영역까지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말한다.

(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명시하고 있다. 등록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은 평생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된다.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어 고등교육의 학력도 인정이 가능하다.

(나)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라 기업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전문대학 혹은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었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직원이거나, 해당 사업장과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의 근로자이다. 이러한 사내대학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대상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학력 인정이 되는 평생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 가능하며 원격대학 혹은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이 해당한다. IT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졌으며, 시·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는 형태의 고등교육이다.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나 학력·학위와 관계없는 원격교육도 가능하다.

(2)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된 6대 영역 중 학력보완교육을 제외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가)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9조에서는 학교장에게 수요자 관점으로 평생교육을 개발·시행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학교에서 진행하지만 학력과 상관없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학교장은 학교의 교실, 도서관, 체육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혹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초·중등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 제1항은 학교장이 학교의 시설 외에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해 평생교육시설을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서는 대학의 장이 대학생 혹은 대학원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라)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에서는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누구든지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공간의 제약이 적은 장점 때문에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의 기관수와 학생·학습자수가 가장 많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마)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백화점 등을 포함한 많은 유통업체와 산업체,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한다. 프로그램 수가 가장 많은 유형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바)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에 의하면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평생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명 확보하고 있으면서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에 속하는 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는 신문, 방송 등의 언론기관이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담당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면서 일간·주간·인터넷 신문 및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방송을 하는 법인,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중에 해당하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아)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식·인력 개발 사업을 진흥·육성해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는 첫째,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 용역사업, 교육 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으며, 둘째,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셋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1.6. 평생교육의 프로그램 분석 및 문화예술교육 활용 방안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에 근거하여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에 대한 정의와 각 영역별 하위영역을 제시하였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향유와 활용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과정을 추구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중분류 영역은 레저생활스포츠프로그램, 생활문화예술프로그램, 문화예술향상프로그램으로 분류한다. 레저생활스포츠프로그램은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 및 전문적 스포츠관련 프로그램이며, 생활문화예술프로그램은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생활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문화예술향상프로그램은 문화예술작품 및 행위를 의미 있게 체험하고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평생교육에서 세부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생활문화예술프로그램과 문화예술향상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평생교육의 분석을 근거로 문화예술교육에서 반영해 본다면,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와 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정의, 각 영역별 하위영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하여 영역을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역에 대한 정의와 각 영역별 하위 영역(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체계화 및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적 지역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1.7. 평생교육의 전달체계 분석 및 문화예술교육 활용 방안

평생교육의 전달체계에서는 크게 정부의 전달체계, 협조체계, 민간교육기관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의 전달체계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거점센터)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 협조체계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지원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교육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기관에서도 평생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즉, 평생교육은 구체적인 전달체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민간 평생교육기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육부는 평생교육의 총괄 및 전달체계를 담당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는 재정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운영상에서 혼란이 존재하기도 한다.

평생교육의 전달체계를 근거로 문화예술교육에 반영해 본다면, 구체적인 전달체계, 협조체계, 민간문화예술기관(단체)을 활용한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전달체계는 문화관광체육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있지만, 시·군·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시·군·구의 관련 조례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군·구(거점센터)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기초단체의 시민들에게는 현장중심 및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제공이 필요한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구(거점센터)까지 전달되는 전달체계 구축과 전문 강사 확보 및 지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협조체계는 시도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원화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 문화예술교육기관(단체)인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시도 운영위원회,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군·구 단위에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안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변화되는 문화예술교육을 수용하고, 특성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및 조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복지 분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 케어)

2.2.1 커뮤니티케어 도입의 배경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는 1단계로 노인 대상의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계획에서는 2019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노인 대상의 지역돌봄에 대한 기본계획만 제시되어 있으며, 추후 수행될 선도사업 모델의 운영을 통해 커뮤니티케어의 제공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큰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 ‘지역본권화’, ‘수요자 중심’을 지향하는 노인 대상 커뮤니티케어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유사한 변화 흐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커뮤니티케어 도입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 체계의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즉,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된 대형 시설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고,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사회적 입원의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총량 부족과 파편적 서비스 전달체계로 인해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취약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절대량 부족 상황에서 백화점식 서비스 나열, 서비스 이용 형평성의 제한, 포괄성 미흡, 서비스 품질 논란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노인 의료비 증가,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나타나게 되어 이를 예방하고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즉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과정에서 대부분의 돌봄 대상자들이 개인의 주거공간과 지역사회에 정주 희망을 강조(i.e., living/ageing in place)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재가서비스의 비용 효과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을 통해 부각되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돌봄 대상자의 확대가 돌봄인력의 부족 문제를 가중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일자리 확충 논의와도 연계되어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돌봄대상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 생활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합욕구 대응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의 다차원성이 부각되어야 하는 동시에, 현재 지역별 커뮤니티케어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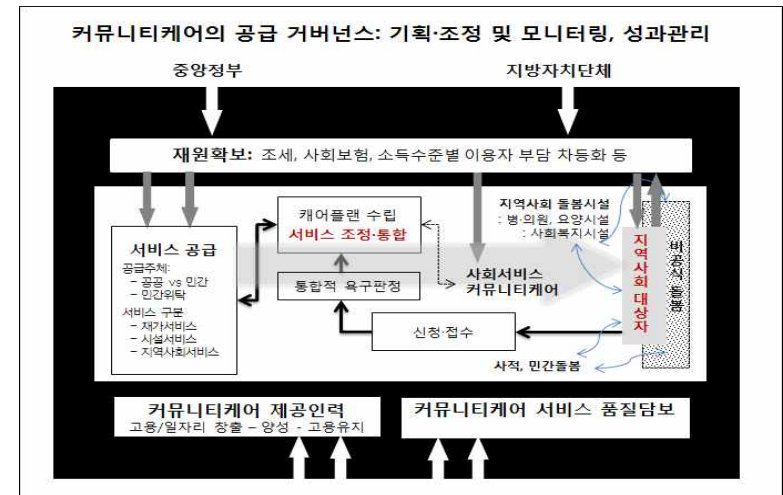
의 편차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지역마다 특성과 수요가 다르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잠재 대상의 집단별 특성을 고려할 때, 단일욕구에 대응하는 단일 서비스 제공체계의 한계는 매우 분명하며, 이러한 기존 서비스 공급방식을 유지하면서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자원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환이 요구된다.

2.2.2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5대 기본원칙

향후 커뮤니티케어 논의를 전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다음 제시된 5대 기본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각 쟁점별 정책적·학술적 지향의 공유와 실행방식의 구체화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공급의 거버넌스 구축: 사업집행 및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이용과 서비스의 통합성, 지속성 담보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 정비(서비스 이용과정·절차의 적절성·편의성/욕구판정과 케어플랜, 케어매니지먼트)
-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제공인력의 고용/일자리 창출↔인력양성↔고용유지
- 커뮤니티케어 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원 확보와 예산집행 방식의 혁신
-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의 품질의 담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그림 IV-2-4〉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형의 기본 프레임



2.2.3 커뮤니케이 추진 여건의 진단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케이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별 사업 추진 여건에 대한 진단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먼저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인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7조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으로 구분된다. 시설 유형별로 노인을 대상의 주거 편의, 급식·요양, 상담·교육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특정 목적을 가지나 공통되는 목적은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표 IV-2-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유형

종류	시설유형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 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노인복지법」 제31조(개정 2017.3.14.).

시·도별 노인인구 수 대비 노인복지시설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적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수는 관할 시·군·구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이 12,020개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자치시 세종시와 특별자치도 제주를 제외하면 울산이 922개로 가장 적었다. 종사자수의 경우도 경기도가 41,249명인 반면 울산은 1,802명으로 시도별 복지서비스를 제공인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IV-2-7〉 시·도 관할 행정구역 및 노인복지시설 현황(2017년)

(단위: 기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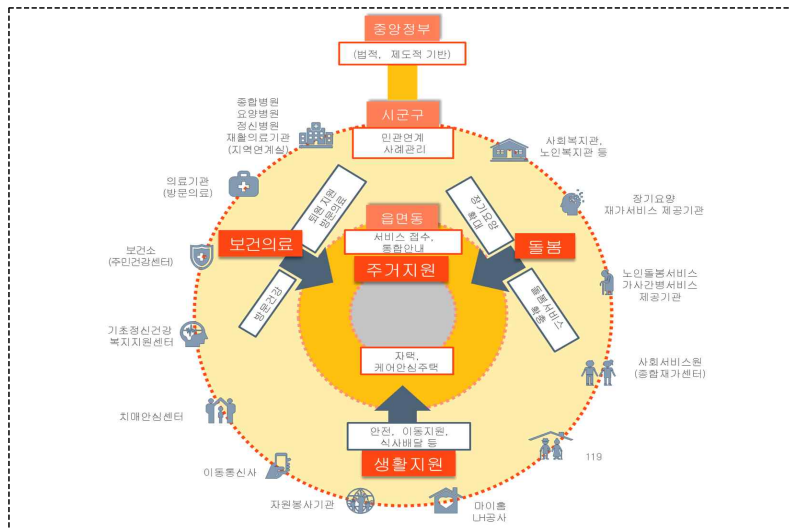
구분	관할 행정구역		65세 이상 노인인구(A)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구 천명당	
	시군구	읍면동		시설수(B)	종사자수(C)	시설수 (B/A*1000)	종사자수 (C/A*1000)
서울	25	424	1,359,901	4,892	19,480	3.6	14.3
부산	16	206	565,527	2,781	5,281	4.9	9.3
대구	8	139	347,459	1,933	6,206	5.6	17.9
인천	10	149	345,024	2,000	8,860	5.8	25.7
광주	5	95	180,862	1,677	4,773	9.3	26.4
대전	5	79	180,667	1,070	4,630	5.9	25.6
울산	5	56	116,633	922	1,802	7.9	15.5
세종	1	13	26,851	483	336	18.0	12.5
경기	31	560	1,467,835	12,020	41,249	8.2	28.1
강원	18	193	279,976	3,724	8,609	13.3	30.7
충북	11	153	252,434	4,529	6,033	17.9	23.9
충남	15	207	362,946	6,236	7,224	17.2	19.9
전북	14	241	351,282	7,239	7,339	20.6	20.9
전남	22	297	408,451	9,607	8,301	23.5	20.3
경북	23	332	512,681	8,678	8,938	16.9	17.4
경남	18	315	504,460	7,873	7,582	15.6	15.0
제주	2	43	93,117	576	2,533	6.2	27.2
전체	229	3,502	7,356,106	76,240	149,176	10.4	20.3

주: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8 노인복지시설 현황(2017.12.31. 기준)

2.2.4 노인 커뮤니케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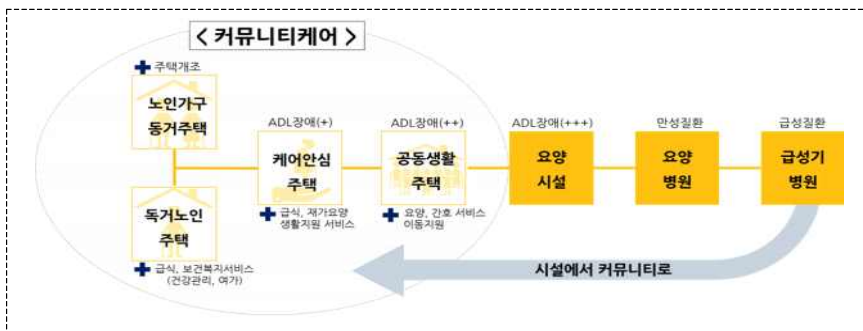
커뮤니케이에 대한 개념 정의는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단계 사업에서는 노령 등의 사유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서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주요 대상자이다. 예를 들면, 입원 치료 후 평소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방문의료, 요양, 돌봄 등의 케어가 필요한 사람, 시설에 입소해 있으나 커뮤니티 케어가 제공되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 자택,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어 계속 거주를 위해서는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림 IV-2-5〉 노인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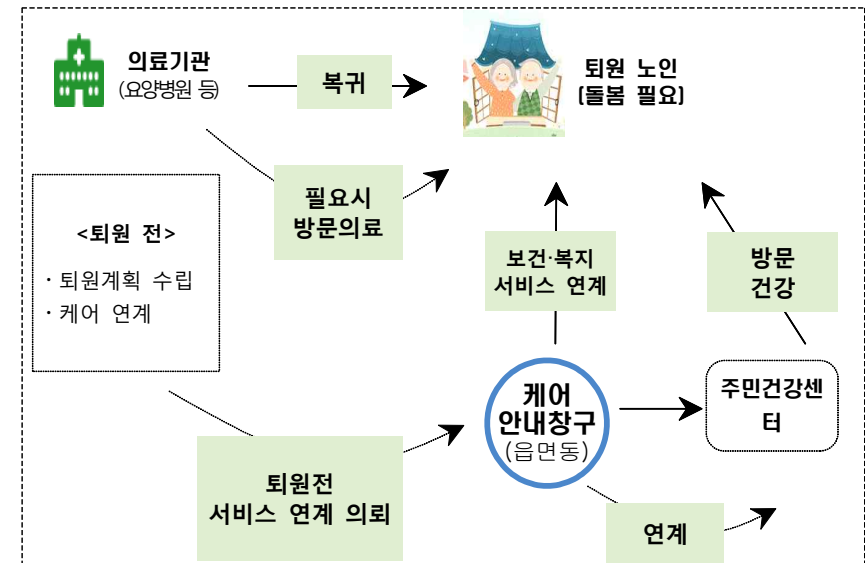


본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요소는 ①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② 방문 건강·방문 의료, ③ 재가 돌봄 및 장기요양, ④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이다. 각각의 요소들은 모두 지역사회 내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의 경우 노인이 필요한 케어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집수리를 통해 독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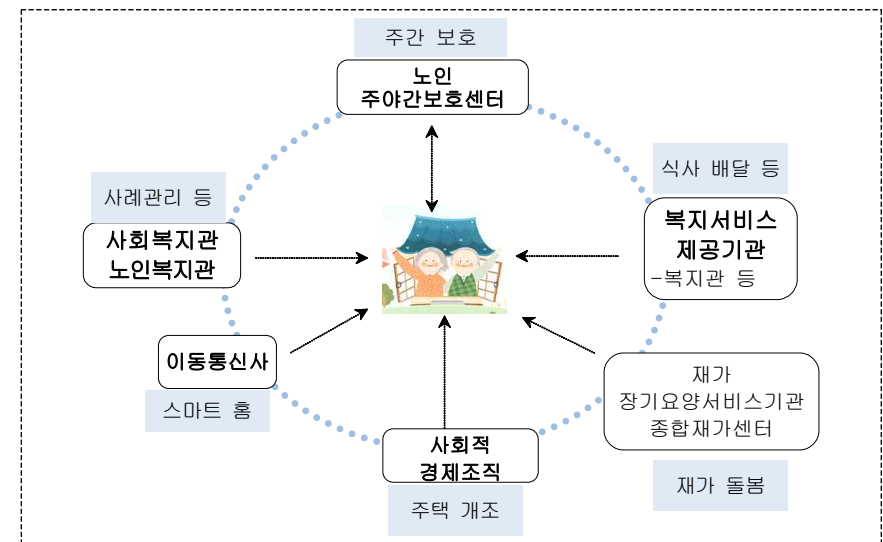
〈그림 IV-2-6〉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체계



〈그림 IV-2-7〉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서비스 체계



〈그림 IV-2-8〉 돌봄·요양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지원 체계



커뮤니티케어의 중요한 핵심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자율형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군구’는 공공과 민간 자원 연계 활성화로 종합적 케어를 제공하고, ‘읍면동’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통합 안내를 담당하게 되어 역할 분담이 조정된다. 특히 서비스는 민간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제공하되, 보건소나 사회서비스원(종합재가센터) 등을 활용·연계하여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법·제도 마련, 전달체계 연계·조정, 재정 전략,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책임지게 된다. 다만 돌봄에 대한 코디네이션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초기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지역주민의 욕구 및 사회서비스 자원 수급 상황 진단’이 필요하다. 지역주민 특성으로는 인구구성, 돌봄 대상자의 인구 규모와 비율, 돌봄 욕구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설치·운영 중인 사회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자원의 가용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자율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 역할에 있어서는 지자체 참여 동기 부여 및 예산 부담 경감 노력, 추진방향 설정, 사업운영 지침 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업내용을 사전에 마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지자체 역할로는 중앙정부 추진방향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시군구 역할로는 시군구 단위로 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역할을 할 지역케어회의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대상자 모집, 문의, 신청, 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케어통합창구 인력은 읍면동에 배치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단계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절적인 지역사회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파트너십 강화가 필수적이다. 각 시설들도 커뮤니티케어의 틀 속에서 이전까지와 다르게,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의 중간 형태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각자 특화된 전문성을 유지하되,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곳에서 서비스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실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2.2.5.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전달체계 분석 및 문화예술교육 활용 방안

커뮤니티케어의 전달체계에서는 현 정부의 포용적 복지 영역 내에서 소득보장을 제외한 건강·의료보장과 돌봄보장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즉,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인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 내에서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 기타

공공 및 민간기관의 역할을 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케어서비스 제공은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에 자리잡고 있는 민간기관을 연계와 협력의 방식으로 적극 활용하되 서비스의 신뢰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성의 지속적인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즉, 서비스는 민간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제공하면서도, 보건소나 사회서비스원 등을 활용·연계하여 공공성을 담보하게 된다.

먼저 중앙정부 단위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법이나 제도 마련, 전달체계 연계 및 조정, 재정 전략, 서비스의 질 관리 등을 중앙정부에 책임지되,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주도형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 지자체의 자율과 역량을 존중하여 돌봄 서비스의 조정은 지역별 차별성을 갖게 된다.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도 관련 법,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 등의 제·개정, 큰 틀의 재정전략과 서비스 전달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부처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이에 부응하는 조례 등을 제·개정할 수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향후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유사사업들의 연계·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지역으로의 이관 방식에 대한 큰 틀도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서비스 연계는 원칙적으로 지역자율형이며, 읍·면·동에서는 서비스의 신청 접수와 안내를 맡고, 시·군·구에서는 공공과 민간 자원 연계를 활성화하여 이용자의 욕구, 상태, 환경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서비스 영역별로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망 구축이 우선시 된다. 따라서 사회 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이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선적으로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 및 운영자의 모집과 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사회 복지·교육·문화·예술분야별 자원 발굴을 담당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는 민관 및 민민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교부, 서비스 질을 포함한 사업 운영 관리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이미 지역특성화 사업 등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 관련 자원을 보다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광역 단위에서는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노동 등의 영역으로까지 연계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것이 지역사회 내 대상자 발굴과 관련 서비스의 종합적 제공을 위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사사업의 중복 제공을 피하고 공간의 활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 측면에서도 다방면의 연계·협력은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 내 민간·공공기관,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중앙정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특성을 극대화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협력이 최우선시 되는 것이다.

V.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통합적 지역서비스 체계

1.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전달체계 개선방안
2.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사항

V.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통합적 지역서비스 체계

1.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전달체계 개선방안

앞서의 분석결과를 통해 부처 간 협력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그리고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을 전제로 한 지역 중심 전달체계 방안을 미시적 관점에서 사업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사업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각각의 제공기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개별적으로 기획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별로 목표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대상자 중심보다 생애주기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기보다는 대상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기획과 프로그램 제공 환경 조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1.1 학교 밖 청소년과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안)

현행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모두 현행 전달체계 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 다만 동 사업들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운영방식의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두 사업은 유사한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대안을 도출하였다.

1) 기초지자체 단위 연계 강화

전반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운영단체 부족, 전문 강사 부족 등으로 인해 자원의 연계가 쉽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사전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신청과 연관하여 운영단체 선정)와 참가 대상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연계가 일부 원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²²⁾.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는 운영상의 문제 발생 시 역할이 다원화(예: 지원금 교

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청소년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정책 방향 연구’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 학생들(1년간 문화예술교육 참여 여부 참여 59.6%, 미참여 40.4%)에 비하여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1년간 문화예술교육 참여여부를 질문한 결과는 있다(56.3%), 없다(43.0%)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일반 청소년은 최초 참여 권유자 비율이 가족

부기관, 프로그램 운영단체 및 시설 등)되어 있어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금 교부기관 담당자, 프로그램 운영단체 담당자, 교육시설 담당자, 프로그램 운영 강사들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동안 매월 1회 또는 2회 정기적인 회의를 추진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회의비를 반영하도록 한다.

2) 프로그램 운영의 유연성 확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1회 참여인원은 10~15명을 기준으로 하고, 운영여건은 60시수(20~30회, 회당 2~3시간 구성, 주1~2회)의 교육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정 형편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향이 있어 프로그램 참가인원을 10명 이상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이 발생된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쉼터는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중심으로 일시 청소년쉼터, 단기 청소년쉼터, 중·장기 청소년쉼터로 구분된다. 일시 청소년쉼터는 1일(24시간)에서 7일 이내 이용 가능하고, 단기 청소년쉼터는 3개월 단위로 2회 연장 이용 가능하고,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최대 3년이고, 1회(1년)에 한하여 연장하여 총 4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유형은 단기 청소년쉼터와 중·장기 청소년쉼터이다. 그러나 단기 청소년쉼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동일한 참가자를 유지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중·장기 청소년쉼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청소년쉼터의 설립목적과 연계되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시간적·공간적·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뿐이다. 즉, 중·장기 청소년쉼터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동일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접근하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운영인원은 운영기관과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최소인원을 제시하고, 운영기간도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회성, 단기형, 장기형 과정 등의 다양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쉼터, 해맑음센터, 비인가 대안학교 등(기타관련시설)의 특성과 상기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1회 진행인원은 5~10명 기준으로 변경하고, 60시수(20~30회, 회당 2~3시간 구성, 주1~2회)는 일회성 프로그램, 단기프로그램, 장기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3.5%)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은 가족(22.9%)이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1년간 참여한 프로그램은 대중문화(32.4%), 뮤지컬(16.55), 영화(UCC 제작) (15.3%) 순으로 나타났고, 참여하고 싶은 우선순위(1,2,3순위를 합한 결과)를 질문한 결과, 대중음악(35.5%), 대중무용(17.3%), 뮤지컬(16.5%)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와 청소년쉼터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아동·청소년 발달과정별 프로그램 기획·운영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관련, 아동·청소년들의 발달과정을 고려하면 초·중·고등학교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각자에게 맞는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개인 소질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심화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수인원으로 단기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소수인원으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지원보다는 장기지원(2년간 지원)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4) 지원방식의 다원화

현재는 1개 사업별로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예산 계획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지역적 특성(농어촌) 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전문성을 가진 개인 강사도 일부 선정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 현재 단체의 지원조건은 프로그램 내용의 타월성과 함께, 기관별 유형에 따른 시설·청소년 특성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목표, 내용, 접근방법 등에 적절히 반영 가능한 단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대중음악과 대중무용 단체가 지역에 없는 경우, 혹은 지역적 특성상(농어촌 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강사의 개인적 전문성을 고려하여 운영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려 가능할 것이다.

〈표 V-1-1〉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안)

구 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학교폭력치유센터
지원규모		25개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5개 청소년 쉼터	1개 해맑음센터
대상인원		1회 참여 인원 10~15명 기준 → 1회 참여 인원 5~10명 기준		
운영요건		<div><현행><ul style="list-style-type: none">60시수(20~30회, 회당 2~3시간 구성, 주1~2회)의 교육 지원임차를 통한 기자재 지원 일부 가능</div> <div><개선><ul style="list-style-type: none">일회성 프로그램<ul style="list-style-type: none">2시수 이상(20명 이상)의 교육 지원연 4회 운영단기 프로그램(1개월)<ul style="list-style-type: none">10시수(4회, 회당 2~3시간 구성, 주1회)의 교육 지원연 4회 운영장기 프로그램(1개월 이상)<ul style="list-style-type: none">10시수 이상(4회 이상, 회당 2~3시간 구성, 주1~2회)의 교육 지원연 2회 운영</div>		
운영단체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보조금 2회 분할 지급,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예산	○ 1개 사업 당 13.5백만원 지원 →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지원조건	<div><현행><ul style="list-style-type: none">프로그램 내용의 타월성과 함께, 기관별 유형에 따른 시설·청소년 특성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목표, 내용, 접근방법 등에 적절히 반영 가능한 단체 선정</div>		
		<div><개선><ul style="list-style-type: none">프로그램 내용의 타월성과 함께, 기관별 유형에 따른 시설·청소년 특성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목표, 내용, 접근방법 등에 적절히 반영 가능한 단체 선정지역적 특성상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대중 음악과 무용의 단체가 없을 경우 강사의 개인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 필요</div>		
협력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실무 운영 위원회 구성<ul style="list-style-type: none">구성: 운영기관별 사업 담당자, 운영단체 담당자 및 강사운영: 프로그램 운영 시 월 또는 주 1회 운영역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 모색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현행 방식 유지 권장		

〈표 V-1-2〉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 개선(안)

구 분		청소년시설
지원규모		○ 7개 내외 운영단체 선발, 청소년수련시설 선정기관(40개) 매칭
대상인원		○ 평균 15~20명 → 평균 5~10명
운영요건		<현행> ○ 60시수(20~30회, 회당 2~3시간 구성, 주1~2회)의 교육 지원 ○ 임차를 통한 기자재 지원 일부 가능
		<개선> ○ 초등학교 대상 - 20시수(10회, 회당 2시간 구성, 주1~2회)의 교육 지원 - 운영 기관별 다른 프로그램 4개 운영 - 연 2회 운영 ○ 중·고등학교 대상 - 60시수(20~30회, 회당 2~3시간 구성, 주1~2회)의 교육 지원 - 운영기관별 프로그램 2개 운영 - 연 2회 운영 ○ 임차를 통한 기자재 지원 일부 가능
운영 단체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보조금 2회 분할 지급, 경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예산	<현행> ○ 1개 프로그램 당 8백만원 지원(1개 단체 당 5개 내외 시설 담당)
		<개선> ○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지원조건	○ 프로그램 내용의 타월성과 함께, 기관별 유형에 따른 시설·청소년 특성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목표, 내용, 접근방법 등에 적절히 반영 가능한 단체 선정 ○ 지역적 특성상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대중음악과 무용의 단체가 없을 경우 강사의 개인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 필요
전달체계		○ 현행 방식 유지 권장

1.2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안)

지역아동센터는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생활권 내에 존재하는 취약계층 아동 돌봄 시설로 전국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2004년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 수와 이용아동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총 4,189개소가 운영되었으며 총 108,578명의 아동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아동의 특성 및 규모,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면 지역아동센터는 각 지역에서 문화소외계층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전달체제로 볼 수 있다. 현행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확대

지역아동센터의 문화예술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식 및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종사자의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의미 등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문화활동과 문화예술교육과의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낮은 것으로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지역사회 이용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되, 문화예술교육만의 특수성과 장점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의 수급 균형 제고

2017년 기준, 총 60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189개소의 지역아동센터의 약 14.3%에 해당한다. 지원받은 아동 수를 살펴보면 전체 지역아동센터 아동 수 108,578명 중 9,662명에 해당하는 아동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의 8.9%에 해당된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시설 수와 이용아동 수 대비 낮은 비율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아동들이 문화소외계층임을 고려하면 지역아동센터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양적인 확대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욕구가 있으나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해도 선정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 주도가 아닌 지역자율형으로 사업운영이 전환될 경우,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용 아동의 문화욕구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 수행에 보다 적극 참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간 격차 완화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아동 수를 비교한 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에 비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과 부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비율이 각각 2.4%와 2.1%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 23.4%, 전남 18.3%와 비교하면 전체 아동의 수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단위로 지역아동센터 아동현황과 문화예술교육 수요를 면밀하게 반영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V-1-3〉 사도별 지역아동센터 전체이용 아동 수 대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아동 비율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	12.4	6.7	13.6	16.7	3.9	8.3	5.6	2.4	2.2	23.4	4.8	4.5	18.3	9.3	6.7	13.6	11.9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재분석

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현행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모를 통해 운영단체를 선정 후 각 운영단체의 활동 가능 지역 및 프로그램 분야에 따라 교육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매칭하는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참여가 불가능하다. 또한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은 아동들의 실질적인 수요보다는 운영단체의 역량에 맞춰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신청 시 수혜를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참여 의지 등을 제시하는 절차 없이 시설 정보와 담당자 정보만으로 신청하도록 되어있어 특정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이 많은 시설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않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여부의 선정기준을 알 수 없어 이러한 절차상의 모호함이 지역아동센터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위주로 이미 선정된 프로그램을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지원해주시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개발과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의 발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선정과정에 있어 현재보다 세밀한 공개적인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수요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이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주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안)

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목적 구체화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전반적으로 여타의 문화 프로그램과 혼재되어 정체성이 불명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목적을 ‘창의성을 보유한 문화생산의 주체’ 양성으로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단순히 기존의 예술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넘어서서 이들 스스로 ‘창의성을 보유한 문화생산의 주체’로서 창의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적극적 의미의 “접근성”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사회(분배)정의의 실현’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원해야 할 교육대상은 우선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서 배제되고 있는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다. 지역단위에서의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현재와 같이 아동, 노인, 장애인을 교육 대상으로 하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를 위해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대상 시설 및 수혜자 전수 대상 교육 만족도조사 실시,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통합 운영시스템을 통한 신청, 접수, 선발, 배치, 사업관리, 평가관리 수행에 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2) 예술강사 교육 강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술강사는 문화적 차원의 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따라서 예술강사의 수요자 이해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술강사 대상 워크숍 및 연수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연수과정에 수요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역량 있는 예술강사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역량 있는 강사들이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연말에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경우 성과급을 조금이라도 지급하는 등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3) 교육 내용의 다양화: 지원시설 내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연속형/심화형 교육 개설 확대

강의식 교육과 더불어 자발적 학습동아리 운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예술강사를 통한 강의식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기반 학습동아리 형태의 교육²³⁾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

23) 학습동아리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과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에 대한 차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은 종전의 교육공급자(교육자) 중심의 교육이 아닌 국민의 자질 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형태의 수요자(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의미한다. 즉 개개인이

관의 프로그램으로 강의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장애인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장애인을 모아서 연 몇 회 정도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집행의 편리성이 존재하지만, 실제 위주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장애인복지관 기반 학습동아리로 운영하는 방안은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에 모여 동아리를 만들어 동아리 지원 요청을 할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이들 장애인 동아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장애인의 민주성은 증대 가능하다. 따라서 강의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복지관 기반 학습동아리 형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습동아리 형태의 경우 복지관은 학습동아리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수를 늘리기 보다는 심화교육의 신설, 기초반 교육 후 이수생 중심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판매 공간 제공 등 창업 또는 부업 활동에 대한 지원처럼 현재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외연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산지원이 대폭 확대된다면 교육 프로그램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 교육 이수 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⁴⁾ 결국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자본에 대한 확대된 접근성을 기반으로 이들의 창의성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적 경제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4) 수요자 참여 확대

교육 프로그램 선정, 지원 대상 기관의 심사 등에 수요자 대표가 참여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프로그램 제공자의 시각으로 사업의 운영과정과 성과를 평가할 필요도 있으나 수요자/이용자의 시각이 반영된 평가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년도 사업 계획을 위해서는 전년도 수요자 만족도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만족도는 주관적이고, 극단적으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지표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족도 평가를 기관 선정에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관에서의 만족도 조작 또는 유도 등이 우려되는 경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도 있다.

주체적 학습자로서 일생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가치·기술 등을 획득하여 모든 역할, 환경 및 상황에서 자신감과 창의성 및 즐거움으로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것이다. 배우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습자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존재로 인식되며 학습자의 입장에서 평생에 걸쳐서 교육의 문제를 다룸으로서 인간잠재력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 교육자 본위의 기존 교육관을 비판하고 학습자 본위의 새로운 교육관을 추구하는 대안적 교육론이 평생학습이다(김종수, 2011).

24)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해 교육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5) 지역사회 복지기관(유관사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지역사회 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복지기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을 희망하는 기관들과의 협업도 중요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또는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찾아내고 발굴하여(outreach) 지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관 내에서도 평생교육사업, 자체 문화사업 등을 통해 유사사업을 다수 실시 중에 있으나, 보다 많은 수요자들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할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차별화가 필요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기관 자체 프로그램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의 교육에 지원을 함으로써 차별성을 만들 수 있고, 또한 자체 프로그램과 동일 영역이라 할지라도 복지기관 자체 사업은 초급 정도의 교육을 담당하고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고급과정 교육을 담당하게 되면 차별성과 연계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b).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노인 복지기관들의 현황은 [부록 2]를 참조하면 된다.

6) 복지기관의 능동적 활동 독려

복지기관이 보다 더 능동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관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제공하는 예술강사의 스펙트럼이 넓어져 교육 내용의 범위가 현재보다는 확대되고 교육내용도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즉 미술교육으로 통칭하기보다 미술교육 내에서 세분화하여 교육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예술강사 섭외도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지원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교육 단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더라도 교통비 등 다른 지원 항목을 통해 농산어촌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7)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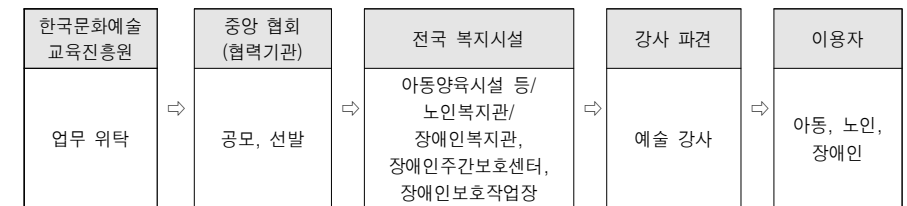
지역 규모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단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하는 원칙에 따라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위탁방식²⁵⁾을 다

25)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 대인서비스의 민간위탁과정에서는 서비스 구매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경쟁보다는 조정, 계속성, 협력 등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계약은 다른 많은 공공서비스 계약에서 보듯이 경쟁적으로 입찰하기보다는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게다가 이러한 서비스의 계약자는 비영리조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영리조직은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자체에 목표를 두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자의 이윤극대화를 지향하지 않는다(정광호·최슬기·장

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식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①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중앙의 관련 협회를 통해 위탁하는 방식, ②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광역 관련 협회를 통해 위탁하는 방식, ③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광역센터에 제정을 지원하고 광역센터에서 광역 관련 협회를 통해 위탁하는 방식, ④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복지기관을 직접 선정하는 방식, ⑤광역센터가 복지기관을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중앙의 관련 협회를 통해 위탁하는 방식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원 대상 기관 및 수요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도 중앙 관련 협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위탁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중앙의 관련 협회만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집행에 따른 비용이 적게 들고 행정절차가 간단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앙의 관련 협회는 단일한 평가도구에 따라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이성, 창의성 등을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현재 장애인 복지기관 지원 사업처럼 수요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원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로 확대하였음에도 중앙의 장애인복지관협회와 위탁 계약을 맺음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외 다른 시설인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림 V-1-2〉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 모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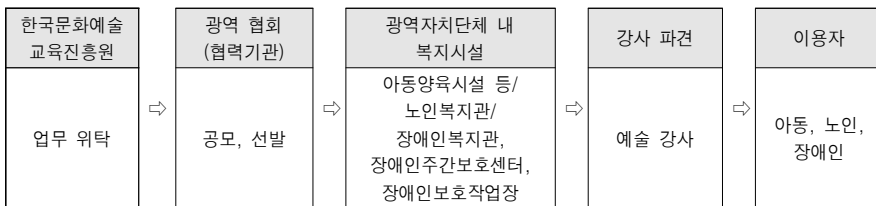
둘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광역 관련 협회를 통해 위탁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 방식은 모형1에 비해 위탁절차가 복잡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 기관 및 수요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도 광역의 관련 협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 또 광역 관련 협회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지원 대상 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광역단위별로 다른 평가기준의 적용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앙 관련 협회에서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에 비해 광역 관련 협회가 선정하는 경우 대상기관 선정 등에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한다.

또한 모형1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 기관을 다변화한 상태에서 그 중 대표적인 협회만 위탁 기관으로 선정할 경우 다른 유형 시설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이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윤희, 2009).

17개 시·도별로 노인복지관협회와 장애인복지관협회가 존재하여야 한다. 노인복지관협회의 경우 현재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광역 노인복지관협회가 존재하고, 장애인복지관협회의 경우 세종²⁶⁾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광역 장애인복지관협회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 협회로의 위탁 시행이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세종시와 제주도의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세종시의 경우 아직 복지시설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협회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대전협회에 위탁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경우 노인복지관 지원 사업을 제주 장애인복지관협회에 위탁 또는 전남 노인복지관협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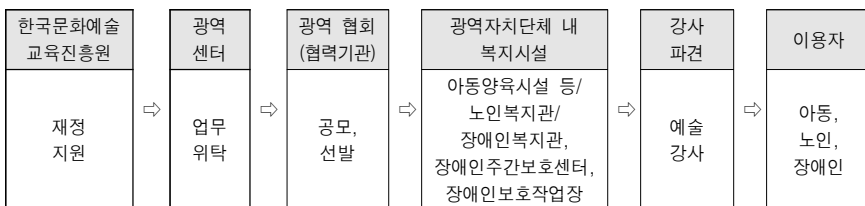
〈그림 V-1-3〉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 모형2



셋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광역센터에 재정을 지원하고 광역센터에서 광역 관련 협회를 통해 위탁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식의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광역센터 운영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광역센터의 사업 방식에 대해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광역센터가 지역의 특이성을 더 많이 파악하고 반영하여 관련 협회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 방식의 장·단점은 모형2와 유사하다.

모형2와 모형3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별로 노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협회, 아동복지협회 등에 위탁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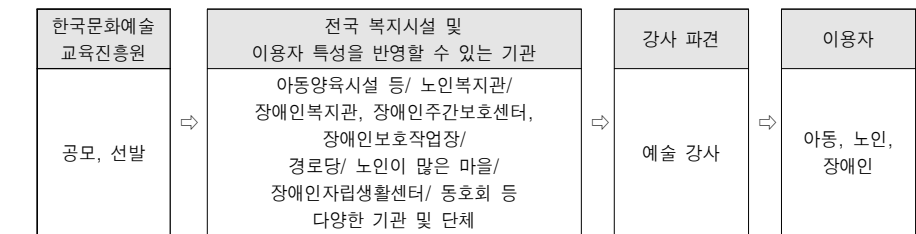
〈그림 V-1-4〉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 모형3



26) 세종시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이 1개소만 존재하기 때문에 광역협회는 대전시와 세종시를 합쳐 대전·세종 장애인복지관협회가 설립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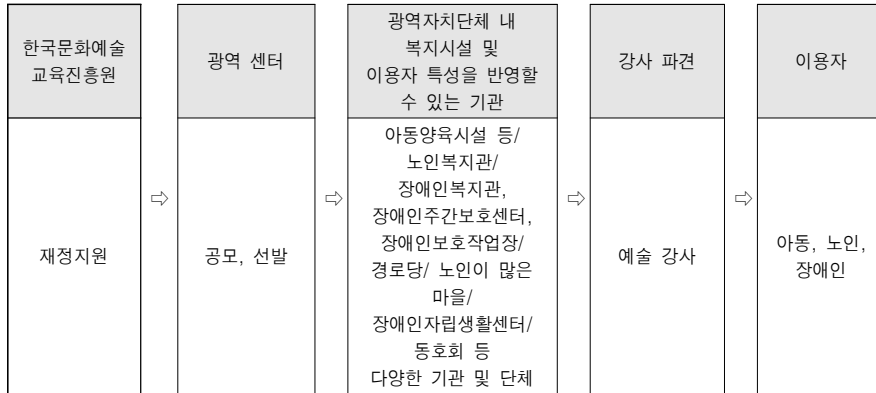
넷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복지기관을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 방식의 경우 협회 소속 또는 협회에서 선발할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소외계층 중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집단이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노인은 노인이 많은 마을 단위로의 지원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을 문화소외계층으로 한정한다고 하여도 그 폭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걸친 복지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표면적인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여 재정을 지원할 확률이 높다. 또한 획일화된 평가 기준 등에 따라 지역사회와 수요자의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원 사업을 직접 관리함에 따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V-1-5〉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 모형4



다섯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광역센터에 재정을 지원하고 광역센터에서 복지기관 등 지원대상을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 방식은 모형3과 마찬가지로 광역센터 사업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광역센터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다면 지역의 특성 및 수요자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모형4와 마찬가지로 협회 소속 또는 협회에서 선발할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소외계층 중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집단이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광역센터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걸친 복지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여 재정을 지원할 확률이 높다.

〈그림 V-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 모형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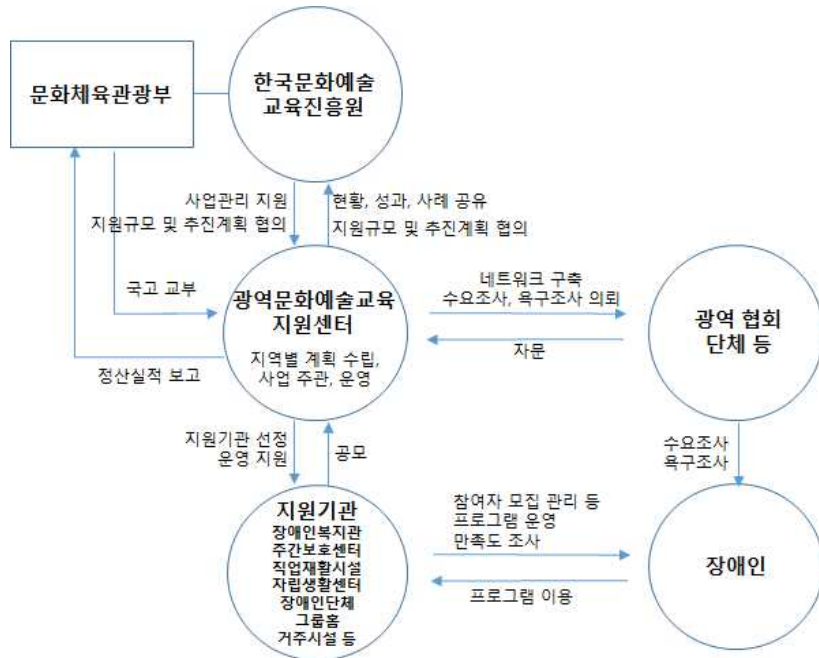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5개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하였을 경우, 지역의 특성에 맞추고 지역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형3 또는 모형5의 적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중앙 진흥원에서 광역센터를 지원하고, 광역센터에서 복지기관 등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역센터가 직접 선정할 것인지, 광역장애인복지관협회, 광역노인복지관협회 등 광역 거점 협회를 통해 지원기관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화소외계층 중 지원대상을 보다 확장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관련 협회에 위탁을 주기보다는 모형5와 같이 광역센터가 직접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관련 협회를 통해 지원할 경우 현재처럼 협회 소속 기관에 지원이 한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기관 지원 사업 전달체계 모형별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결과 중앙 진흥원이 광역센터에 재정을 지원하고 광역센터에서 복지기관 등 지원대상을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문화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고려할 때, 중앙 부처 중심의 전달체계에서 지역 생활권 단위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과도 부합할 수 있다. 보다 큰 틀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 강화, 지역문화의 분권과 고유성 유지를 통한 지역문화의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1-4〉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 모형별 장·단점

전달체계 모형		장점	단점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중앙 협회(협력기관) → 전국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협회의 전문성 활용 가능 • 집행 비용 적음 • 행정 절차 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이성, 창의성 반영 어려움 • 지원 대상 기관의 제한
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광역 협회(협력기관) → 광역 내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협회의 전문성 활용 가능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대상 기관 선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1에 비해)위탁 절차 복잡 • 행정 비용 증가 •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 지원 대상 기관의 제한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광역센터 → 광역 협회(협력기관) → 광역 내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협회의 전문성 활용 가능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대상 기관 선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광역센터 업무 관리의 어려움 가능성 존재 •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 지원 대상 기관의 제한
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전국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기관 확장 가능(마을 단위, 동호회 등 가능) • 교육의 질 높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선정의 어려움, 표면적 서류심사 등의 의존 가능성 높음 • 획일화된 평가 기준 적용 시 지역 특성, 수요자 특성 반영 어려움
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광역센터 → 광역 내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기관 확장 가능(마을 단위, 동호회 등 가능)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대상 기관 선정 가능 • 광역센터의 기획력 발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광역센터 업무 관리의 어려움 가능성 존재 • 광역센터의 기획력이 떨어질 경우 표면적 서류심사의 의존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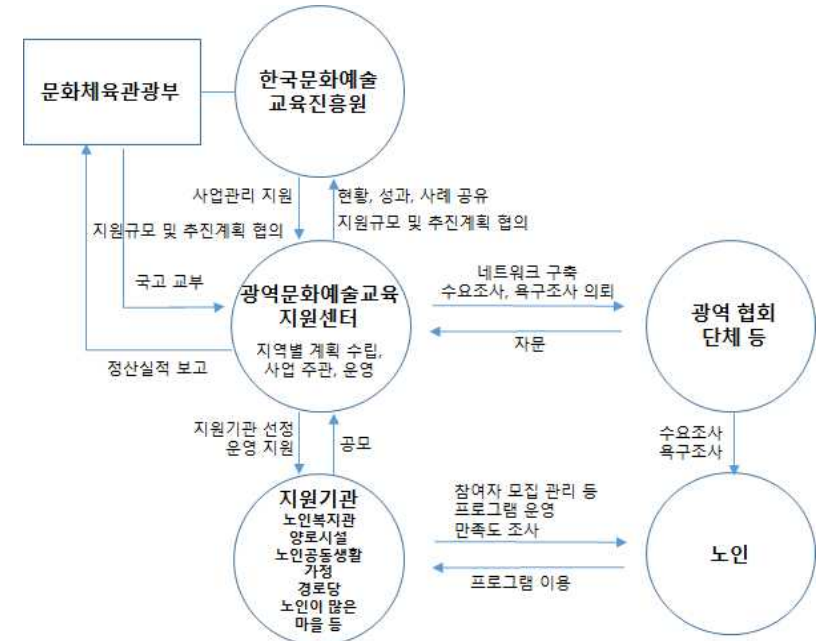
모형5에 따라 운영체계를 모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진흥원)과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광역센터)는 지원규모 및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며 진흥원은 광역센터의 사업 관리를 지원하고, 광역센터는 현황, 성과, 사례를 진흥원에 공유한다. 국고를 교부받은 광역센터는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주관하고 운영한다. 이 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획력이 필요하다. 기획 시 광역협회,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문을 받고, 필요시 협회, 단체 등에 수요조사 또는 욕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광역센터는 지역별 계획에 따라 지원기관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현재 지원기관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에 한정되어 있지만, 광역센터가 직접 공모할 경우 지원기관으로 3개 기관 외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장애인단체,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장애인거주시설 등까지도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지원기관은 장애인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림 V-1-7〉 장애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 모형



마찬가지로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경로당, 또는 노인이 많은 마을 등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기관 지원사업 추진 모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그림 V-1-8〉 노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 모형



2. 장애인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사항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추가적인 편의시설 제공 또는 보조인력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기관 등의 이용시설에서 별도로 지원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각 지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각종 장애인 대상의 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1 대상시설 이용자와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 방식 운영

장애인복지관 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방식에 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이 확대되고, 비장애인의 인식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관 사업이고, 노인복지관 사업 일지라도, 프로그램 당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노인과 성인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방식으로서의 운영이 바람직하다.

2.2 수요자의 특성에 맞춘 교육 진행 -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물리적 수업환경(공간면적) 개선 등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먼저 2016년부터 장애인복지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인 인건비를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관 교육의 경우 접근성 문제나 학습 환경 문제로 인해 교육 참여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 이동 및 공구이동 등에 대한 학습지원, 화면해설 등 학습지원, 수화통역서비스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발달장애인도 교육에서 배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 및 학습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배제 혹은 어떠한 방해 요소로 인해 교육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시민교육의 경우 접근성 문제나 학습 환경 문제로 인해 교육 참여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예산 편성에서 강사비, 프로그램비 등과 더불어 반드시 지원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활동보조인을 위한 인건비, 수화통역 인건비, 이동 및 공구이동 등 지원을 위한 학습지원인 인건비 등 무장애 학습 실현을 위한 배리어프리 서포터즈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실질적인 교육 및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보조인 인건비 지원을 넘어 각종 지원

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창의성을 보유한 문화생산의 주체'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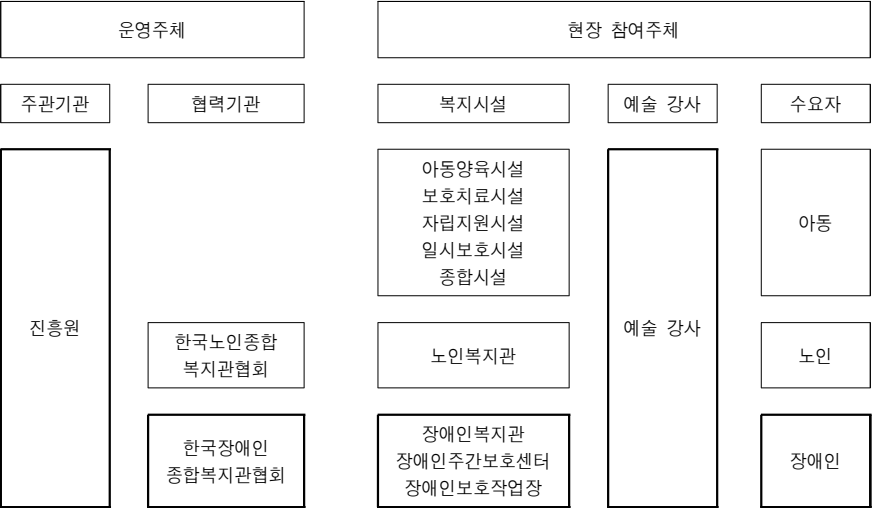
2.3 교육 장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각 기관의 교육장뿐만 아니라 다른 제3의 장소(가령, 도서관, 대학 강의실, 구민회관, 주민센터, 지역사회의 종교시설이나 여타 교육기관등과 같은 자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시민들까지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사회통합이 보다 촉진될 수 있고, 모든 시민이 함께 토론하고 학습함으로써 보다 장애인, 노인 등 문화소외계층에게만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학습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어 매우 바람직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2.4 강사 및 수강생 대상 인식개선 또는 인권교육의 의무화

교육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비장애인 대상 장애인식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일반 성인이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노인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들과의 관계형성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당사자가 강사로써 강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강의 내용에는 사회적 모델에 따른 장애개념, 온정주의적 사고에 의한 지원이 아닌 자립생활 모델에 따른 지원, 장애인 인권, 지원의사결정 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강사양성 과정에서 문화소외 계층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림 V-2-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종 (2012). 한국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방향. 『보건사회연구』, 32(2), 41-76.
- 김종수 (2011). 평생교육에 관한 인식 및 활성화 전략방안 연구-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1(3), 79-102.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연보
- 노대명 (2006).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제16권 제1호(통권 57호) pp.115-146.
- 방하남, 강신욱 (2012). 취약계층의 객관적 정의 및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자료 중 발췌·요약.
- 보건복지부 (2017).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 등록 현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2018).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8).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8).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2013년 아동복지실태조사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
- 서정아, 권해수 (2010).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연우, 김종서, 허건, 강철상. (2017). 2017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 및 타당성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이동석 (2014),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와 과제 - 재정지원방식, 공급주체의 성격, 품질관리기제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연구, 5(1), 5-44.
- 이봉주, 김용득, 김은정, 김남희, 서정민 (2012).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장명립, 이윤진, 이정립, 이미화, 전해정, 민현숙, 박수연, 이세원, 김주연, 정주희, 송윤정 (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육아정책연구소.

정광호, 최슬기, 장윤희 (2009).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과정 분석 : 위탁과 바우처 방식의 비교.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231-255.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7). 2017년 탈북학생 주요통계 자료

최종혁, 이연, 유영주, 안태숙 (2010).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기능: 문화복지실천가 대상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1호. pp.291-31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2012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a).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b). 2015 사회문화예술교육중장기 사업전략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a). 2015년 연차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b).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 2016년 연차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내부자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1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지역아동센터) 교육시설 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문화소외계층] 수요 조사 연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11). 2011 전국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활동 프로그램 실태 및 욕구조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12). 2012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태 및 욕구조사: 장애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황진구, 이해연, 유성렬, 박은미 (201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화누리 홈페이지. www.mnuri.kr. 다운로드일 (2018.11.29.)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www.rcda.or.kr.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다운로드일 (2018.11.29.)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홈페이지. 다운로드일 (2018.11.2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다운로드일 (2018.12.1.)

통계청 KOSIS 홈페이지. 다운로드일 (2018.12.10.)

Steel, R. (2004). Involving marginalised and vulnerable people in research: A consultation document. <http://invo.org.uk/>

부록

부록 - 유형별 복지기관, 이용자 현황 및 협회 현황

□ 유형별 복지기관 및 이용자 현황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을 지원하는 복지기관 유형과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됨(노인복지법 제31조).

〈부표 1-1〉 노인복지시설 유형

구 분		내 용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 활동·노인건강유자·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

구 분		내 용
단기보호서비스		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등을 위한 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다만 사회복지관의 경우 장애인, 아동 등도 이용할 수 있지만 노인 이용자가 많으므로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포함시킴.

〈부표 1-2〉 시·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사도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재가노인 복지시설
	시설 수	2016연말 기준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시설 수	시설 수
서울	16	1,052	526	14,230	76	98	507
부산	6	263	114	4,567	25	53	195
대구	7	274	258	6,171	15	26	163
인천	25	495	345	9,801	17	20	123
광주	3	119	101	2,713	8	18	197
대전	8	112	119	4,053	7	21	113
울산	2	52	44	1,392	12	8	52
세종	4	72	9	293	-	2	8
경기	130	3,239	1586	41,791	56	77	518
강원	30	383	297	7,568	13	18	182
충북	38	565	276	6,948	16	13	82
충남	20	261	284	7,569	15	19	103
전북	18	486	227	6,317	23	17	214
전남	35	677	298	7,173	29	15	258
경북	32	773	375	10,285	17	16	199
경남	17	688	240	9,136	19	30	211
제주	2	79	64	3,072	2	9	43
계	393	1,052	5163	142,079	350	460	3,168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 통계연보

2)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부표 1-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

구 분	내 용
□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수화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구 분	내 용
장애인 근로사업장	•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당사자 단체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도 시설 수 및 거주인원, 거주인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부표 1-4〉 시·도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시·도	시설 수	거주 인원	장애유형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자폐성	기타
서울	284	3,971	664	210	47	2,691	359
부산	70	1,428	186	11	2	1,205	24
대구	49	1,473	275	11	9	1,130	48
인천	72	1,095	152	57	14	839	33
광주	72	985	206	52	12	699	16
대전	69	1,188	204	63	3	911	7
울산	24	645	72	24	37	507	5
세종	4	163	18	1	1	142	1
경기	311	6,334	947	137	67	4,953	230
강원	67	1,518	197	80	3	1,193	45
충북	81	1,982	302	143	62	1,458	17
충남	60	1,833	263	-	6	1,539	25
전북	74	1,781	191	48	19	1,502	21
전남	52	1,282	208	27	13	1,024	10
경북	88	2,747	380	22	10	2,310	25
경남	96	1,952	315	21	9	1,567	40
제주	32	603	74	5	1	462	61
계	1,505	30,980	4,654	912	315	24,132	967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 통계연보

○ 장애인 이용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부표 1-5〉 시·도별 장애인 이용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시·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의료재활시설
	시설 수	이용 인원	시설 수	시설 수	시설 수
서울	124	4,081	46	117	6
부산	32	944	14	55	1
대구	39	1,047	6	41	1
인천	28	854	10	34	2
광주	22	677	7	28	-
대전	19	543	7	40	2
울산	14	289	4	32	-
세종	3	77	1	1	-
경기	98	2,960	32	113	-
강원	33	778	10	16	1
충북	21	760	12	15	1
충남	18	587	14	12	1
전북	19	504	12	29	-
전남	17	402	18	25	-
경북	38	1,136	20	40	1
경남	48	1,142	13	47	2
제주	9	350	5	18	1
계	582	17,131	231	663	19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 통계연보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어 장애인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자립생활센터에서도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지원도 바람직함.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센터의 운영 철학 등에 따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약칭 한자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약칭 한자협)에 각각 소속되어 있음. 이에 따라 두 중앙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부표 1-6〉 시·도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현황

(단위: 개소)

시·도	한자연 소속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협 소속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합계
서울	28	20	48
부산	10	5	15
대구	2	2	4
인천	3	3	6
광주	5	4	9
대전	6	-	6
울산	4	-	4
세종	1	-	1
경기	23	14	37
강원	1	5	6
충북	5	3	8
충남	6	-	6
전북	1	3	4
전남	4	5	9
경북	1	2	3
경남	6	9	15
제주	2	-	2
계	108	75	183

자료: 한자연 홈페이지, 한자협 홈페이지

3) 아동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아동복지법 제52조).

〈부표 1-7〉 아동복지시설 유형

구분	내용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구 분	내 용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 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보호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효과적인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관

이 중 아동의 이용이 많고 문화예술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로 이에 따라 이 세 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부표 1-8〉 시·도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사도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시설 수	2016연말 기준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일일 이용 인원
서울	36	2,453	60	312	414	11,058
부산	19	1,214	35	176	204	4,653
대구	18	655	15	80	199	4,905
인천	9	535	16	90	183	4,498
광주	10	537	28	169	301	7,970
대전	12	397	17	101	145	3,872
울산	1	121	8	44	55	1,271
세종	1	37	1	5	12	323
경기	26	1,315	129	741	763	21,111
강원	8	329	23	124	168	4,350
충북	11	529	27	135	184	4,959
충남	13	617	25	126	226	6,098
전북	14	675	46	234	286	7,125
전남	21	1,108	36	187	384	9,944
경북	15	744	13	70	258	6,417
경남	24	916	26	137	259	6,396
제주	5	266	5	27	66	1,718
계	243	12,448	510	2,758	4,107	106,668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 통계연보

□ 유형별 복지기관 협회

유형별 복지기관 협회의 중앙 및 지회는 다음과 같음.

〈부표 1-9〉 시·도 노인복지관협회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중앙	한국노인복지관협회	02-702-6080
서울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02-812-8065
인천	인천동구노인복지관	032-761-3677
경기	신곡노인종합복지관	031-840-5303~4
부산	영도구노인복지관	051-253-2590
대구	달성군노인복지관	053-766-6011~4
광주	광주공원노인복지관	062-653-3374
대전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042-627-0767
충북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043-652-3457
충남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	041-631-0960
전북	금암노인복지관	063-253-5728
전남	고흥군노인복지관	061-830-4200
경북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053-813-1102
경남	금강노인종합복지관	055-221-8445
울산	선암호수노인복지관	052-268-6080
강원	속초시노인복지관	033-636-3373

자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 <http://www.kaswcs.or.kr/>

〈부표 1-10〉 시·도 장애인복지관협회

구분	기관명
중앙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대구	대구광역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대전·세종	행복한우리복지관
인천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울산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강원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충북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충남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전북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전남	보성군장애인복지관
경북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남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자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 <http://www.kaswcs.or.kr/>

<부표 1-11> 시·도 아동복지협회

구분	시설명	주소(우편번호)	연락처
중앙	한국아동복지협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456번지) 사회복지회관 401호	02-790-0818~9
서울	성남보육원	충남 서산시 쌍연북 3길 33(31697)	041-655-2231
부산	새들원	부산시 동래구 금정마을로 83(온천동)(47718)	051-555-1104
대구	에덴원	대구시 남구 호서길 8(42506)	053-471-1613
인천	보라매보육원	인천 동구 화도진로 126(22511)	032-772-4450
광주	광주신애원	광주 남구 송암로 132(61738)	062-674-0526
대전	늘사랑아동센터	대전시 서구 도솔로 267번길 8(35288)	042-533-4078
경기	경기도아동상담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94 명문빌딩 2층(16268)	031-252-2566
강원	강릉자비아동복지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경로 2267번길-19(22545)	033-642-3761
충북	해능보육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2길 68-14(28110)	043-260-1590
충남	삼신보육원	충남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664(33176)	041-836-6049
전북	고창행복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16-13(56427)	063-564-2150
전남	순천SOS어린이마을	전남 순천시 용수동길 111(57921)	061-752-7566
경북	영천희망원	경북 영천시 한방로 195-6(38897)	054-772-3228
경남	진해희망의집	경남 창원시 진해구 백주로6번길 6(51681)	055-546-2802
제주	홍익아동복지센터	제주 제주시 화삼로 145(63323)	064-755-0844

자료: 한국아동복지협회 홈페이지 <http://www.adongbokji.or.kr/>

<부표 1-12> 시·도 사회복지관협회

구분	사무국 주소	전화번호
중앙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710호	02-719-8939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7층	02-3789-9060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2, 302호 (거제동,로원타워)	051-507-5575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37-14 분리종합사회복지관 내	053-563-1007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447 상산종합사회복지관 내	032-822-8939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중문로 55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내	062-266-3853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3호 대전사회복지회관 내	042-544-3626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07번길 13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내	052-260-2981
경기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55 대야종합사회복지관 내	031-311-4482
강원	강원도 동해시 전천로 273-10 웰드비전 동해종합사회복지관 내	033-533-8247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90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내	043-288-1428
충남·세종	충남 당진시 송산면 장갈길 15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내	041-353-7300
전북	전라북도 김제시 금성로 93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내	063-545-1923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길 84 순천종합사회복지관 내	061-741-3062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미길 31-1 확산종합사회복지관 내	054-248-6165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49 내서종합사회복지관 내	055-231-8017
제주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12길 15	064-784-8281

자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http://kaswc.or.kr/>

<부표 1-1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관명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37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의대로 47	02)330-2880	www.kywa.or.kr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02)849-0404	www.sy0404.or.kr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1	051)852-3461-2	www.busan youth.net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41934)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81길 66-5	053)659-6210	www.daegu youth.net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3층	032)833-8057-9	www.in youthvol.net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61477)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26번길 13-3번지 광주흥사단2층	062)234-0755-6	www.gjcenter.net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201(만년동)평송청소년문화센터3층	042)488-0732-3	www.tjyc.net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44660)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052)227-0606-7	www.yesulsan.kr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30027) 세종특별자치시 마은로 284 2층(고운동, 고운동복합커뮤니티센터)	044)864-7935	www.sjyouth.or.kr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63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2층	031)232-9383-5	www.gysc.or.kr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6428)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89 원주시민복지센터 4층	033)731-3704	www.gwysc.or.kr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851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도청 제3별관	043)220-6821-2	www.cbyouth.net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311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4층(두정동 진암빌딩)	041)562-9003	www.cnyouth.or.kr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5504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마리로 203 4층	063)232-0479	www.jb0479.or.kr
(재)전남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4층	061)280-9050-4	www.jnyouth.or.kr
(재)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36708)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0	054)850-1004	www.we7942.or.kr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5141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청소년관(사림동, 경남대표도서관)	055)711-1389	www.gnyouth.net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862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7길 4 (이도2동)	064)751-5041-3	www.jeju youth.net

출처: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ywa.or.kr/>)